

2011년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서울 1기 연수 교재

-
- 연수일정 및 장소
 - 서울 1기 : 2011년 7월 25일(월) ~ 7월 29일(금)
 - 서울 2기 : 2011년 8월 1일(월) ~ 8월 5일(금)
 - 연수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연수대상 : 전국 중등 교사
 - 주 최 : 동북아역사재단
-

2011년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일정표

o 서울 제1기 : 2011.07.25. ~ 07.29. (09:30 ~ 16:20, 5일간), 재단 대회의실

날짜	교시	0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점심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09:00 ~09:20	09:30 ~10:20	10:30 ~11:20	11:30 ~12:20	12:30 ~13:20	13:30 ~14:20	14:30 ~15:20	15:30 ~16:20	16:30 ~17:20
제1일 (7월 25일)	등록 / 개강식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해설 (1강)			과목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강)				
	담당자	조철수(교육과학기술부)			강사	박중현(양재고)				
제2일 (7월 26일)	과목	근세 일본의 전개와 동아시아 (3강)			과목	동아시아의 은유통 (4강)				
	강사	박성기(하남고)			강사	한명기(명지대)				
제3일 (7월 27일)	과목	동아시아 국제 관계 (5강)			과목	동아시아 속의 북방민족 (6강)				
	강사	김택민(고려대)			강사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제4일 (7월 28일)	과목	서구와 동아시아의 만남(7강)			과목	한일교류사의 시각 (8강)				
	강사	김정인(춘천교대)			강사	손승철(강원대)				
제5일 (7월 29일)	과목	베트남 근현대사와 동아시아 (9강)			과목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소농경영 (10강)			수료 식	
	강사	노영순(한국해양대)			강사	안병우(한신대)			담당 자	

◆ 목 차

제 1 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해설	조철수(교과부)/ 1
제 2 강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중현(양재고)/ 13
제 3 강 근세 일본의 전개와 동아시아	박성기(하남고)/ 33
제 4 강 동아시아의 은유통	한명기(명지대)/ 41
제 5 강 동아시아 국제 관계	김택민(고려대)/ 49
제 6 강 동아시아 속의 북방민족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57

제 7 강 서구와 동아시아의 만남	김정인(춘천교대)/ 63
제 8 강 한일교류사의 시각	손승철(강원대)/ 75
제 9 강 베트남 근현대사와 동아시아	노영순(한국해양대)/ 85
제 10 강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소농경영	안병우(한신대)/ 107

※ 본 교재는 교원연수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사’ 개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조철수

차 례

- | | |
|------------------------|---------------------|
| I. 『동아시아사』 개설의 배경 및 경과 | II.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요 |
| III. 『동아시아사』 개설의 의의 | |

I. 『동아시아사』 개설 배경 및 경과

1. 한·일 역사갈등

□ 2001 일본 역사 왜곡

○ 발단

-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창립
- 2001년 ‘새역모’에 의한 후소샤 중학교 교과서 일본 문부성 검정 통과

○ 경과

- 정부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반장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구성
- 국회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시민단체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설립(→‘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로 개칭), 일본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우익 교과서 불채택운동 추진
-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관련내용 수정요구(5.2)
 - 후소샤 25개항, 기타 7종 10개항(건) 수정 요구
- 일본 문부성 회신
 - 후소샤 자체 수정 건, 문부성 수정 권고 건

※ 일본 정부의 답변 ('01. 7. 9 : 학설상, 검정제도상 수정 불가)

<후소샤 자체 정정('01. 7. 2) : 5개 항목>

- ① 임나일본부설 : 고구려 남하정책에서 야마토조정이 백제와 신라를 지원했다→ 신라 부분 삭제
- ② 중국의 ‘복속국’ →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수정

- ③ 전근대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 : 복속→ 강력한 정치적 영향
- ④ 강제병합 : 국내에서 '병합수용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삭제
- ⑤ 한국전쟁 : 종래 국경선 북위 38도선 → 북위 38도선

<일본 정부 검토 정정 : 2개 항목 수정 권고>

- ① 후소샤 교과서의 임나일본부설 항목(7.2 후소샤 자체 수정)
- ② 오사카서적의 고대사 연표(BC 10세기경의 청동기시대 누락)

○ 결과

- 후소샤 교과서 0.039% 채택
- 한일역사공동연구기구 구성 합의(10.15)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사무국 설치(2002.3.15~2010.)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2002.5~2005.5)
- 역사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확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관시정연구실'→'국제교육정보연구특임본부'로 개편(200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설치)
 - 예산 증액 : 1억→20억

□ 2005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 발단

- 2005년 후소샤 중학교 교과서 일본 문부성 검정 통과

○ 경과

-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구성
- 한·일 시민단체 우익교과서 불채택운동 추진

○ 결과

- 후소샤 교과서 0.39% 채택
-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구성 합의(2004.12.17)→운영(200)
 - 제1분과(고대), 제2분과(중·근세), 제3분과(근·현대), 교과서분과
 -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결과보고서 한·일 동시 출간

2. 한·중 역사갈등

□ 2003 한·중 역사갈등

○ 발단

- '02.2 중국사회과학원, 5년 기한의 '東北工程' 착수(비공개)
- '03.6 중국 '光明日報', "고구려는 중국의 중원왕조와 연속 관계를 유지한 소수민족정권" 게재

○ 경과

- 중국 고구려사왜곡대책협의회('03.10.30)
- 시민단체 긴급보고회('03.10.31)
- 중국, 북한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동시 등재
- 중국역사왜곡대책반 구성
- 외교전략팀(NSC 주관), 학술대응팀(동북아시대위원회 주관), (필요시)통합회의
- '고구려연구재단' 설립('04.3.1)
- '04.4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고구려사' 명칭 삭제

○ 결과

- 한·중 구두양해사항 합의('04.8)
 - ※ 보다 체계적인 학술적 대응을 위해 '06.8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통합

□ 2006 한·중 역사갈등

○ 발단

- 중국 '동북공정' 결과물 일부 공개

○ 결과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 동북아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 기획단
- 2006 역사교육 강화방안 수립
- 한·중 정상회담('06.10.13)

3. 유럽과 동아시아의 역사화해

□ 유럽의 역사화해(교과서협력)¹⁾

○ 독·프 교과서 협력(1935~현재)

- ① 1935~1949 : “1935년 권고안”→나치의 집권, 2차 대전
- ② 1950~1967 : “1951년 권고안”
- ③ 1981~1987 : “1987년 권고안”(GEI)
- ④ 1990년대 : 『20세기 독일과 프랑스』, 『산업화와 산업화지역』 출간
- ⑤ 2003~2006 : 『독·불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사용(2006)

○ 독·폴 교과서 협력(1972~현재)

-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및 지리 교과서를 위한 권고안” 발간(1997)
- 『독·폴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2007 편찬, 2008 사용)

○ 독·체코 교과서협력(1968~)

○ 독·이스라엘 교과서협력(1960년대~)

○ 『새유럽의 역사』(1992초판, 1997 개정판)

- 유럽 12개국의 역사학자 14명이 4년 동안 공동 기획·집필
- “역사 교과서의 유럽 통합”

<게오르크-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

(Georg-Ecker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extbook)>

- 1951.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칸트대학교의 게오르크 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 설립
 - 1973. 그의 사후 그를 기념하여 ‘게오르크 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로 개칭
- 설립배경
 - 2차 세계대전 이후 교과서를 통해 주변국가와의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보장 기여 위해 국가간의 교과서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상대국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밝혀내고 수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목표
 - 1951년 니더작센주 교육대학 Georg Eckert 교수가 설립
 - 1975년 법제화 (니더작센주 교육부 소속)
- 조직 및 예산
 - 인적구성 : 이사회, 소장 외 30여명으로 구성
 - 16개 중 13개 주가 공동 분담, 학술회의 예산은 연방 외무성 부담
- 사업내용

1) 강택구·박재영 외, 『세계의 역사교과서 협의』, 백산, 2008 참조

- 교과서(특히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 및 국제적인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수업 자료 발간
- 세계 100여 개국의 15만여 권의 역사·사회교과서 수집 활용
- 독일 유네스코위원회와 사업 연계

□ 동아시아의 역사화해

- 제1~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정부차원의 역사대화
 - 2기에 '교과서위원회' 운영
 - 공동연구보고서('공동주제'에 대한 '개별논문')
 - '권고안' 미작성
- (민간)공동역사 부교재 편찬
 - 『한일 교류의 역사』(1998~2007, [한]역사교과서연구회·[일]역사교육연구회)
 - 『미래를 여는 역사』(2002~2005,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2002~2005, 한일여성공동교재편찬위원회)
 - 『마주보는 한일사』 I·II(2002~2006, 전국역사교사모임·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 『조선통신사』(2003~2005, 대구역사교사모임·히로시마교직원조합)
- 학술회의·행사(※ 참석 바람)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2002~, 10회)
 - [한]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포럼실행위원회, [중]인권발전기금회·사회과학원근대사연구소·사회과학문헌출판사
 - 매년 한·중·일 3국 순환개최
 - 『미래를 여는 역사(후속편)』 개발(~2011)
 - '세계역사NGO대회'('07, '08, '09, '11)
 - 1~3회까지 36개국 400여명 참가
 - 4회(8.18~8.22, 연세대) : 한·중·일 청소년 공동역사교실, 개막 심포지엄("동아시아 미래를 향한 역사교육"), 국제 역사교육 전문가 심포지엄 등
 -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2002~)
 - 주최 : [한]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캠프실행위원회, [중]사회과학문헌출판사
 - 10회 : 8.4~8.9(인천대학교)

4. 역사교육 강화방안

□ 2005 역사교육 강화방안

- 발단
 - 7차 교육과정 개정시 역사과목·시수 축소
- 경과
 - ‘국사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 구성·운영
 - 공청회
 - 보고서
 - 대통령 업무보고
- 결과 : ‘2005 역사교육 강화방안’
 - ① 교육과정 개정전
 - 고1 「국사」의 ‘한국근현대사’ 교육 강화
 - 교과서보완자료 「(가칭)재미있는 역사」 개발·보급('05.5.~12)
 - ② 교육과정 개정시 추진 내용
 - 중등 「사회」교과 내 ‘세계사’와 ‘국사’를 통합하여 ‘역사’ 과목으로 독립운영하는 방안 추진
 - 새로운 형태의 역사교과서 개발
 - ③ 기타 추진 내용
 - 각 대학에 수능 ‘국사’과목의 입학 전형요소 활용 권장
 - 각 대학에 역사관련 강좌의 교양필수 지정 권장
 - 각종 공무원 연수시 역사관련 과목의 필수 개설 권장 요청

□ 2006 역사교육 강화방안

- 배경
 - 중·일의 역사왜곡
 - 역사교육 약화
 - 역사교사 전공일치도 저하
- 내용(5영역 22과제)
 - ① 교육과정 개정 : 중등 ‘역사’ 과목 독립, 역사과 시수 확대
 - ② 교육내용 재구조화 : 교과서 검정 전환, 역사탐구교실 설치

- ③ 왜곡대응 기반 마련 : 고교 선택과목 '동아시아사' 개설
- ④ 각종시험 역사 반영 : 대학 신입생 선발시 '국사' 필수 권장
- ⑤ 역사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 '역사교과발전협의회' 구성 등

II.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총론

1. 성격

○ 정의

-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된 고등학교 선택과목

○ 목적

- '동아시아사' 과목은 공통 교육과정의 역사 영역에서 습득한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역사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함.
-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 교류와 갈등의 현 상황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동아시아의 미래 구상 속에서 극복해나가기 위함

2. 목표

□ 기본 방향

- 지식·이해 목표 :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 가치·태도 목표 :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 함양

□ 총괄 목표

-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 다원적 관점의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르는 것
-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

□ 하위 목표

-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객관적 파악, 주제적 이해(“지역사”)
- 공통성·연관성 등에 대한 주제별 접근 방식
- 다양성 탐구, 타자에 대한 이해 및 존중 태도 함양
- 교류와 갈등 탐구→문제해결 방향 모색
- 비교·분석·비판·종합→역사적 사고력 신장

3. 내용

□ 내용 선정 기준

- ① 동아시아 각 집단 간에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
- ② 지역적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
- ③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교류를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역사적으로 동아시아가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축적하게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
- ④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 국제 관계 등의 다양한 분야가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
- ⑤ 고등학생의 이해 수준과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너무 단순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는 배제, 탐구 학습이나 주제 학습이 용이한 주제로 선정

□ 내용 조직 원리

- ① 중학교 ‘역사’에서 배운 통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주제별로 구성
- ② 탐구 학습, 비교 학습 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대단원 6개, 성취 기준 26개라는 비교적 적은 분량을 제시
- ③ 대단원은 고대-중세-근대라는 시대 구분법을 탈피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커다란 사회 변화에 따라 크게 시기를 구분
- ④ 각 대단원에서 다룰 시기 범위는 현대에 가까울수록 촘촘하게. 단, 지역마다 사회 발전의 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대체로’ 라는 표현을 써서 각 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시기에 융통성 부여

- ⑤ 대단원명은 ‘고대, 중세’, ‘형성, 발전’ 등과 같은 시대 구분적 성격이 강한 용어를 회피, 해당 시기에서 다룰 내용을 함축하는 용어 사용

□ 내용 체계

- 6개 영역 26개 요소

□ 영역별 내용

- 각론 강의 또는 『동아시아사 강좌』(근간)

4. 교수·학습 방법

- ① 공통 교육과정의 역사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 ② 각국이 이룩한 독자적 역사 발전과 함께 동아시아사가 가지는 독특한 역사상을 이해하도록 지도
- ③ 상호 교류 및 발전과 함께 갈등 문제도 각 시대의 주요 학습 요소로 인식
- ④ 각 공동체를 상호 비교하여 보편성과 함께 차이점도 탐구함으로써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도
- ⑤ 다양한 사료, 도표와 통계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흥미와 효과를 높이도록 지도
- ⑥ 학습 내용에 따라 사실 학습, 개념 학습, 주제 학습, 인물 학습, 비교 학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위해 토론, 발표, 논술, 조사, 사례 연구 등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을 활용
- ⑦ 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정보 처리와 조직 능력 신장을 위해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 활용 교육(IIE), 컴퓨터 보조 수업(CAI) 방식 등 적극 활용

5. 평가

- ①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 ②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에 따라 추출된 요소를 준거로 평가를 시행하며, 지식·이해 영역만이 아니라 기능 영역, 가치·태도 영역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평가

- ③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수행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성취도를 높이며, 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 ④ 지필 평가 외에 관찰, 논술, 체크 리스트, 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양적, 질적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⑤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을 적절히 배합하여 평가 문항을 제작하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등의 평가 문항 요건 준수
- ⑥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의 자기 평가, 모둠별 평가 등의 평가 기법을 적극 활용

Ⅲ. 『동아시아사』의 의의

1. 의의

- 한국사의 자국사 편향 극복
- 동양사의 중국사 편향 극복
- 세계사의 서양사 편향 극복
- 자국사⇔지역사⇔세계사의 조화·상호작용
- 한·중·일 역사갈등의 평화적·근본적 해결
- 동아시아의 평화 및 번영 기반 구축
- 역사연구(학문)⇔역사교육(교과)

2. 활성화 방안

- 교원 연수 : 동아시아사 연수, 동아시아사 사이버연수, 동아시아사 현장연수
- 학술 회의 : 동아시아사 교육 학술회의
-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동아시아사 집필안내서』, 『동아시아사 참고자료집』, 『동아시아사 강좌』(2011), 『동아시아사 수업자료집』(2011)
- 교수·학습 사례 개발·보급 : '(가칭)동아시아사 수업연구 실천사례 발표대회' 등

<참고문헌>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 교과서*, 역사비평사, 2002.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존 카터 코벨/김유경,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 학고재, 1999.

타와라 요시후미/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위험한 교과서*, 역사비평사, 2001.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한일 교류의 역사*』, 혜안, 2007.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사, 2005.

한일여성공동교재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 2005.

전국역사교사모임·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마주보는 한일사*』 I·II, 2006.

대구역사교사모임·히로시마교직원조합, 『*조선통신사*』, 2005.

강택구·박재영 외, 『*세계의 역사교과서 협의*』, 백산, 2008.

<동아시아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 중 현(양재고등학교)

< 내 용 목 차 >

- I. 2009 개정교육과정과 역사과
- II. <동아시아사> 신설 배경과 경과
- III.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이해
- IV.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V. 향후의 과제와 역사교사의 역할

I. 2009개정교육과정과 역사과

1. 2009 교육과정 개정

- 추진 배경
 - 세계 환경과 국가 위상의 변화와 인재 육성 전략의 재조정 요청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를 지향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을 제안²⁾
- 추진 경과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형교육과정구상(안) ('09.8.17)
 -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09년 2월부터 8차례)
 - 2009 개정교육과정위원회,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수 8개 축소 권고('09.9.21)
 -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 조정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세미나('09.9.30)
 - 역사(교육)학계 36개 단체, '2009 개정교육과정 줄속 추진에 대한 역사(교육)학계의 입장' 성명서 발표('09.10.13)
 - 도덕·사회과 선택과목 개정시안 공청회('09.11.25)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09.12.23 예정)
- 추진 방향
 - 학습부담의 경감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조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
- 추진 내용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군을 7개로 조정
 - 사회과와 도덕과를 통합하여 '도덕·사회과'로 변경
 -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수를 4개영역(역사, 지리, 일사, 도덕)에 각각 2개씩 할당

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형교육과정구상(안), 제8차 국민대토론회 자료, 2009.7.24

2. 2011 교육과정 총론의 사회과(역사/도덕 포함) 교과목

현 행	⇒	개편 시안
사회, 도덕		폐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총 12과목		총 10과목

3. 2014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시안

현 행	⇒	개편 시안
윤리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한국사, 세계사(세계사 + 동아시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일반사회(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총 11과목(최대 3과목 선택)		총 6과목(최대 1과목 선택)

4. 역사과 교육과정의 변화

- 기본 방향
 - 10학년(고1)까지 '역사' 과목 유지
 - 11~12학년(고2·고3) 선택과목 수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
- 선택과목 조정 시안들 :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동아시아사 제외하는 방안
 - 한국문화사를 그대로 두고, 동아시아사를 세계역사의 이해 과목에 흡수하는 방안
 - 세계역사의 이해 과목을 동아시아사와 통합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안
 -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3개 과목을 완전히 해체·재구성하는 방안
 - 한국문화사와 동아시아사를 새롭게 통합하는 방안
- 논쟁점
 -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모순적 결합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동아시아사를 살릴 것인가?
- 최종 확정·고시안
 - 결국 동아시아사는 살아남았다! 왜?

II. <동아시아사> 신설 배경과 경과³⁾

1. <동아시아사> 신설 배경

- 주변국의 역사왜곡
- 기존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
 - 국사교육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 문제
 - 세계사 교육에서의 지나친 서구중심성 문제
 - 재미없는 역사 교과서
- 유럽 교과서 대화의 성과
 - 독일-프랑스 공동역사교과서
 - 독일-폴란드 공동역사교과서
- 한·(중)·일 공동역사교과 개발 경험의 축적
 - 『조선통신사』('05.4) : 한·일 지역 교사 모임간의 교과서 협력
 - 『미래를 여는 역사』('05.5) : 한·중·일 시민, 교사, 학자간의 역사 대화
 -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05.10) : 한일 여성학자
 - 『마주보는 한일사』('06.8) : 한·일 전국역사교사단체간의 교과서 협력
 - 『한일교류의 역사』('07.3) : 학문적 차원의 차분한 역사대화의 결실

2. <동아시아사> 신설 경과

- 2006. 11. 27. 역사교육강화방안 부총리 결재
 - 중등 '역사' 과목 독립,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수를 3시간으로 확대
 - 고교 선택과목으로서의 <가칭>동아시아사 신설
- 2006. 12. 21.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 고교 선택과목에 <동아시아사> 포함
- 2006. 12. 26. 역사교육강화방안 발표
 - <동아시아사> 신설 공식 발표
- 2006. 12. 22.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개발 1차 회의
- 2007. 1. 27.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개발 토론회
- 2007. 2. 6.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교육과정 심의회에 상정
- 2007. 2. 19.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보고서 제출
- 2007. 2. 28. 개정 교육과정 고시
- 2009. 12. 23. 개정 교육과정 고시
- 2010. 5. 12. 개정 교육과정 고시
- 2011. 8월중 개정 교육과정 고시 예정

3) 교육과정은 해당 시기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개정을 거듭해 오고 있다.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국가사회적 요구, 학문적 요구, 학습자 요구로 나뉜다. 동아시아사 신설에 영향을 준 요소 중 주변국 역사왜곡 대처의 필요성은 국가사회적 요구에 해당되고, 기존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은 학문적 요구와 학습자 요구에 해당된다.

3.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 개요

□ 개발 기간 : 2006년 12월~2007년 2월

□ 기본 방향(교육부 안)⁴⁾

-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간 조성되고 있는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 역사인식을 만들어 갈 필요성에 부합하는 내용
-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 동아시아사가 다루는 영역은
 - 공간적으로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고
 - 시간적으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전 시기를 포괄하며
 - 내용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교류와 갈등의 역사를 통해 한·중·일 역사 갈등 해결의 방향을 모색

□ 일부 수정안(개발진 안)⁵⁾

- <동아시아사>를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했던 베트남까지를 포함하되, 주제에 따라 범주의 변화가 가능
- <동아시아사> 신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으로부터 한 발 벗어난 외부에서 3국이 포함된 세계를 볼 필요가 있음

□ 2009 개정교육과정, 2010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별다른 변화 없음

4) 내부자료,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방향>, 2006. 12.

5) 안병우 외,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2007

Ⅲ.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이해

1.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동아시아사에 대한 접근 방향 세 가지⁶⁾

- ① 주변 나라의 역사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입장
 - 주변국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균형감을 가지고 자기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음
 - 예 : 미래를 여는 역사
 - 한계점 : 국가사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동아시아사로 통합되었다기 보다는 세 나라의 역사를 병렬적으로 모아놓은 데 지나지 않다는 비판 제기됨
- ② ‘동아시아’라는 틀 속에서 관계사는 물론 각국의 역사를 통합하려는 관점
 - 예 : ‘동아시아 문화권’ 개념
 - 한계점 : 기존의 국가를 단위로 한 내셔널리즘을 동아시아라는 단위로 확장한 것에 불과할 우려
- ③ 세계사적 맥락에서 동아시아를 파악하는 관점
 - 역사교육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
 - 비판 : 일본의 진보 세력의 관점이나,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일본의 침략과 전쟁 책임을 회색시킬 우려

□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적용된 세 가지 접근 방향

이 세 가지 접근 방향은 서로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이 모두 적용됨

- ① 주변 나라의 역사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입장의 예
 - “(5)-① 각국에서 개항이 가지는 의미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한다.”
- ② ‘동아시아’라는 틀 속에서 관계사는 물론 각국의 역사를 통합하려는 관점의 예
 - “(2)-④ 동아시아 외교 형식인 조공·책봉 관계를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 ③ 세계사적 맥락에서 동아시아를 파악하는 관점의 예
 - “(5)-④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노력과 국제 연대에 대해 알아본다”

□ <동아시아사>의 성격

- ‘나를 중심으로 국가<지역 세계<세계’로 점차 역사 인식의 범주를 동심원적으로 확대해 갈 때 자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역 세계사, 중간 범주의 세계사
 - 한국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세계사에 포괄되는 개념
 - <국사>와 <세계사>의 단절 극복
- 한국인이 쓰는 동아시아사, 우리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지역사(주체성)
 - BUT 한국사의 배경으로서의 동아시아사 (×)

6) 김한중 외, 「한중일 공동역사교과 개발 연구」, 2007

- 동아시아 각국사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 단위로서 역사 이해의 대상이자 실천의 대상이 되는 범주
 - BUT 배타적 지역주의 (×)
- 더 큰 세계를 향해 열려 있어야(개방성)
 -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

2.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구성⁷⁾

□ 구성 요소 및 특징

- <동아시아사> 교육과정도 다른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크게 ‘성격’ ‘목표’ ‘내용’과 기타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구성
- 이번 교육과정의 진술은 각 단원별로 대강화(大綱化)된 성취기준만을 제시 → 교과서 저작의 재량권을 강화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유도

□ 성격 및 목표(왜 배우는가?)

- 성격(과목 설정의 근거)
 - 지역 내 공동체 상호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나름의 정체성 형성(과거)
 -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 단위(현재)
 -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 이룩(미래)
- 총괄 목표(과목 설정의 목표)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둔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르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지식·이해)
-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 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가치·태도)
- 하위 목표(관점·태도)
 -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키움(주체성)
 - 다양성 탐구 →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개방성)
 - 교류와 갈등 요소 탐구 → 문제 해결의 방향 모색(실천성)
- 하위 목표(구성 방식) : 시대별·주체별 접근
 - 기존 역사 교과서의 망라적 서술은 학습자의 흥미를 감소시킴
 - 망라적 서술을 극복한 주제 중심의 구성
 - ※ 낱알 낱알 서말의 구슬 보다는 잘 꿰어진 한 말의 구슬이 낫다.

□ 내용 체계(무엇을 어떻게 배우는가?)

- 내용 선정의 기준(무엇을)
 - 각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것, 지역 내 각 집단 간에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

7) 교육과정기술부, 『동아시아사 해설서』, 2009 (예정) ; 정연,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호

- 지역적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중시
-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교류를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역사적으로 동아시아가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통의 문화유산을 축적하게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 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분야가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
- 고등학생의 이해 수준과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너무 단순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는 배제하고 탐구학습이나 주제학습이 용이한 주제로 선정

o 내용 조직의 원리(어떻게)

- 기본 교육과정인 역사에서 배운 통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주제별 구성
- 탐구학습, 비교학습 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대단원 6개, 성취기준 26개라는 비교적 적은 분량을 제시
- 대단원은 고대-중세-근대라는 시대 구분법을 탈피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커다란 사회변화에 따라 크게 시기를 구분
- 각 대단원에서 다룰 시기범위는 현대에 가까울수록 촘촘하게 하되, 지역마다 사회 발전의 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대체로’ 라는 표현을 써서 각 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시기에 융통성 부여
- 대단원명은 ‘고대, 중세’, ‘형성, 발전’ 등과 같은 시대구분적 성격이 강한 용어를 피하고 해당 시기에서 다룰 내용을 함축하는 용어를 사용

<동아시아사>의 내용 요소

영역(대단원)	내용 요소	해당 시기	주요 왕조·사건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선사 문화, 농경과 목축, 국가의 성립과 발전	선사 ~기원 전후	고조선, 진·한, 남월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간 인구이동과 전쟁, 고대 불교,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 체제, 동아시아 국제 관계	기원전후 ~10세기	삼국 통일, 당, 일본의 성립, 베트남독립,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북방 민족,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문신과 무인, 성리학	10~16세기	고려, 조선, 송,몽골,명, 무로마치 막부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은 유통과 교역망,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 서민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16~19세기	동아시아 전쟁, 청, 조선 소중화, 일 에도막부
국민 국가의 모색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	19세기중반 ~1945년	개항,아편전쟁, 대만·조선침략,중일 전쟁,태평양전쟁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각국의 경제 성장, 정치 발전, 갈등과 화해	1945년 이후	국교회복, 전쟁, 경제성장,민주화

□ 각 단원별 주요 내용 및 서술상의 유의점

○ 1단원 :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 동아시아사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한 후, 동아시아사 전개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 다양한 선사문화, 농경과 목축으로 대별되는 생산경제, 국가의 성립과 발전 등을 차례로 다룸
- 황하문명 혹은 중국 문명 중심의 단선적인 문명발전론이나 농경문화 우위론 같은, 지역 내 정치, 문화 집단을 우열로 구분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동아시아 문명의 다양한 기원과 갈래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

○ 2단원 :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 각 지역에서 여러 국가와 정치 집단이 분열·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과 인구 이동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어 각 지역에 기반을 확고히 한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와 외교 관계(조공·책봉)를 탐색
- 현재의 국민국가의 원형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를 다루는 이 단원에서는 현재의 국민국가적 관점을 과거로 소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 3단원 :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 몽골제국의 성립 과정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이후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를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를 중심으로 살펴봄
- 몽골제국을 통해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와의 소통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라는 지역 세계가 다른 지역들과 함께 세계를 구성하는 범주임을 이해시킬 필요. 또 농경민족과 비교되는 북방민족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되 자칫 그들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미화하거나 전쟁의 참상을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 4단원 :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세계에서 갖는 국제전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동아시아 교역망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의 흐름을 살펴봄, 이후 각국의 정치적 안정 속에서 '각국의 독자적 전통'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서술
- '임진왜란'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쟁'으로 표현한 것처럼 일국사(한국사)적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시야를 동아시아 전체로 넓혀 동아시아 세계를 역동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음

○ 5단원 : 국민국가의 모색

- 동아시아가 침략과 지배, 그리고 저항의 격동기를 겪으며 재편되는 과정을 국민국가의 모색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개항 전후의 시기를 통해 현대 동아시아 각국간 갈등의 원인 파악
-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다루되 그것에 저항하면서 국민국가, 민족주의를 성취해나가는 동아시아인의 의지와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룸 것.

○ 6단원 : 오늘날의 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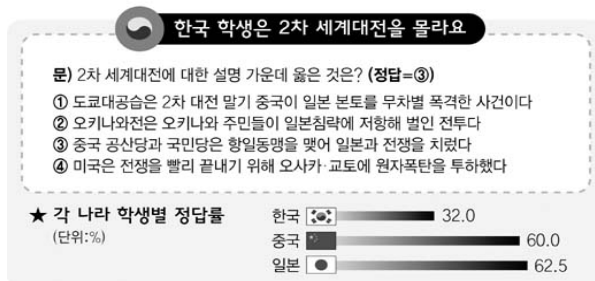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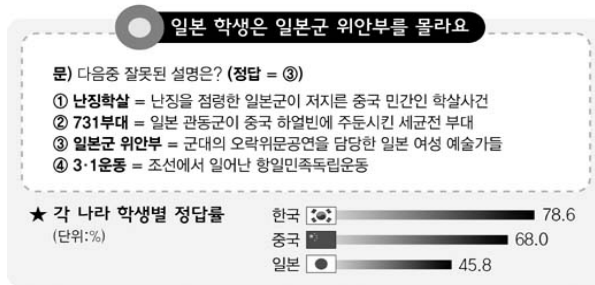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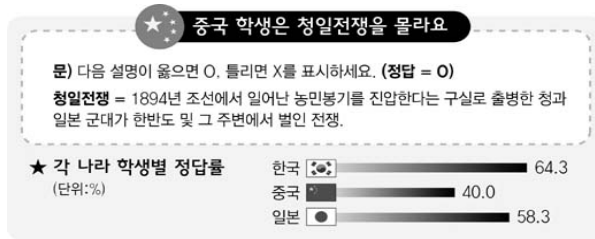
- 1945년 이후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전쟁 등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변화하고 해체되는 과정과 탈냉전 시기에 여전히 풀지 못한 갈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룸
-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 냉전 체제의 전개 과정에서 베트남의 민족 운동과 통일 과정에서 베트남에 주목할 필요. 동아시아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호 갈등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을 탐구하여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함.

IV.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 학생들의 동아시아 역사인식 현황⁸⁾

□ 한겨레신문의 설문조사(2005.5)

- 대상 : 서울 신도봉중학교, 도쿄 쇼사이 중학교, 허베이성 초급 중학교
- 내용 : 20문항 100점 만점의 근현대사 공동시험
- 결과 개요
 - 3국학생 각각 45점 안팎의 낮은 평균 점수
 - 자국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정답률
 - 3국 관계사 등 동아시아 근현대사 : 20~30% 낮은 정답률
- 해석 : 3국 모두 자국사 중심으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져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부족
- 설문 반응 사례



8) 김한중 외, 「한중일 공동역사교재 개발 연구」, 2007

□ 수업 반응 조사(2001)

- 대상 : 광장중학교 3학년
- 조사자 : 문주영 교사
- 내용 : 1945년 원폭 투하를 다루는 수업을 한 후 소감
 - 가족을 잃은 일본 피폭 어머니의 이야기 자료 제시
- 반응 결과

중립적 답변 (19)	전쟁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어간다./ 원자폭탄은 무시무시한 무기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공격으로 일본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불쌍하다./ 너무 큰 욕심은 화를 부른다./ 전쟁이지만 너무 심했다./ 원자폭탄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살기 위해 인간을 죽이는 도구를 만들어낸다./ 일본인들이 불쌍하다./ 잔인하다./ 차라리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게 덜 잔인할 것이다./ 인류의 놀라운 발명품이며 부작용도 크다.
부정적 답변 (13)	뺨통이다./ 고통스럽게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자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 잔인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을 정도의 좀 더 강력한 폭탄이 터져서 일본이 침몰했으면 좋겠다./ 통과하다./ 또 떨어졌으면 좋겠다./ 슬프긴 하지만 잘됐다./ 일본이 짓밟을 치른 것 같다./ 일본이 불쌍하긴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대가이다./ 불쌍하지만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조금은 고소하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미국이 고맙다./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 해석
 - 상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적개심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한계

2. 동아시아사 수업 방안

동아시아사를 의미있게 수업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적절할 수 있다. 첫째, 과거 역사에서 상대에 대한 몰이해를 극복하려는 수업이 유용하다. 동아시아 각국이 과거 이룩한 문화적 업적, 양국 간 교류와 친선의 교류사, 현재 양국인의 문화 교류, 스포츠에서의 성취 및 교류 등을 통해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 학생은 일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 문화적 시혜자로서의 우월감과 일본의 성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열등감을 제거해야 한다. 일본 학생은 한국에 대한 무지,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문화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 중국의 영향을 받긴 하였지만 시대에 따라 지배구조를 달리한 중국과 유교를 중심으로 문신 중심의 중앙집권적 집권체제가 유지되었던 한국의 역사와 신도·불교와 관련한 천황의 존재, 무신 중심의 정치체제가 형성되고, 지방 분권적 성격을 갖는 배경을 다룰 수 있다.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봄으로써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불교, 유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활 양식으로서 주거·음식·의복의 차이점, 문자 생활과 한자, 가나, 한글

의 제자원리와 사용 등을 통해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다.

단절된 국가 영역에서 살 수 없는 현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지구 최후의 분단국가로서 남북의 현실, 북한 핵문제, 중국·미국 등 국제 정치의 현상을 제시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동아시아 각국 간의 교역의 증대, 분업화 및 경제 협력 관계와 같은 경제 현황을 다룰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각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다. 문화적으로 한류·일류의 확산, 음식 문화의 확산, 여행객의 증가, 학생 교류의 증가 등을 다룰 수 있다.

세 번째는 역사갈등의 배경과 실태, 극복 방안 등을 탐구하는 것이 유용하다. 고려를 침략한 왜구 문제, 임진왜란,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 지배 및 수탈, 민족적 차별 문제, 젠더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오키나와 전쟁, 원폭 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 중국과의 동북공정, 간도문제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1) 다원적 관점의 역사 수업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과목의 성격에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삶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함께 개정된 세계사 교육과정에서는 더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사 학습이 중요함을 이해”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한 생활 방식이 존재하였음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와 문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되어 있다.

역사적 가치는 사회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수의 가치와 보편적 가치가 괴리를 일으키기도 한다. 국가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억누르기도 한다. 역사교육이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 가치관, 다원적 가치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되면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현대사회에서 부딪히는 많은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다원적 관점은 역사수업은 다문화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등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려는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가 등장하였다.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사를 고정된 실체나 대상이 아닌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와 실천과정이다.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대화하거나, 서로의 질적인 차이를 발견하려는 상대화과정이었다.⁹⁾ 다원적 관점의 역사 이해를 통해 상대주의적 역사인식, 타자에 대한 이해,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다원적 가치관 또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역사교육에서 갖는다고 할 때, 그 가치는 평화, 인권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Tessa Morris-Suzuki는 9.11 사건을 서술하면서, 이를 문명의 충돌로 보기보다 세계를

9) 宮嶋 博史, 「方法としての東アジア-東アジア三国における近代への移行をめぐって」, 『歴史評論』412, 1984, p.22.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동아시아상을 살핀 글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황지숙, 황지숙, 「상대화시각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방안」, 『역사교육연구』5, 2007.

보는 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설명한다. 세계를 보는 단층에는 <원리주의>와 <다원주의(pluralism)>가 존재한다. 원리주의는 국민 구성이 복잡해지고, 물질문명과 국제화가 진전 되면 될수록 차이의 경계선을 강조하는 심볼과 사상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원주의는 개개인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복합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문명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다양한 것과 결합시켜 파악한다. 특히 환경이 변하면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아이덴티티가 강조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다원주의는 특히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용될 수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도 변화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¹⁰⁾

다원주의는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다양한 색깔과 취향을 가진, 여러 지역의 문명이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 만들어 가는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과거의 다원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다원성까지도 열어두어 다원적 세계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¹¹⁾

김한중은 역사교육에서 가치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다원적 가치는 역사나 사회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다원적 관점의 핵심은 상대주의적 관점을 전제로 한다. 상대주의적 관점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일 뿐만 아니라 방법이다.¹²⁾ 그는 이제까지의 역사가 ‘중심’과 ‘주변’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변’의 역사에 주목한 관점이 다원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원적 가치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바람직한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소홀할 수 있다.¹³⁾

그러나 다원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경우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주장과 본의아니게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의 새역모가 편찬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사람들의 생각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원적 관점이 과거 역사를 합리화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당시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평화,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가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역사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교육은 역사교육의 목적인 ‘사회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데 있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과거를 인식하고 현실을 성찰’하는 것이다. 김한중은 다원적 관점을 기르기 위한 역사교육 방안의 첫단계로 역사교육 과정과 교과서 서술의 개선을 들고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동아시아사>의 등장에 특히 이러한 문제의식이 많이 들어 있으며, 이를 교과서가 어떻게 구현해 내는가

10) Tessa Morris-Suzuki, 『批判的想像力のために—グローバル化時代の日本』, 東京, 平凡社, 2002, pp.172~182

11) 유용태,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사』,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2005, p.337.

12) 김한중,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8, 2008, p.242.

13) 김한중, 위의 글, pp.246-248.

14) 김한중, 위의 글, pp.248, 새역모의 초판본에도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오키나와 전쟁에 대해 “전쟁은 비극이었다. 그러나 전쟁에 선악은 말하기 힘들다. 어느 쪽이 정의이고 어느 쪽이不正이라고 하는 말은 가능하지 않다. 나라와 나라가 國益이 충돌하는 마지막에, 정치로도 決着이 가능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행하는 것이 전쟁이다. 미국군과 싸우지 않고 패배하는 것을 당시의 일본인은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 수업의 관건이라 지적한다. 특히 교과서에서 다원적 관점을 기르고자 할 때 정치사는 “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사나 문화사는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¹⁵⁾

두 번째 단계는 교실 수업 상황이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다문화 이해나 다원적 관점은 교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해진다. 다원적 관점을 갖고 타자인식을 하려면 학생들이 자기 나름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나의 해석이나 관점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수업 내용의 선택이나 학습 활동에서 가급적 교사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좋다. 교사는 학생들이 의미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되, 그 답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¹⁶⁾

(2) 역사 담론을 활용한 역사수업

송상헌은 역사교육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역사분쟁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처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이 자신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¹⁷⁾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켜 역사교육에서는 거론되는 역사담론을 대상으로 시비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자체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를 담론화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자체를 역사화하고, 맥락화하여 인식하는 것¹⁸⁾으로서 해당 시대 전체를 바라보고, 다양한 역사적 경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역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메타화하는 것이다. 메타화를 통하여 각각의 담론이 추구하는 미래상을 고려하여 적연성(適然性, plausibility)을 탐구하게 하는 것이다.¹⁹⁾

송상헌은 대립하는 담론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억이 대립하는 경우이다. 난징대학살의 학살 숫자나 강제동원 인원 등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의 기억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이다. 침략전쟁의 주범이었던 일본이 원폭의 희생자라는 것이다. 즉 나도 피해자라는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와 같은 경우이다. 셋째는 가해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로 이를 분석하는 경우이다. 대한제국은 미개했기 때문에 개화를 위해선 일본의 지도가 필요했다는 식이다. 넷째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주변국과 관련된 역사를 수정하는 경우이다.²⁰⁾ 역사지식을 메타화한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5) 김한중, 위의 글, p.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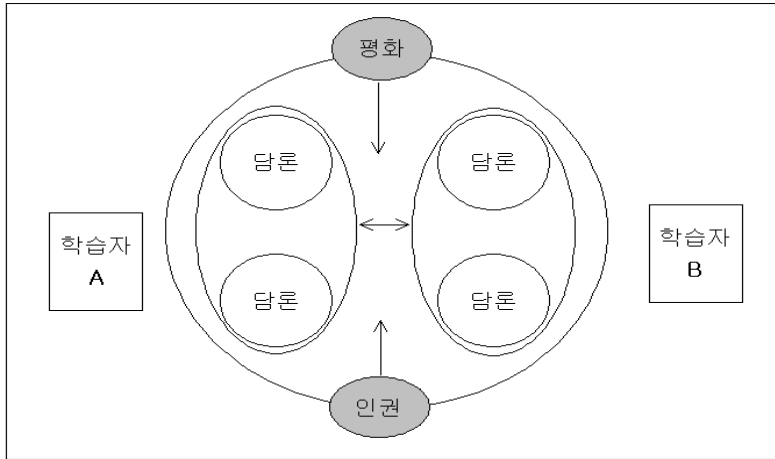
16) 김한중, 위의 글, p.253.

17) 송상헌, 「역사교육에서 역사분쟁의 처리 문제」, 『湖西史學』48, 2007, p.275.

18) 양호환, 「역사적 사고의 한계와 역사화의 가능성」, 『歷史教育』87, 2003, p.199.

19) 송상헌, 위의 글, p.280.

20) 송상헌, 위의 글, p.290~301.



<그림 1> 역사 답론을 활용한 수업 구조

각국의 대립하는 답론은 서로 대립 또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면서 역사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메타화하여 자신은 물론 상대의 주장도 살피게 된다. 이때 대립하는 답론은 평화, 인권 등의 가치에 입각한 답론을 투입하여 역사인식의 변화 또는 수정을 거치게 된다.

수업의 첫 단계에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다음은 해당 수업 주제와 관련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입장이나 학설일 수도 있고, 다른 학설이나 주장일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답론)이 제공되는 틀은 수업 현장의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본론에서는 우선 각자의 주장(답론)을 나름대로의 근거와 함께 제시한다. 또한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갖는다. 쟁점이 확연한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겪겠지만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수업의 경우도 다른 수업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동역사교재는 다른 시각의 답론 틀을 소개함으로써 다원적 관점을 제공하거나 역사인식의 공유에 이르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라 또는 개인별로 대립하는 답론(기억)이 존재한다고 할 때, 대립하는 답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답론을 포괄하는 답론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가의 기억에서 제외된 부끄럽고, 수치스런 기억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또는 해당 답론이 추구하는 미래상은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아울러 도덕적 가치 등을 다른 예에서 찾을 수 있게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는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역사인식의 공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역사화해의 기반이 된다.

(3) 가다머(H.G.Gadamer)의 ‘해석학적 대화’의 방법을 활용한 역사수업

가다머(H.G.Gadamer)에 의하면 진리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본질적 경험이고, 이러한 경

험은 언어를 통해 매개되는 것이다. 해석은 인간 자신의 역사성에 의거해 이뤄지는데, 역사성이란 과거의 경험을 다시 새롭게 수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와 과거의 경험 사이에 변증법적 순환이 있다.²¹⁾ 동아시아 역사갈등을 현재의 나와 상대의 대립관계로 이해할 때, 이를 수정해가는 과정(지평융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다머의 해석학이 역사에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진리의 문제를 주관-객관 도식의 인식차원을 넘어 해석학의 ‘이해’차원으로 확장시켰는데, 그 이해란 현존재로서의 인간이 삶속에서 세계와 관계하는 ‘존재방식(the mode of being of Dasein)’ 파악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해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현존재와 텍스트 사이의 부단한 대화를 통하여 자신을 확장하고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²²⁾

가다머에 있어서 해석학적 순환의 의미는 ‘개인의 이해(선입견)는 텍스트를 통하여 전통(세계)을 이해하는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전통(세계)의 이해는 개인 이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²³⁾ 인간은 텍스트 이해, 즉 텍스트가 매개하는 전통(세계)을 이해함으로써 점차 자신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또 그렇게 확장된 이해를 통하여 텍스트가 보여주는 보다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계속되는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통해 인간의 이해는 점차 성장한다.

가다머는 ‘인간은 세계를 가지지만 그러나 세계는 언어를 통해서만 현재한다’고 한다.²⁴⁾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는 결코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소유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세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언어에 의존한다. 텍스트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무엇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²⁵⁾

지평융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자기 자신의 열린 마음과 비판적 이성이 필요하다는 점, 열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다머의 이론은 해석자(학생)이 가진 선입견을 상대의 문화, 역사에 대한 비하, 자국중심적 태도, 우월감 등이라 상정하고, 상대의 입장, 역사 등을 텍스트(전통) 등으로 상치시켜 놓을 수 있다면 이론의 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달하는 지평융합을 역사화해 또는 이해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가다머의 해석학적 대화를 통한 대화를 동아시아 수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21) 정은혜, 『가다머 『진리와 방법』1』, 『철학사상』별책 제5권 제11호, 2005, p.6.

22) 김원율, 『가다머에서의 이해의 역사성』, 『하이데거에서 가다머로』, 조명문화사, 1992, p.76

23) 주영훈, 『가다머의 이해와 교육』, 『교육철학』27집, 2002, p.137.

24) H.G.Gadamer, Wahrheit und Methode, *Tubingen*, 1975, p.205.

25)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합리성과 사회비판』, 교보문고, 2006, p.107.



해석학적 대화를 활용한 역사화해 수업의 5단계

선입견은 현재까지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역사 지식, 상대에 대한 관점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이 생소한 상대방의 역사인식 또는 문화를 접하면서 자신의 현재와 충돌하게 된다. 본래의 해석학에서는 텍스트에 존재하는 시간간격(Zeitabstand)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공간적 간격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시간간격의 의미로부터 영향사와 영향사적 의식(Wirkungsgeschichtliche Bewußtsein)이라는 요구를 이끌어 낸다. 인간은 누구나 각각의 영향사인 이해지평이 있다. 이것은 주체성으로써 우리를 간섭하는 일종의 진리이며, 구체적인 의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텍스트(상대방)과 해석자(학생)의 대화(Dialogue)가 이루어진다. 이 때 대화에서는 사료, 상대 문화에 대한 자료, 사진 및 공동역사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한 부단한 상호 관계 속에서 상호 이해, 공동의 인식에 접근하는 지평 융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 가변적인 것이다.

가다머의 이론에서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과거의 객관적 타자가 아니라 전통을 통해 영향을 주고 말하는 상대자로 파악을 하였다. 타자를 나의 이해에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물어야 하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대화적 관계로 보았다. 이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상대방의 논변을 무시해서도 안되며, 상대방의 의견을 중요성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한다. 동아시아사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우선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이다. 상대방의 견해를 내 견해에 대한 일종의 물음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나의 견해는 변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화해가 필요한 상대를 텍스트로 하고, 공동교재는 그러한 과정에 대화의 매개이거나, 질문이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지평이 텍스트(상대)의 지평과 만나는 매개로 공동역사교재가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의 주장, 역사적 전통, 입장과 부단한 상호작용을 전개하며, 새로운 지평의 장을 여는 것을 지평융합이라 할 수 있다. 지평 융합의 단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부단히 발전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난방 문화 수업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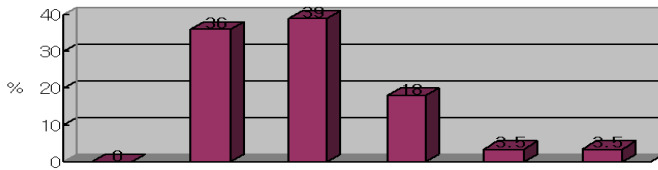
학 습 주 제	난방방식을 통해 본 한일 양국의 주거 문화				
교 과 명	한 국 사	학 년	1학년	차 시	2/5
학 습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국의 주거 문화와 난방방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난방방식을 통하여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유의점
도입 (10분)	기후와 주거 문화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위와 더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 더울 때와 추울 때의 난방 방식은? •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를 이해 • 문 황을 제시
전 개 (30분)	다원적 관점의 주제 탐 구 과정	① 양국의 기후는 어떻게? - 한국의 기후와 일본의 기후는? - 지진이나 지질학적 배경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을 자극
		② 양국의 난방방식은 어떻게? - 한국의 온돌 문화 - 일본의 다다미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를 파악
		③ 왜 우리와 다를까? - 한국과 일본의 다른 기후 - 오늘날은 지질학적 영향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적 이해 • 공동역사교재의 사용
		④ 내가 취한 역사인식의 의미는 어떠한가? - 상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 나와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 기후와 환경에 따라 생활방식의 차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를 수용 • 상대주의의 정착
정 리 (10분)	역사인식의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 - 문화적 우월감, 멸시관을 극복 - 야스쿠니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 - 야스쿠니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검토
	새로운 과제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를 탐색 - 한일 간에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문제 설정 • 발표 및 정리

V. 향후 과제와 역사교사의 역할

1. 현황 및 과제

□ 현황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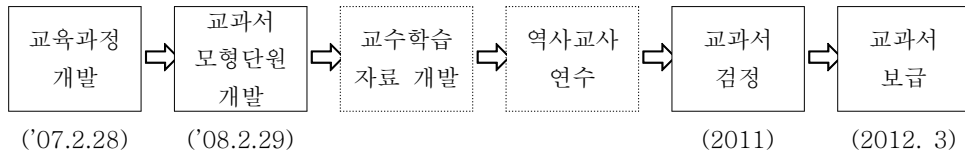
- <동아시아사>에 대한 높은 관심 : <동아시아사> 선택 여부 설문 조사 결과
 - ① 응답 : 예(76%), 아니오(24%)
 - ② ‘아니오’라고 응답한 이유



구분	①다른과목 중요	②신설 내용 생소, 부담	③다른과목 통해가능	④교과서내용보고결정	⑤필요성 못느낌	⑥기타	합계
전국	0	10	11	5	1	1	28
비율(%)	0	36	39	18	3.5	3.5	100

- 교과서 개발자들은 연구 성과와 자료 부족의 어려움 호소

□ 교과서 개발 및 후속 조치 일정



□ 향후 과제²⁷⁾

- 기초 연구 활성화
 - 동아시아사 개념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 동아시아사 역사용어 사전 편찬
 - 동아시아사 개설서 번역·편찬
- 수업 지원 체제 마련
 -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보급
 - 교사 연수

26) 황지숙,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의 동아시아사 교육인식』, 2008.

27) 김정인, 『‘동아시아사’의 도전과 모색』, 『개정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육(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교육부 발표집)』, 2007, pp.56~57; 안병우 외,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2006학년도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연구 과제 연구결과보고서)』, 2007, pp.54~55.

2. <동아시아사>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역사교사의 역할²⁸⁾

- 교과서 개발 참여 및 후속연구 결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 수업실천을 통한 자료의 개발
-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평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질 높은 교과서 개발 유도
- 수업 진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재구성
-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인식의 공유 및 교과서 협력에 앞장

28) 신선호, 「개정역사교육과정과 역사교사의 역할」, 『2007년 겨울방학 고등학교 국정 국사교과서 교원연수 교재(국사편찬위원회)』, 2008, pp.12~14.

※ <동아시아사> 관련 교사용 참고도서 추천²⁹⁾

< 동아시아사 관련 >

- 전교조 대구지부, 『조선통신사』, 한길사, 2005.
한중일 교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사, 2005.
전경과여성인권센터,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5.
전국역사교사모임, 『마주보는 한일사』, 사계절, 2006.
역사교과서연구회, 『한일교류의 역사』, 해안, 2007.
교육인적자원부·서울특별시교육청, 『동아시아사 모형단원 개발 보고서』, 2008. 3.
국립제주박물관 편, 『미술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서경, 2006.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07. 1.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2008. 6.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교재』, 동북아역사재단, 2009. 1.
유용태, 『환호 속의 경종-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2006.
유용태 외, 『함께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창비, 2010.
정연, 「고등학교<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 2008.
정재정외, 『동아시아사를 만든 10가지 사건』, 창비, 2008.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동아시아 근현대사』, 옛오늘, 2000.
요시노 마코토 지음, 『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함께, 2005.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 동아시아, 2005.
키시모토 미오 외,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역사비평사, 2003.

< 각 나라 통사 및 기타 >

- 김호동, 『황하에서 천산까지』, 사계절, 2002.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상, 하』, 창비, 2005.
정은주 외 지음,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 창비, 2005.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한국사시민강좌』 42, 특집 ‘역사상 한국인의 해외견문록’, 일조각, 2008.
고마츠 히사오 외,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이평래 옮김, 소나무, 2005.
마츠이 야요리, 『여성이 만드는 아시아』, 들린아침, 2005.
스기야마 마사야키, 『유목민이 본 세계사』, 학민사, 1999.
아사오 나오히로 외 역음, 『새로 쓴 일본사』, 창비, 2003.
아시아네트워크 역음,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 한겨레출판사, 2003.

29) 박중현, 「동아시아사,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손에 잡히는 동아시아사』, 2009
황지숙, 「동아시아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08동아시아사 하계연수』, 2008

근세 일본의 전개와 동아시아

-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일본의 대한반도 인식을 중심으로

하남고등학교 朴星奇

일본사 시대구분은 서양의 시대구분과 차이가 있다. 일본사에서는 중세와 근대 사이에 근세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6세기 중엽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괄한 織田信長(오다 노부나가) 시기부터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까지이다.

이 시기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이 중심이 되어 현재의 동경인 에도(江戶)를 중심으로 막부가 존속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 일본은 에도 막부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일본 세계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조선통신사, 류큐, 出島를 중심으로 제한된 교류를 가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근세 말기에 해당하는 19세기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주요 정치·사상가들이 보인 한반도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교과서 서술에 반영되어진 모습을 살펴보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1. 정한론

19세기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에 대한 인식으로는 정한론을 들 수 있다. 정한론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한반도 침략에 대한 논의이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러한 사상의 연원은 신공황후에서 찾을 수 있다.

신공기 49년 봄 3월. 荒田別, 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久氐 등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건너가서 卓淳國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 때 어떤 사람이 “군대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으니, 다시 沙白과 蓋盧를 보내어, 군사를 늘려 주도록 요청하십시오”라고 말했다....함께 탁순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이어서, 比自林, 南加羅, 喙國, 安羅, 卓淳, 加羅 7국을 평정하였다....이 때 백제왕이 맹세하여 말하였다. “만약 풀을 잘라서 자리를 만든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나무로 자리를 만든다면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반석에 앉아 맹세하는 것은 오해도록 씩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로써 지금 이후 천년, 만년 끊이지 않고 항상 西蕃이라 칭하고 봄.가을로 조공하겠다.” ...



일본 야스쿠니 신사 遊就館에 있는 신공황후

일본서기 신공황후 49년조

신공황후의 한반도 정벌에 대한 정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한 이후 일본에서 발행된 그림엽서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 사용되었던 교과서에서 역시 신공황후에 대한 기록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중세에도 이어졌다. 지속적으로 고려·조선의 해안선을 침탈하였던 왜구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16세기까지 왜구로 대표되었던 대륙과 조선에 대한 관심을 보다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긴 이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였다. 일본 전토를 통일하고, 침략의 예봉을 조선과 명으로 돌린 히데요시의 침략은 조선을 도운 명과 조선의 민에 의해 좌절되었다. 명이 참전하자, 코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평양을 경계로 이북은 명이, 이남은 일본에 귀속시키자는 분할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반발로 이 제안이 무산되었고, 이번에는 한반도 남부 4개도에 대한 분할론을 요구하였다. 역시 이번에도 일본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하였고, 일본은 1598년 조선에서 철군하여 전쟁은 막을 내린다. 그로부터 300여년이 지난 1910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은 그의 뒤를 이었던 일본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토오 히로부미의 뒤를 이어 한국 통감이 되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남산 기슭에 있던 한국통감부 관저에서 이완용이 가져온 문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그 밤, 강회에 찬 모습을 달을 바라보며,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하였던 장수들의 이름을 읊조렸다. 일본은 그리고 황제국이었던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을 ‘조선’으로 바꿈



남산 한국통감부 근처에 있던 통감관저. 나중에 조으로서 제후국으로 다시 강등시켰 선충독부관저가 되었다. 다.³⁰⁾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그의 세력권이었던 오사카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군대를 보내기 위하여 큐슈 서북쪽 가라츠(唐津)에 본진을 만들고 성을 짓는다. 이 성이 名護屋(나고야)성이었다. 토요토미가 죽고, 도쿠가와 막부 수립 후 이곳은 중앙 정부에서 멀어지고 지금은 성의 흔적만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나고야 성 박물관³¹⁾이 위치하고 있다. 흔적만 남은 성터. 멀리 현해탄을 바라보는 곳에 ‘名護屋城跡’라고 쓰여진 큰 비가 있다. 이 비석에 글을 쓴 이는 東郷平八郎(도고 헤이하치로)다. 그는 메이지 유신의 양대 세력이었던 사츠마·가고시마 출신의 해군 장군이다. 러일전쟁 시 일본 연합 함대 사령관으로 러시아 발틱함대를 동해에서 대파하였던 장본인.

30) 일본 내각 칙령 318호

31) 사가현에서 세운 나고야성 박물관은 특별한적인 나고야 성터와 그 일대의 보존, 정비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일본과 한반도의 교류의 역사를 조사, 연구, 전시, 소개하며 한일간 학술 문화 교류의 거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pref.saga.lg.jp>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비를 세웠을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정한론의 대표로는 큐슈 남부 가고시마 출신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를 들기도 한다. 당시, 정한론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였다. 정한론을 주장하였던 사이고 타카모리 등은 내치를 우선적으로 주장하였던 이와쿠루 도모미 세력에 밀려 실각한다(1873년). 이 두 세력의 대립은 이후 구마모토 성 전투로 유명한 西南戰爭(1877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한론에 반대하였다고 해서, 한국 침략을 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와쿠라 도모미를 중심으로 정권을 차지하였던 이른바 반정한론파는 이후 1875년 강화도 사건을 일으키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하는 정책을 펴던 것이다.

근대 일본에서 등장하였던 정한론의 뿌리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30~1859)으로 보기도 한다. 그는, 1830년 현재 일본 야마구치 현 하기(萩)에서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서양 군사학을 배우기 위하여 큐슈에 유학하였고, 1853년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왔을 때 그 위세를 보고, 해외유학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러시아와 미국으로 밀항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투옥 중에 저술한 유수록(幽囚錄)에서 그는 홋카이도, 오키나와, 조선을 정벌하고 북으로는 만주, 남으로는 타이완과 루손섬을 빼앗아야 된다고 하였다. 감옥에서 나와서 고향인 하기에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열었다. 이 교육기관에서 일본 기병대를 창설한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晉作), 일본 육군 총사령관으로 두 번이나 수상을 지낸 야마가타 아리토모, 초대 수상과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등 후에 메이지 유신의 중심 인물이 되는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요시다 쇼인의 사상은 이들 제자들에게 계승되어 이후 일본의 대외 정책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야마구치 기병대 대장으로 메이지 유신에 앞장섰고 수상이 되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정계에 입문하여 수상이 되었다. 1890년 의회가 개설되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국가의 독립과 자위에는 두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주권선을 지켜 타국의 침입을 막아야 하고, 둘째는 이익선을 방어하여 자신의 유리한 형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주권선은 바로 영토를 말하는 것이고, 이익선은 인접국과 접촉하면서 우리 주권선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금 열국의 틈새에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면 단지 주권선만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익선을 지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이익선의 핵심은 조선이다. ‘

당시 수상이 가지는 이러한 대조선관은 다른 정치가들과의 공유를 거쳐, 이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침략 사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슈우칸에 있는 제 2차 대전 전황그림

2. 탈아론

메이지 유신 이후, 아시아와 연관한 또 하나의 이론이 탈아론이다.

1984년부터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고액권 지폐인 만엔의 주인공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다. 일본에서 서양 사상 도입에 적극 앞장섰던 게이오 의숙의 창시자이고, ‘학문을 권함’이라는 글로 유명한 후쿠자와. 그 역시 한국에 대한 글을 남기고 있다.

그는, 1875년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되었던 상황에서 후쿠자와는 이에 반대하는 글을 남긴다.

조선을 아시아의 일개 작은 야만국으로 그 문명의 양상은 일본을 따르기에는 먼나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나라와 무역을 해도, 통신을 해도 이로울 것이 없으며 학문과 병력은 보잘 것 없다고 폄하하고 조선이 자청하여 일본의 속국이 된다고 하여도 기뻐할 일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1881년 9월에 간행된 時事小論에서는 조선에 대해 바뀐 그의 태도를 볼 수 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서양 여러나라가 위세를 앞세워 동양으로 들이닥치는 양상으로 비유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동양의 여러 나라, 이웃인 지나, 조선등이 우둔해서 그 기세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무력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文으로 이들을 유도해 빠르게 근대의 문명으로 들어서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그가 교류를 가진 조선인은 유길준, 김옥균등이었다. 일본에 신사유람단으로 갔던 어윤중을 수행하였던 유길준을 유학생 신분으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알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초기 후쿠자와는 게이오 의숙에 많은 이웃의 조선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문명으로 ‘유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1884년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한국에 대한 생각은 바뀐다. 이웃나라의 변화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 아시아의 미개 상태에서 벗어나(탈아) 서양 문명국등과 진퇴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조선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서양인이 이를 대하는 방식과 함께 해야한다는 의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일본 우월주의는 더 나아가 일본의 힘으로 개진을 독촉하고 따르지 않으면 다음에는 채찍을 동원해 협박교육주의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일으킨 일본의 청일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3. 한국에 대한 우호론적 시각

이에 비해 조선.한국에 대한 우호론적인 시각. 인물들도 등장한다.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1668~1755)를 들고는 한다. 에도 시대 쓰시마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던 통역관으로 두 나라 사이에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식민지 시대에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여러 명의 일본인들도 있었다.

일본이 정치가이자 교육자였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1878~1933)는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한국 통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선사람에 대한 차별 철

폐, 武人정치 폐지, 동화정치 포기, 언론의 자유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종교철학자였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1889~1961) 역시 유명하다. 1924년 조선미술관을 설립하였던 그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지배하는 것을 서술하고는 했다. 조선의 흙이 되고자 했던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1891~1931) 역시 조선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였던 사람 중의 하나였다. 일본인 변호사였던 후세 타츠지(布施辰治/1880~1953) 역시 한국인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중의 한명이다. 대만의 독립운동도 지원했던 그는 1919년 2·8독립선언으로 체포된 한국인 유학생 변호를 시작으로 한국의 독립 운동에 관련한 많은 사건을 변호했다. 특히,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을 둘러싸고, 전라도 나주의 궁삼면 토지 분쟁에서도 활약하기도 하였다.

4. 현재 일본의 대 한반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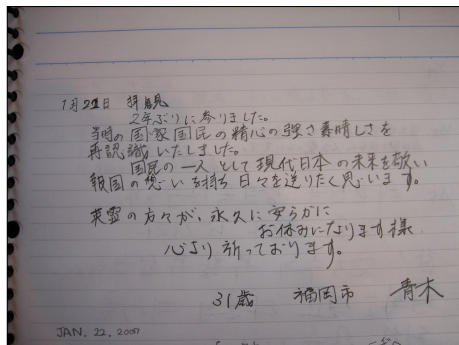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한국은 해방되었다. 그리고, 일본인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 대장성에서 1950년에 완성한 ‘일본인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라는 책이 있다. 전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鈴木武雄(스즈키 다케오)는 조선의 경제가 비참한 상태에서 일대 발전을 이룬 것은 일본의 지도결과이며, 조선에 지원한 일본의 재정은 정산하면 마이너스라고도 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 회담 중, 1953년 3차 한일회담 일본 측 대표였던 구보다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는 36년간 일본의 한국 강제 점령은 한국민에게 유익했고, 대일 강화조약 체결 전에 한국이 독립한 것은 위반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1967년, 역시 한일회담 일본측 대표 다카키 신이치는 한국을 지배한 것이 조선을 낮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20년 쯤 일본이 조선을 더 가지고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21세기 요즘은 어떤가.

일본의 호텔 그룹인 아파 그룹에서 2008년 처음으로 ‘올바른 근현대사론’ 논문 현상 공모가 있었다. 여기에서 1위를 차지한 논문이 당시 자위대 항공막료장이었던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였다. ‘일본은 침략국가였는가’ 라는 글에서 일본은 조약에 의하여 중국 대륙과 조선반도에 군을 주둔시켰고, 다른 열강에 비하여 일본의 지배는 다르다고 하였다. 일본의 아시아 지역 침략을 ‘대동아전쟁’ 이라고 하고, 일본이 그러한 전쟁에서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인종평등한 세계가 되는 것은 백년, 이백년 늦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유슈칸을 둘러보고 쓴 감상문. 당시 일본인들을 존경한다는 내용이 띄어져 있다.

이러한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이다. 일본에서 발행된 모든 교과서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1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 8종의 교과서 중에서 이른바 후소샤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에 대해서도 지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술로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도 검정에서는 한국과 관련하여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지리 4종, 공민교과서 7종이 통과되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여 영토야욕을 노골화하고 왜곡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대한 서술 역시 그 서술은 자못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自由社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국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로전쟁 후 일본은 한국통감부를 설치하여 보호국으로 만들고 근대화를 추진해갔다. '고 서술하고 있다. 역시 '대동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와같은 서술은 育鵬社(이쿠호샤) 서적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도 있다. 2차 대전에 대하여 '전쟁 초기 우리 나라의 승리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보수·우익의 시각과 함께 과거 반성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였다. 1995년 8월 15일.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내각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태평양 전쟁에 대한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대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2011년 8월에는 칸 나오토 총리의 담화도 있었다. 그는 한일합병조약 100년에 즈음하여 정치적, 군사적 배경 하에 한국인의 나라와 문화를 빼앗고 민족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었다고 전제하면서 사죄하였다.

저는 역사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데 솔직하고자 합니다. 아픔을 준 측은 잇기 쉽고, 당한 측은 그것을 쉽게 잊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대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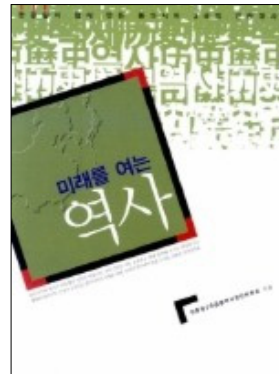
그 후속 조치로 일본 통치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일본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 왕조의궤등의 도서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담화 이외에도 일반 시민단체의 반성어린 발표도 있었다.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한국측 109명과 일본측 105명의 지식인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875년 강화도 사건

부터 시작된 근대 일본의 조선·한국 침략의 강제성, 불법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병합에 대해서 ‘不義不正한 행위’이며, 따라서 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규정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과거를 정의하는 것 뿐아니라, ‘공동의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역사에서 유래하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5. 2001 교과서 문제와 연대, 그리고 동아시아....

1980년대부터 시작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2000년대에 새로운 결과를 낳았다. 바로 이전과는 다른 시민들의 연대였다. 정부만이 아닌 다양한 시민·학자들의 연대로 활동과 결과물들이 나왔다. 일본이 우익에서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성과가 아니었나 싶다. 일본 千葉縣 ‘일본·한국관계사 연구회’에서 수업 부교재용으로 간행한 책을 전국 역사 교사 모임에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를 중심으로 연구자들과 일본 学芸大学校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연구회에서는 10여년에 걸친 교류와 심포지움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한일 공통 역사 교재 한일 교류의 역사-선사부터 현대까지』(혜안, 2007)를 간행하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한 동시학적 관점에서 한·중·일의 학자, 교사, 시민들이 참여한 ‘한중일 3국 공동 역사편찬위원회’에서 『미래를 여는 역사』(한겨레신문사, 2005)를 펴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대구지부와 일본 히로시마현 교직원조합의 역사교사들이 임진왜란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조선통신사』(한길사, 2005)를 출간하였고, 전국역사교사모임 산하 한일역사교사 교류모임 교사들과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 전현직 교사들이 『마주보는 한일사1,2』(사계절, 2006)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세계화 시대에 각 지방 자치단체 단위로 다양한 교류, 그리고, 학생들도 수학여행등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부터 고등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동아시아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시도되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銀 유통

한 명기 (명지대 사학과)

1. 銀 일반론

-銀 : 국제교역의 결제수단

- 銀은 상품이자 화폐로서 상품의 交換이나 蓄積에 이용, 政治權力의 財力을 표현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通貨로서, 지역의 범위를 넘어 流通하며, 國際交易의 결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

근래 濱下武之는 前近代 세계의 交易圈을 ① 東아시아·東南아시아 交易圈, ② 印度洋交易圈, ③ 아라비아海·地中海交易圈, ④ 地中海·西유럽交易圈, ⑤ 러시아·中央아시아交易圈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교역권을 연결하는 매개이자 유통수단으로서 銀의 존재에 주목

- 유통되는 화폐와 화폐용 금속은 별개로 존재, 전자는 조개부터 紙幣까지의 형태로, 후자는 국제교역 및 원거리 교역에 사용, 기원전 7세기 말~6세기 초 그리스와 소아시아 도시들에서 銀貨 주조, 위세 과시와 蓄藏 역할 때문에 金銀의 가치는 제고, 동시에 그 때문에 流通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기도

9세기~13세기 유럽의 일반 교역에서 金은 동방으로 유출, 낮은 인구밀도·무상의 부역노동·열악한 교통 상태로 금의 유통은 국지적 현상

-大航海時代와 銀의 대량 생산

- 유럽은 1320년대의 대기근, 1348년 흑사병 등으로 대재앙을 맞음, 기근과 전염병으로 경작 포기가 속출하고 전쟁 빈발, 인구 감소로 임금이 치솟자 소액화폐 유통을 늘리고 良貨의 금속 함유량 축소

1450년부터 1525년 무렵 인구가 다시 늘고 개간과 기술상의 발달로 경제 회복, 귀금속과 사치품의 가격 상승은 金에 대한 열망 증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각각 아프리카와 안틸레스 제도에서 金 획득

- 유럽인들의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진출은 당시까지의 地域經濟의 범위를 넘어선 활동 영역의 확대를 의미, 그 동기는 香辛料 획득과 各國이 域內經濟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 또 流通手段을 보다 많이 획득하려고 경쟁 야기, 15세기 유럽의 銀생산은 廣域交易에 충당하기에는 불충분, 그 귀결이 아메리카 大陸의 銀 生産으로 나타남

- * 13세기 제노아인들이 금을 찾아 아프리카 진출, 포르투갈의 경우 小國·교통 요충인 상황에서 貴金屬 갈망·14세기 말 騎士들 과멸과 모험 욕구·穀物 부족·노예와 고무·가죽·毛皮 수요 증대 등의 動因으로 해외팽창에 적극적

- * 콜럼부스,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 코르테즈, 피사로 등의 원정 속에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으로 속속 진출, 멕시코 정복(1518)·페루 정복(1524)
스페인 정복자들은 애초 아즈텍과 잉카제국이 보유한 金銀 탈취 주력, 점차 鑛山 개발에 나서 1530년대 이후 포토시(Potosi)를 비롯한 대규모 은광 발견, 이후 은 운반을 위해 20~60척의 大船團을 정기적으로 조직, 멕시코 鑄造局 설치(1535), 마닐라 건설(1571)

- Adam Smith는 ‘지리상의 발견’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사건”으로 평가, 이후 新大陸에서 사탕·옥수수·감자·코코아·담배 등과 함께 막대한 양의 金銀 유입
유럽은 16세기 초를 기준으로 1세기 동안 물가가 2~3배 오르는 價格革命, 고정된 地代 收入으로 생활하는 지주와 임금 노동자 타격, 상업혁명, 유럽에 의한 세계사의 개막, 거기에 南美 인디오의 가혹한 희생

- * 최초 採銀은 도가니 입구로 풀무 바람을 불어넣는 방식, 1559년 무렵 아말감 공법과 ‘mita 제도’ 도입
銀鑛石을 水銀, 소금, 다량의 물과 혼합, 은이 水銀과 반죽되고 수은이 증발, 시간과 연료 절약이 가능하고 低品位 광석도 제련 가능, 각 촌락에서 일정 비율의 mitayo를 강제로 동원하여 채광에 사역

- * mitayo들이 저임금에 착취당하면서 “스페인으로 보낸 것은 은이 아니라 인디오들의 땀과 피”라는 비판, 포토시는 ‘아메리카의 도가니’, ‘帝國의 보석’이자 동시에 ‘저주받은 산’이자 ‘인디오의 도살자’, ‘不義의 深淵’으로 상반된 이미지

2. 중국의 銀 경제와 유통

-紙幣, 銅錢과 銀納化의 진전

- 중국의 전통적 화폐는 紙幣와 銅錢, 12~15세기의 경우 紙幣가 주로 화폐로 유통, 銅錢은 수출되어 지역의 화폐 구실, 元末 交鈔 남발로 인플레이 극심→ 銀에 대한 관심 제고
明은 애초 寶鈔 등 지폐 유통에 주력하면서 銀을 병용, 국내생산이 빈약한 가운데 1436년 南直隸와 강남 6省에서 田賦가 銀納化하면서 銀 수요 급증
다시 銀鑛 개발에 나섰지만 1448년 ‘鄧茂七 반란’ 등의 부작용으로 다시 소극적, 이후 一條鞭法이 시행되고 막대한 九邊之費 등으로 銀 수요는 다시 폭증

-南美產銀과 日本銀의 다량 流入

- 대항해시대 이후 포르투갈 등은 중국과 무역에 적극적, 1514년 나타난 포르투갈은 1557년 이래 마카오를 거점으로 약 1세기 동안 중국무역에 활발히 종사

“포르투갈인들은 東印度에서 銀貨 등을 중국에 수송하여 거액의 이익을 얻고, 마카오에서 絹과 金을 일본에 轉送하여 다시 큰 이익을 얻고, 일본의 銀을 중국에 가져가 같은 이익을 얻고, 중국으로부터 인도로 구리·絹·金 등을 수송한다”

- 스페인은 마닐라를 거점으로 포도시-아카폴코를 거쳐 온 南美産 은화를 중국에 유입, 많은 경우 한해 300만 페소 정도의 은화가 중국에 유입, 마닐라에는 福建 출신 등 중국상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생기고 絹織物을 비롯한 중국 상품이 마닐라를 거쳐 멕시코 등지로 수출, 이 때문에 스페인산 견직물의 멕시코 수출이 타격
16세기 후반부터 스페인은 너무 많은 은화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려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 16세기 후반 남미산 은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유입
- 16세기 말~17세기 초에는 日本銀의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가, 1603년 德川幕府가 들어선 이후 거의 200,000kg 육박, 銀은 대부분 중국으로 유입되어 生絲 등을 수입: 1630년대 초 일본은 중국에서 연 평균 60,000~90,000 kg에서 280,000 kg의 生絲를 수입,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의 中日貿易의 기록적인 팽창은 양국경제에서 중요한 의미, 일본은 중국에 엄청난 분량의 銀 공급, 중국은 일본에 대해 사치품과 원자재, 섬유산업의 소재 제공

-銀 부족의 심화와 明清交替

- 막대한 양의 外國銀 바탕으로 화폐경제 성장·交換의 효율성 제고·세계개혁 등이 가능하고 도시 인구 격증·농업의 상업화가 진전, 銀은 江南 뿐 아니라 九邊으로 흘러들어 大同, 開原, 撫順 등지에서는 交易과 商業의 붐을 일으킴(→ 누르하치, 李成梁, 毛文龍)
- 16세기 중반 이후 격증하는 軍事費, 대규모 공공사업 지출, 제국의 사치스런 행사비 등으로 문제 야기→ 萬曆皇帝 아들 5인의 婚禮와 典禮에 약 45만 kg의 銀을 허비
이런 와중에 17세기 초 강남 지방에서는 賦稅와 役의 부담, 부패한 관리들의 학정, 기근 등으로 인해 농민들 고통 증가, 여기에 高利貸, 土地兼併, 과도한 지대 요구 등이 이어지며 1630년대와 40년대 農民叛亂 야기
- 九邊으로 간 銀이 돌아오지 않고, 退藏까지 심화되는 와중에 1630년대 중반부터 南美産 銀의 유입도 해마다 5만~10만 kg 정도씩 급감. 또 日本産 銀貨 유입도 격감
유통 과정에서 銀貨가 부족해지자 위조된 銅錢이 시장에 만연하고 銀·銅의 比價 차이 급격히 확대, 信用 유지가 불가능, 穀價의 급등, 상품생산 붕괴 등을 초래, 왜란 무렵 명 조정은 鑛稅를 부과하여 커다란 民怨을 야기
1640년대 초 부세 수취가 하락, 조정은 內亂 진압과 滿洲族 방어를 위해 紙幣 도입 고려, 1644년 李自成 叛軍은 北京의 太倉이 비었다는 사실 인지, 明의 멸망은 정권이 계속 가능

할 수 있는 財源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도 한 원인

- 1650년대와 1660년대 초 清朝는 鄭成功 등 反淸勢力 진압에 부심: 遷界令 발표, 30년 이상 지속된 遷界令의 결과 1683년 鄭氏의 거점인 臺灣 정복

鄭氏들은 상당한 양의 生絲와 상품을 수출하여 일본산 銀을 유입하여 銀貨 공급을 늘리는데 기여, 천계령 이후 銀·銅의 유입 격감, 경제적 위축을 불러 康熙 초반(1661~1685)은 '경제적 쇠퇴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은화가 결핍되자 穀價 하락, 상품 판매 부진 속에 양자강 델타 지역 등의 고통이 심화

- 이후 反淸勢力이 진압되고 청 내정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외국인의 유입은 다시 회복, 乾隆·嘉慶·道光 연간까지 유럽에서 유입되는 銀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은의 대종
18세기 중엽에는 스페인 상선이 직접 廣東에 입항하고 매년 300만 스페인 달러가 필리핀으로 수송되어 중국으로 공급, 스페인이 마닐라를 건설한 이래 200여 년 동안 약 4억 달러의 銀이 유입되었는데 그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는 통계

3. 일본의 銀 경제와 流通

-화폐 유통, 銀 생산 급증, 銀의 대외수출

-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銅錢 유통이 활발, 13세기 이래 일본에서는 莊園의 年貢을 동전으로 납부하는 金納化가 진전되어 15세기에 본격화, 원격지 수송에 따른 부담과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화폐량이 부족하여 문제, 이 때 부족한 화폐를 보충하기 위해 宋錢과 明錢을 수입하여 사용

- 15세기까지 동전 유통이 활발한 가운데 16세기 초 조선에서 鉛銀分離法(-灰吹法)이 전수되어 銀鑛 개발이 확산되어 은 생산이 급증, 늘어난 은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와 조선 연해에서 밀무역이 급증→ 중국의 海禁과 맞물려 倭寇의 발호로 이어짐

이어 大航海時代의 여파로 포르투갈 상선 등이 내왕하면서 무역이 활성화되어 銀의 해외 수출 또한 급증

일본은 이 시기 은, 구리 등을 수출하고 명과 조선에서 다량의 生絲, 견직물, 목면 등을 수입

- 은 생산으로 경제적 활력이 증대하는 가운데 16세기 말~17세기 초 畿内, 關東 등지에서 무역과 광산 개발이 활발해지고 화폐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정치적 통일 유지에 기여: 織田信長·豊臣秀吉·徳川家康의 등장

16세기 후반, 17세기 초 곡물의 매집과 방출, 광대한 규모의 군대 유지, 거대한 城과 城下町의 건설, 兵農分離 등은 은경제와 화폐경제 발달에 바탕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군은 端川 등지에서 銀鑛 개발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거니와 조선 침략과 명 정벌 시도는 16세기 중엽 이래의 경제적 활황 속에서 시도된 행

위로 파악 가능

나아가 대항해시대 이후 平戶, 나가사키 등에는 네덜란드와 영국 商館이 설치되어 교역이 활성화되고 서양 문물과 정보가 유입되는 창구로서 기능

-화폐 유통 체제와 銀 수출의 통제

- 江戸時代 일본에서는 金, 銀, 銅錢이 병존, 金과 銀을 사실상의 본위화폐로 병존시키며 동전을 보조화폐로 운용
대체로 금1 냥은 60文=동전 4貫文의 比價를 유지했으나 실제 교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 關東과 關西에서 각각 금과 은을 기준으로 물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거래가 이루어짐
나아가 복잡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兩替商이라 불리는 換錢商이 존재하여 각 지역의 화폐를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
- 한편 德川幕府는 1639년 천주교 차단을 위해 포르투갈 상인들의 來航을 금지하고 이후 대외 무역을 네덜란드·조선·중국·琉球 등으로 축소시키는 조치, 하지만 중국산 生絲 등의 수요는 여전
한편 1630년대 후반 이후 은 생산이 줄어드는 추세, 이와미 銀鑛을 비롯하여 대부분 광산의 생산량 쇠퇴, 銀 공급이 달리자 1636년 幕府는 새로운 銅錢을 주조하여 유통시킴, 이것은 銀銅 比價에 불안정성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 더욱이 최악의 寬永 대기근(1641~42) 등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
- 막부는 1660년대 화란인에 대한 長崎에서의 은 수출과 1680년대 중국인에 대한 은 수출을 억제(-御定高仕法, 1685): 1680년대 이후 중국선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은은 6,000貫目에서 줄기 시작하여 1685년~1697년의 경우, 연 평균 300貫目으로 격감
은화 수출 억제와 銅錢 도입했던 이후 일본 경제는 점차 위기에서 벗어나는 추세, 1683년 臺灣이 정복되고 이어 遷界令이 해제되자 中日 사이의 무역은 급격히 다시 증가, 元祿 연간(1688~1703) 일본산 銀과 구리는 중일교역과 일본의 번영에 중요한 역할 담당
- 하지만 18세기가 되자 일본의 鑛山들은 늘어나는 귀금속 수요를 감당 불가, 幕府는 다시 귀금속 수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중일무역 또한 쇠퇴 기미를 보임
중국은 대신 유럽·南部 아시아·南美로부터 다량의 銀貨를 확보하면서 '떠오르는 세계경제'와의 연관이 깊어졌던 데 비해, 1세기 이상 활기찬 국제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金銀銅의 산출이 줄어들자 일본은 이후 內需中心의 경제체제로 변모하는 추세를 보임

3. 조선의 銀 경제

-銀 유통의 추이와 對日・對中國 私貿易

- 한국에서도 金銀을 가치 저장과 증여,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역사는 길지만 은을 공식적으로 화폐로 사용한 것은 고려시대의 銀瓶과 碎銀이 최초
고려는 또한 銅錢과 鐵錢을 주조하여 유통시키기도 했음, 조선 초의 경우 楮貨 등을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16세기까지 화폐의 대종은 米와 布. 다만 16세기에 이르면 옷감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麤布가 화폐로 유통되는 상황이 나타났던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화폐경제가 발달할 조건이 무르익고 있었던 것을 암시
- 16세기 鉛銀分離法이 개발되고, 端川 등지의 은광이 개발되는 가운데 은 유통의 분위기가 고조
이 시기 농업생산력 증대와 토지 집중으로 地主制가 발달하고 유통경제가 활성화되면서 場市가 늘어나고 富商大賈들이 성장, 宮禁・戚臣・權貴 등과 연결된 부상대고들은 대외 무역에 종사
1540년 무렵부터 일본은 이 대량 유입 (← 은 생산 증가, 1523년 寧波의 亂과 勘合貿易 중단의 여파), 부상대고들은 일본은을 갖고 紗羅綾緞 등 중국산 사치품 수입에 종사
銀鑛 潛採, 海澤地 개발, 貢物 防納, 농민층 유리 등과 맞물려 권력층과 부상대고들의 결합은 16세기 조선사회를 상당히 동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조선에 유입된 일본은은 이렇게 대부분 명의 건직물 등을 구입하는데 들어가 다시 일본으로 중개무역이 이뤄졌고, 그 과정의 이익이 여진으로부터 貂皮나 人蔘 등을 살 수 있는 구매력으로 연결, 16세기 후반 조선 국경과 명의 변경을 연결하는 부분을 본거지로 했던 누르하치가 후에 요동의 패권의 장악한 것은 우연이 아님

-임진왜란과 銀, 重商論 대두

- 임진왜란 당시 명군 참전은 조선사회가 銀을 再認識하는 계기로 작용, 명군의 軍糧 折銀 시도와 鹽菜銀 지급, 명 상인들의 同行을 목도하면서 조선도 유통수단으로서의 은의 중요성을 인식
실제 명군 지휘관들은 조선에 대해 銀鑛開發과 對外貿易을 강조하면서 군량 공급을 원활히 하라고 압박하는 상황
이에 군량 마련과 전후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李德馨, 柳夢寅, 高尚顏 등에 의해 採銀論과 重商論이 확산되는 조짐, 하지만 宣祖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명의 銀 수탈을 우려하여 採銀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 전쟁이라는 外因에 의해 조선사회에서 銀에 대한 관심과 유통의 추세가 높아진 것은 사실

“근래 술과 고기, 두부, 鹽醬이나 멸감, 마초에 이르는 소소한 물건들의 값을 (치르는데) 모두 은자를 사용하는데 중외의 백성들이 이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군사들과 거래할 때 시험삼아 해보다가 시일이 오래되매 이미 습속으로 굳어졌습니다. 술이나 멸감을 파는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먼저 은을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익의 소재를 알고서 그러는 것입니다.”(『宣祖實錄』 권99 선조 31년 4월 壬戌)

하지만 銀 자체가 일상에서 화폐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황에서 왜란 이후 17세기 초 光海君, 仁祖대에 이르면 銀이 詔使接待을 비롯한 對明外交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음→ 銀의 정치적 지출

당시 조선에 왔던 明使들은 冊封 등을 벌일 때 자신들이 베푼 ‘再造之恩’ 등을 내세워 수만냥의 은을 뇌물로 받아 가는 악순환이 벌어짐

-17세기의 증개무역 성행과 日本銀

- 조선은 1609년 일본과 己酉約條 체결하고 무역 재개, 倭館과 通信使도 재개, 왜란 직후부터 17세기 말까지 조선은 왜관을 매개로 일본의 은을 수입하고 중국의 비단과 생사를 수출하는 증개무역을 활발히 벌임

“司諫院啓曰 南北潛商之事 自祖宗朝痛加禁抑 而近來國綱解弛 人不畏法 潛商之輩 少無忌憚 金帛紬繪之屬 滿載絡繹 盡賣於東萊 而倭人利之 問其所從來 至欲借路 自取於遼東開市之處 已極可駭”(『光海君日記』 권53 광해군 4년 5월 辛酉)

- 17세기 후반 일본의 대외교역에서 倭館의 중요성은 제고, 1678년(숙종 4) 草梁에 新倭館 건설된 이후 중국산 물자의 수입 루트로서 더욱 중요

1670년(현종 11)의 경우 조선 상인은 북경에서 은 60냥으로 白絲 100근을 구입해서 倭館에서 일본 상인들에게 은 160냥을 받고 판매

“上曰…… 且倭人奢侈莫甚 蓋以土產金銀而然也 我國北來白絲 皆入倭 未知其用於何處…… 閔鼎重曰 倭中 前日則自張機通貨於南京 卽今清國禁其通貨之路 故我國之質得白絲者 皆用於倭館矣…… 若於北京 則六十金 可得百斤白絲 而往市倭館 則白絲百斤之價 卽一百六十兩銀子耳”(『承政院日記』 219책, 현종 11년 3월 3일)

- 한편 17세기 중·후반 이후 일본에서 조선 人蔘에 대한 붐이 나타나면서 조선 人蔘의 대일 수출이 급증, 당시는 막부가 은 유출을 주 줄이기 위해 改鑄를 통해 慶長銀의 품위를 낮추던 와중, 그럼에도 對馬藩의 強請에 의해 조선 人蔘 수입을 위해 1710년 人蔘代往古銀이라는 特鑄銀 사용을 허용할 정도

- 당시 왜관의 상인들은 白絲, 人蔘, 絹織物 등의 상품을 구입할 때 결제 대금인 銀이나 銅을 미리 지불하고 상품은 나중에 인수하는 被執이라는 방식의 거래를 이용
- 한편 遷界습이 폐지되고 展海습이 발포된 이후인 18세기 초 이후 조선의 중개무역의 거점으로서의 위치는 점차 상실
- 나아가 1721년 무렵 幕府의 德川吉宗이 조선 인삼을 국산화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조선 인삼의 일본 수출도 점차 막히게 되면서 일본은의 조선 유입은 격감하는 추세
- 더욱이 막부 말기 재정이 악화되면서 朝鮮通信使의 에도 유치도 종언(1811년 易地聘禮), 일본과의 교역이 여의치 않게 되었던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은 이제 청과의 交易에 중점, 종래의 은 대신 인삼을 청으로 반출하는 八包貿易 등이 출현

<참고문헌>

- * 百瀬弘, 1980 「明代における中國の對外貿易」 『明清社會經濟史研究』 所收, (東京, 研文出版)
- * 한상권, 1983 「16세기 對中國 私貿易의 전개」 『김철준화갑기념논총』 (지식산업사)
- * WILLIAM S ATWELL, "Some Observations on the "Seventeenth-Century Crisis" in China and Japan"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LV No. 2, 1986)
- * 濱下武志, 1991 「銀の流通から見た世界經濟のネットワーク —十六—十九世紀—」 『シリーズ 世界史への問い 9』 所收 (東京, 岩波書店)
- * 濱下武志, 1991 「中國の銀吸收力と朝貢貿易關係」 『アジア交易圏と日本工業化1500-1900』
- * 한명기, 1992 「17세기 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奎章閣』 15
- *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 * 石橋崇雄, 2000 『大清帝國』 (東京, 講談社選書 메チエ)
- * 大庭 修, 1999 『德川吉宗と康熙帝 -鎖國下での日中交流-』 (東京, 大修館書店)
- * 田代和生 著·鄭成一 譯, 2005 『왜관-조선은 왜 일본 사람들을 가두었을까?』 서울, 논형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김택민(고려대학교)

1. 중국과 중원·중원왕조의 개념

전근대 시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또는 중원이나 중원왕조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국’이라고 말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것은 현재의 중국을 의미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고, 그것은 962만km²의 영토와 약 13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이다. 중국에 대한 이런 설명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옳지 않은 점이 있다. 달리 말하면 대부분의 시대에 현재의 영토 가운데 많은 부분은 중국 땅이 아니었다. 또한 현재 중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수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선조들은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민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들을 아울러 ‘신중화민족’이라는 민족개념을 만들고, 그 민족들의 거주지를 모두 자국의 영토로 확보하고 있지만, 그 같은 규모의 국가가 완성된 것은 경우 200년 전이고, 그것도 한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족과 적대적이었던 만주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에 중국이 굴절된 근대화의 과정을 경험했고, 한 때는 제국주의 세력의 반식민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영토 면에서 큰 손실 없이 청나라의 유산을 극히 일부를(외몽고, 연해주, 중앙아시아 일부) 제외하고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화 시기의 수혜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근대의 거대 중국이 성립하기 전에 중국이라고 하면 대개 화북평원을 의미했다. 근대 이전에 중국은 황하문명 또는 중국문명의 터전이 되고 역사의 주된 무대가 되어왔던 화북평원 그 자체를 지칭하거나 그곳에서 흥기한 왕조를 의미했다.

화북평원을 역사에서는 항용 중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종족의 주류는 농경민인 한족(漢族)이었다. 따라서 거주민으로 본다면 중원의 역사는 한족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족 외에 다른 민족이 세운 왕조가 중원을 차지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중원의 역사는 곧 한족의 역사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선 중원을 차지한 한족의 통일왕조로는 진(秦, B.C. 221-207), 전한(前漢, B.C.. 201-A.D. 8), 신(新, 8-22), 후한(後漢, 25-220), 진(晉, 265-316), 수(581-618), 당(618-907), 북송(960-1126), 명(1368-1644) 등이 있다. 이 왕조들은 중원의 패권 쟁탈전에서 승리한 자가 세운 정권들이다. 이 왕조들의 영토는 각각 시대마다 다르지만 초기의 전성기를 제외하면 대개 중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이나 명을 예로 들면 현재 중국 영토의 1/3을 넘지 않는 정도였다.

한족 왕조 외에 중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차지한 이민족 왕조도 적지 않다. 4세기 초부터 5세기 초까지 약 130년 동안 주로 다섯 유목민족이 세운 이른바 오호(五胡) 16국과 북조의 왕조들(북위, 북제, 북주),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존속했던 요, 금, 원, 17세기에서 20세

기 초까지 존속했던 청은 한족 아닌 이민족이 세운 왕조이다. 오호의 16국과 북조왕조들은 황하 이북의 중원 북쪽 지방에 서서히 침투해서 세력을 결집하여 정권을 세워 황하 이북을 지배하였는데, 그 시기는 302-581년까지 약 280년이다. 거란족의 요(遼, 907-1125), 여진족의 금(金, 1115-1234), 몽고족의 원(元, 1206-1279-1368), 청(淸, 1616-1644-1910)은 초원 지대에서 흥기한 뒤 중원을 침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하였다. 요와 금은 중원의 일부만을 차지해서 지배했는데, 몽고가 일부를 지배한 시기까지 포함하면 그 기간은 약 250여년이다. 원과 청은 중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을 영토로 확보했는데, 그 기간은 약 350여년이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국역사의 터전인 중원을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전부 혹은 일부를 지배한 기간은 880여년이다. 그것은 진나라가 통일왕조를 구축하는 기원전 221년부터 현재까지 약 2200여년의 40%에 상당한다. 이로 보면 한족이 중원의 역사를 주도하지 못한 시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중원을 지배한 이민족왕조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영토 내의 모든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키고 있다. 그리고 몽고족의 원왕조를 현재의 중국, 이른바 대중국의 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몽고족들은 중원을 지배영역의 일부로 생각했고, 한족은 피지배 대상으로 간주했다. 달리 말하면 스스로를 중화왕조로 자처하지 않았다. 청 왕조는 중화왕조로 자처했지만, 그 왕조의 지배층은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어서 오늘의 중국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역사’ 대신 ‘중원의 역사’ 또는 ‘동아시아의 역사’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바라보아야 이 지역의 역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밖에 중원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한 적이 없지만, 부단히 중원을 향하여 공격의 화살을 돌린 많은 민족들이 있다. 한대에는 흉노가 있고, 위진남북조 때는 철륵(연연) 등 북방 민족과 남서쪽의 이민족들이 등장하며, 당대에는 돌궐, 회흘, 토번 등 많은 민족 명이 등장한다. 명대에도 몽고족의 압박이 컸다. 근대에는 일본이 중원을 공략하였다. 아마도 동아시아에서 중원을 침공하지 않은 민족 또는 국가는 한반도의 왕조 내지 민족 외에는 없지 않나 생각된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역사는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원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왜 중원쟁탈전에 뛰어든 것일까? 그 해답은 동아시아의 지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2. 동아시아의 지리적 구조와 중원

동아시아는, 북쪽의 사막과 초원과 동토지대, 서쪽의 사막과 높은 산맥, 남쪽의 늪지대와 열대우림, 동쪽의 태평양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³²⁾ 이 폐쇄적인 지역의 동쪽에 중원 평원이 자리 잡고 있다. 중원은 북위 32-40.30도, 동경 113-121도 사이에 위치한 대평원으로 면적은 남한의 4배에 가까운 38.7만km²이다.

중원 평원은 원래 대부분 저습지와 호수로 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황하·회하·해하에 의해서 침식된 황토가 퇴적되어 저습지와 호수가 메워지고 바다 쪽으로 육지가 확대되어 이 평원이 형성되었다. 세 강 가운데 황하가 이 평원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황하

32) 존 K 페어뱅크 등 저, 김한규 등 역, 『동양문화사』상, 을유문화사, 1991, 4-5쪽.

는 수십만 년 동안 매년 평균 16억t씩 황토를 실고 와서 비옥한 중원 대지를 조성하였다.

중원은 퇴적평원으로 토양이 원시농경에 적합했기 때문에 최초로 문명이 출현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기원 전후에는 중원 평원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원 전후 시대에 남한 면적의 4배에 가까운 중원의 대평원이 대부분 농업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중원 평원을 제외하고 이보다 광활하고 집중된 농업생산 지대가 형성된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중원 평원의 높은 생산성은 인구 부양 능력이 컸으므로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많은 인구가 거주하였다. 중국에서 비교적 믿을 만한 전국적인 인구통계는 A.D. 2년(전한 애제 원시 2년)의 5천967만 명인데, 이 가운데 57.1%인 3천293만 명이 중원에 거주하였다. 여기에다 중원의 일부분이라고 해야 할 관중의 인구 212만 명을 더하면 중원 인구는 3천50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6% 이상이 된다. 당시 중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4에 가까웠을 것으로 학계는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 당시 중원 인구는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되어 세계 인구의 100명 가운데 15명 이상은 이 지역에 살았던 셈이다.³³⁾

이에 비하여 북쪽의 사막과 초원은 기후가 건조하고 토양이 척박하여 토지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인구가 유목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1명/km²를 넘지 않는 곳이 많다. 서쪽에는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과 같이 5000m가 넘는 엄청난 거대한 아시아의 중심 산 덩어리가 융기되어 있고, 이 세계의 지붕으로부터 거대한 산맥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250만km²에 달하는 이 산지에는 면적에 비해 극히 적은 수의 티베트인들이 야크 등을 방목하며 생활하고 있다. 양자강 이남은 원래 대부분 불모지에 가까웠으나 한족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여 그들의 거주지가 남쪽으로 확대되어 갔다.³⁴⁾

대륙의 동쪽에는 만주와 한반도가 북에서 남으로 이어져 있고, 바다 건너에 일본 열도가 있다. 만주의 대부분은 19세기에 한족들이 대거 이주할 때까지 소수의 만주족들이 반농반목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반도는 기후와 토양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하지만, 산지의 비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물산은 넉넉한 편이 아니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다.³⁵⁾ 일본은 기후와 토양이 한반도보다 양호한 편이어서 경지 면적당 인구 부양 능력은 높았으나 산지의 비율이 80% 이상이므로 절대 인구수는 많지 않았다.³⁶⁾

이와 같이 동아시아를 살펴보면 중원의 북쪽, 서쪽, 남쪽 지역은 고대농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농경이 가능한 한반도나 일본의 경우도 퇴적지가 크게 발달해 있지 않았으므로 고대적인 농경 방식으로는 생산성이 극히 미미했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광활한 중원 평원을 차지하여 경제력으로 월등한 중원왕조가 그렇지 못한 주변 지역에 대해 중핵적 위상을 확보했던 것은 오히려 필연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3) 김택민, 『3000년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신서원, 2006, 22-25쪽.

34) 류계현, 『중국 역사 지리』, 문학과학사, 1999, 34-35쪽.

35) 기원 전후 시기 한반도의 인구를 추정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5-7세기의 인구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여러 자료들이 전한다. 이런 자료를 기초로 고구려의 인구는 90-135만 명 정도로 보기도 하지만, (李玉, 「高句麗의 인구」, 『경기사론』 창간호, 1997, 3, 7쪽.) 이보다 훨씬 많게 보는 설도 있다. 백제 멸망 시점의 인구는 12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金起燮, 「4세기경 백제의 人口와 住民構成」, 『경기사론』 창간호, 1997, 3, 16쪽.) 이보다 많게 보기도 한다.

36) 8세기 무렵의 일본 열도의 인구는 500만 명으로 추정한다. (鬼頭宏, 『人口で見る日本史』, PHP研究所(日本 京都), 2007, 41쪽.)

3. 중원왕조와 주위왕조의 관계

생산성이 높은 중원 평원을 차지하여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우세한 중원왕조가 그렇지 못한 주위 지역의 왕조들에 비해 경제적·정치적으로 우월한 위상을 확보했다. 그것은 한족의 왕조건 이민족의 왕조건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러한 현상도 10세기 이전과 이후를 대별해 볼 수 있는데, 10세기 이전은 일반적으로 중원왕조가 동아시아 정국의 중심축이었다면 10세기 이후는 중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지한 초원의 유목왕조가 그것을 대신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10세기 이전이라도 시대에 따라서는 흉노나 돌궐·회흘처럼 기동성 있는 군사력으로 중원왕조를 위협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국면도 적지 않았다.

동아시아 각 왕조는 서로 군과 신을 칭하는 위계적인 형식의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특히 중원의 왕조가 주위 민족의 군주를 책봉하고 책봉을 받은 군주는 중원왕조에게 조공을 하는 형식의 외교관계가 국제 질서의 기본 틀이었다. 따라서 조공·책봉의 형식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공·책봉 형식의 국제 관계를 교과서에 기술하거나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는 그런 제도가 출현하게 되는 동아시아의 역사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용을 조직해야만 한다. 만약 먼저 중원왕조의 실체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주변 왕조가 조공하고 중원 왕조가 책봉하는 형식으로 성립했다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이 역사 현상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원왕조와 주변 국가 및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책봉체제(冊封體制)’나 ‘중화세계 질서(中華世界秩序)’ 또는 ‘화이질서(華夷秩序)’ 등과 같은 개념들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중국에도 이런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런 개념들이 지닌 원래의 함의로 인해 대개 ‘중심과 주변’ 관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지닌 大國의 지위가 더해져 ‘체제’·‘질서’ 등으로 묘사되는 이러한 관계 상태가 모두 역사상 중국인이 주동적으로 추구한 목표이거나 적극적인 경영의 결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오해라고 하면서, 중국 역사상 국가 및 민족 관계의 발전은 오로지 중국인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 안배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³⁷⁾

그 동안 우리는 강대한 중원 왕조가 주변의 약소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는 방식으로 동아시아사의 구도를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강대와 약소라는 도식적인 구도만으로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중원왕조를 중심으로 조공·책봉 관계가 성립했으니 중원이 중핵적인 위상을 차지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공·책봉 관계도 중원왕조가 우세한 힘으로 위압해서 성립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민족 세력들에 의해 포위되어 지속적으로 침략을 받고 있는 형국에서 중원왕조가 자구적인 수단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성립시켜 가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왕조들 및 일본의 고대 왕조와 중원왕조의 관계는 훨씬 더 의례적인 외교형식의 성격이 강하다.

4. 7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와 같은 관점을 7세기 초에서 10세기 초까지 존속했던 당왕조와 외국과의 관계를 통해

37) 王小甫,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2003, 5쪽. 이 책은 가까운 시일 안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다시 8세기 중엽을 분기로 크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6세기 말에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했다가 망하고 당이 이를 이어 중원을 통일적으로 지배하였다. 이 때 초원 일대는 돌궐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수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만주와 한반도 일원에는 고구려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수당과 대결하는 한편 남쪽으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해 갔다. 일본 열도에서도 점차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어 갔다. 동아시아의 서부에서도 토번이 점차 강성해져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한 축을 담당해 갔다.

이 같은 국제 형세는 일대 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수와 당은 먼저 직접적인 위협 세력인 돌궐의 내분을 조장하고 분열시켜 서로 대립하게 함으로써 각개 격파해 나갔다. 이른바 이이제이의 전략이 이것인데, 수·당은 돌궐의 일부 군장들에게 관품과 작위, 그리고 막대한 비단을 주어 우호세력으로 확보하고 용병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돌궐 제압에 성공한 수·당은 고구려를 계속 공격했다.

고구려는 수당에 대해서는 극히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면서 돌궐 및 말갈과 연대하여 수당에 맞섰다. 이러한 사실은 수 양제가 돌궐의 啓民可汗을 방문했을 때 그의 처소에서 고구려의 사자를 보고 경악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 양제는 고구려 사자를 보고 돌궐이 걸으로는 수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고구려와 연대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고구려에 대해 대대적인 침공을 결심하게 되며,³⁸⁾ 이로써 동아시아 역사상 최대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다.

고구려는 수·당과 대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백제 또는 신라를 압박하였다. 백제와 신라는 각각 수당의 고구려 견제를 이끌어내고,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백제가 멸망한 후 일본이 원군을 파병하여 백제 부흥을 도왔으나 실패했다. 또한 당나라는 신라까지 지배하려고 시도했으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까지 결집하여 저항했고, 마침 토번이 당의 서부에서 침공해 옴으로써 당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퇴각했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중원의 당, 서부의 토번, 한반도의 신라, 일본, 그리고 새로 재건된 북부 초원의 돌궐로 구성되는 안정된 구조를 이루었다.

8세기 후반 이후는 안사란으로 당조의 위상이 현저히 약화되고 대신 초원의 위그르와 서부의 토번이 강성하여 이 삼자의 관계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이와는 달리 신라와 일본 및 만주에서 새로 성립한 발해는 당과 극히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면서 긴박한 국제관계에 벗어나 있었다.

이런 구조에서 국제적인 외교형식은 조공·책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국제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서 전개되었으며, 조공·책봉과 같은 관계는 외교형식으로 극히 의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득실이 맞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돌궐·토번·위궤 등은 군사적으로 불리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될 때는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했지만, 군사적으로 우세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없을 때는 그 관계를 파기하였다. 그것은 신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라와 당은 연합하여 백제·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 과정에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일단 당이 신라의 국익을 침범할 위험이 노정되자 그 관계는 파기되었다. 즉 문무왕 14년(674) 신라가, 당에 반기를 든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백제 고지에 근거지를 두고 사람을 시켜 수비하니 당나라 황제가 크게 화

38) 『資治通鑑』 권181, 隋紀5 煬帝 大業 6년(610) 12월 조, 中華書局 標點本, 1956, 5652쪽.

를 내서 왕의 관작을 깎아버리라고 명령하고 唐에 와 있던 왕의 동생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삼고 유인케 등에게 군대를 일으켜 공격하게 했다.³⁹⁾ 그렇지만 당나라의 관작 삭탈 조치가 문무왕의 지위는 물론이고 그 정통성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신라는 당의 관작 삭탈 조치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唐軍을 한반도에서 축출했던 것이다.

5. 군사·경제관계와 문화관계

조공·책봉 관계는 정치적 목적 외에 경제적 또는 문화적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중원왕조와 주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중원왕조와 유목민족 국가들 사이의 군사·경제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중원왕조와 한반도의 삼국 및 발해 일본 사이의 문화관계이다.

7-9 세기의 상황을 예로 들면, 당조와 북쪽 및 서쪽의 유목민족 국가들 사이에는 간단없이 공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당조 측에서 이들 유목민족 국가들에게 몇 만 필에서 많게는 몇 십만 필의 많은 비단이 빈번하게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몇 개의 예를 들어 보겠다. 619년(당 고조 무덕 2년) 시필가한이 죽자, 고조가 애도하고 3일 동안 폐조하였다. 내사사인 정덕정(鄭德挺)을 보내 조상하고 부물(賻物)로 3만 단을 보냈다.⁴⁰⁾ 657년(당 고종 현경 2년) 12월, 서역이 평정되자, 그 땅을 곤릉(昆陵)·몽지(蒙池) 2도호부로 나누고, 아사나미사(阿史那彌射)를 흥석망가한(興昔亡可汗)으로, 아사나보진(阿射那步眞)을 왕절가한(往絶可汗)으로 삼고, 각각 물품 10만 필을 주었다.⁴¹⁾ 724년(당 현종 개원 12년) 3월, “사신을 파견하여 絹 8만 단을 거란과 해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⁴²⁾ 732년(당 현종 개원 20년) 배요경(裴耀卿)에게 견 20만 필을 가지고 해(奚)의 부락에 가서 공을 세운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⁴³⁾ 이밖에도 당 전기에는 돌궐 등 유목국가의 군주에게 많은 비단이 지급되는 사례를 무수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대개 유목민족들의 욕구를 채워주어 침공의 예봉을 피하는 한편 우호세력을 확보하여 다른 유목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라고 칭하는 당 전기의 성세도 실제로는 비단으로 얻어진 평화라고(Pax Serica)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더구나 안사란(安史亂) 이후에는 당조가 일방적으로 유목민족에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유목세력의 위협은 거의 대부분 비단을 주는 것으로 대처했다. 우선 난 평정에 공이 큰 회홀 군주에게 주는 상이 많았고, 공주를 시집보내는 비용도 컸다. 예를 들면 809년(당 헌종 원화 4년) 회홀[回鶻]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청혼해 왔을 때 혼례 비용이 5백만 관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으므로 중단한 일도 있다.⁴⁴⁾ 회홀과의 견마무역(絹馬貿易)도 당조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말 한 필의 값은 견 40 내지 50필이었고, 한꺼번에 수 만 필을 몰고 오기도 하는데 비루먹어서 부릴 수 없는 말이 많았지만 당조는 이를 거절할 힘이 없었다. 그리하여 말 값으로 지불하는 비단은 당조의 재정을 압박할 정도로 막대했다. 예를 들면 790년(당 덕종 정원 6년)에는 30만 필, 792년 7만 필, 822년 19만 필, 827년 20만 필, 다음해 23만 필 등등이다.⁴⁵⁾ 이렇듯 경

39) 『三國史記』 권7, 文武王下, 14년 조.

40) 『舊唐書』 권194상, 突闕上, 5154쪽.

41) 『冊府元龜』 권964, 外臣部 封冊2, 11340쪽하.

42) 『冊府元龜』 권975, 外臣部 褒異2, 11449쪽상.

43) 『冊府元龜』 권655, 奉使部 謀略, 7849쪽상.

44) 『舊唐書』 권195, 回紇傳, 5210-5211쪽, 『新唐書』 권217하, 回鶻傳하, 6129쪽.

제 관계는 활발했지만 이 지역과의 문화적인 교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당조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일본 사이의 경제 교류는 빈약해서 지급되는 비단은 겨우 몇 백 필을 넘지 않았다. 비교적 많은 수량으로는 637년(당 태종 정관 11년) 백제가 사절을 파견하여 철갑(鐵甲)과 조부(雕斧)를 바치자, 당 태종이 채백(綵帛) 3천단과 금포(錦袍)를 준 일이 있고,⁴⁵⁾ 731년(신라 성덕왕 30년) 신라가 우황 금은 등을 바치자 ‘의지향(仁義之鄉)’이고, ‘군자지풍(君子之風)’이 있는 나라로 추어올리면서 신라왕에게 능채(綾綵) 5백 필과 백(帛) 2,500 필을 준 사례가 있을 뿐이다.⁴⁷⁾

이렇듯 삼국 및 통일신라와 중원 사이의 경제적인 교류는 미미한 수준인데 비하여 서적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예가 적지 않게 보이는 등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학문을 중시한다.”든가 “군자의 나라다.”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당 태종이 삼국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주자사(朱子奢)에게 훈계하기를 “해동[海夷]은 학문을 중시하니 경은 대의(大誼)를 강론하되--.”⁴⁸⁾라고 하고 있다. 또한 737년(당 현종 개원 25년)에는 당조의 황제가 조문 사절에게 “신라는 군자의 나라로 불리며, 자못 학문을 알아서 중화와 유사한 데가 있소. 경의 학술이 강론에 능하기 때문에 이번의 사신으로 선발하여 보내는 것이오. 그 나라에 가서 경전을 천양(闡揚)하여 대국의 유교가 성대함을 알게 하시오.”라고 말했다.⁴⁹⁾ 이 같은 예는 당조가 사신을 교환한 70여 개의 국가 중 다른 민족의 국가들, 즉 유목민족 국가들에 관한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이 유목지역 국가와 농경지역 국가들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당조와 외교관계를 맺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모종의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목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때로는 책봉을 받고 신하로 칭하기도 했지만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당조는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때도 없지 않았지만 비단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명목상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평화를 유지해 갔다. 이와는 달리 동쪽의 농경국가들은 당조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공 사절을 파견했는데, 이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이들 농경국가들의 지배계층에게 필요한 문화가 창조되는 국가가 당조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45) 『舊唐書』 권195, 回紇傳, 5208-5212쪽.

46) 『舊唐書』 권199상, 百濟傳, 5330쪽.

47) 『三國史記』 권8, 聖德王 30년조.

48) 『新唐書』 권198, 朱子奢傳, 5647쪽.

49) 『舊唐書』 권199상, 新羅傳, 5337쪽.

동아시아 역사속의 북방민족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1. 거란(요)족의 발전과 요
2. 여진족의 발전과 금
3. 몽골제국의 발전과 원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동아시아에는 군사적 세력균형에 따른 다원적 국제관계가 지속되었고, 중국은 ‘동등한 국가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또 遼金夏元 정복왕조 역사를 정리한 케임브리지 중국사 6권에는 이 시기 국제관계의 기본 틀을 ‘조공체제’가 아닌 ‘다원체제(multistate system)’와 ‘조약관계(treaty relations)’로 보고 있다. (피터 윤)

비트포겔(Karl Wittfogel)은 遼·金·元·清 등 북방민족이 세운 제국들이 한족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그들 본래의 유목민족적 사회조직과 전통·문화·종교 등을 유지한 二元的 통치체제를 실시하였다는 ‘정복왕조론(conquest dynasties)’을 주장하였다. 비트포겔의 ‘정복왕조론’은 특히 서구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중국학계는 20세기 초 일본학자 白鳥庫吉 등의 일본군국주의 혹은 제국주의 논리를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윤영인)

1. 거란(요)족의 발전과 요

1) 거란 연구현황

요사 연구의 기본사료인 『遼史』는 거란의 1103년 실록과 금의 1206년 ‘요사’, 그리고 1247년 송나라의 葉隆禮가 찬술한 『契丹國志』에 의거하여 편찬되었다. 그 중 현존하는 자료는 『契丹國志』 뿐인데 송나라 관료의 한족중심적 편견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다. 거란의 대외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는 한국의 『高麗史』도 있다.

최근까지도 ‘중국’의 첫 번째 ‘정복왕조’ 거란(요)제국에 대한 연구는 한족중심적 편견과 기본 사료의 결핍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그 성과도 송, 명 등 한족왕조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1980년을 전후하여 거란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중국학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거란족의 근원과 명칭을 놓고 鮮卑, 東胡, 匈奴 등 여러 설이 제시되었는데, 鮮卑族의 宇文部 후예설이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아직 모든 학자가 수긍할만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중화다민족’ 개념을 재확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거란족이 중국 한족의 시조인 ‘黃帝’의 후예라는 다소 억측에 가까운 주장도 제기되었다.

중국학계의 거란 대외관계사 연구는 대부분 중원 한족왕조 송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거란-송(그리고 금-남송)의 관계는 신중국 성립 이래 이 시대의 ‘민족관계’를 논할 때 종종 언급되는 주제인데 거란과 금이 당시에 ‘외국’이었는데, 아니면 ‘중국’이었는데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학계는 지금의 중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그리고 중국을 구성하는 56개 민족의 모든 역사는 중국사에 귀속된다는 ‘현재주의’에 따라 거란과 금은 ‘중국’이라고 단언한다. 그리하여 거란과 송의 전쟁과 대립을 단지 “중국경내의 두 분열정권” 사이의 ‘내전’이자 ‘중국’ 내부의 ‘민족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또 거란의 침략전쟁 역시 외족의 외침과 한족의 저항이 아니라 ‘반동 대 진보’, 혹은 ‘정의 대 비정의’의 투쟁으로 보고 있다. (윤영인)

2) 요의 건국과 발전

요는 거란족의 야율아보기(太祖)가 만주의 시라무렌유역에서 일어나 세운 왕조로써, 그는 거란의 제부를 통일함과 동시에 주변 여러 민족을 쳐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태조의 아들 태종은 화북지방에 침입하여 북경(燕州)과 大同(雲州)을 중심으로 장성의 남쪽을 따라 소위 燕雲 16州를 영유하였다.

요는 제6대 聖宗대에 이르러 극성기를 맞았다. 그는 宋의 영토를 향해 남하하여 眞宗의 군대와 황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후 양국간에 화의가 성립되었다. 이때 송은 요에 歲幣로써 銀 10만냥, 絹 20만필을 바칠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곧 澶淵의 和盟(1004)이다.

요의 중국통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그들의 본거지를 중국 땅으로 옮기지 않고 거란족의 본토에 머물러 있었고, 둘째, 요의 제도가 ‘國制(거란족 제도)로써 거란을 다스리고 漢制로써 한인을 다스린다’(遼史 백관지)는 원칙하에 중앙관계에서 남, 북 추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자는 한인을, 후자는 거란인을 각각 관할케 하는 2원적 통치를 하였고, 셋째, 중국에서 불교를 도입하여 중국인과 거란인과의 일체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佐伯富 외)

3) 거란과 송의 관계

10세기 후반 거란과 송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몇차례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11세기 초 전황은 요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1004년 겨울 거란군은 송의 수도 開封에서 약 100킬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단연까지 진군하였고 두 나라의 군대는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있는 듯하였다. 결국 양국은 협상과 타협으로 1004-5년에 澶淵之盟을 맺는데, 맹약의 주요 내용은 송이 매년 비단 20만필과 은 10만량의 세폐를 보내고, 양국의 국경을 확실하게 정하여 준수하며, 국경을 넘은 도망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경지역에서 새 군사시설을 건설하지 않아 상대방의 영토보존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단연지맹은 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조약 문서에 들어있는 용어의 상징적인 의미이다. 송은 거란에 바치는 ‘貢’의 성격인 비단과 은을 ‘歲幣’라고 하여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두 나라는 서로를 ‘북조’와 ‘남조’라고 칭하면서 양국의 황제들은 ‘형제’ 관계를 맺고, 황실에 확대 적용하여 송 황제는 요의 황태후를 ‘숙모’로 요의 황제를 ‘동생’으로 공식적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단연지맹은 한족왕조를 천하의 중심임을 설정한 기존 국제질서의 틀이 더 이상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1세기 조약체계에서 송은 거란과 하에게 매년 총 50만필의 비단과 30만량의 은의 세폐를 보내 북쪽과 서북쪽 변경지역의 안정과 보존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 전형적 ‘이이제이’ 정책으로 위궤, 티벳, 그리고 거란 등을 이용하여 하를 견제하였고, 거란과의 세력균형에는 다

시 하와 고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피터 윤)

<참고>

료태종 때 거란귀족들은 늘 남하하여 중원지구에서 략탈하였다. 후당의 절도사 석경당은 오래전부터 황제로 될 야심을 품고있었지만 힘이 부족하였다. 그는 땅을 떼어주고 신하로 되는 것을 조건부로 거란에 출병하여 도와줄 것을 구걸하였다. 거란군대는 거침없이 쳐들어 가 후당을 멸망시키고 석경당을 황제로 옹립하였다. 이 정권이 바로 5대에서의 후진이다. 석경당은 료태종보다 열 살이나 이상이였지만 그를 부황제로 모시고 자기는 력사적으로 이름난 《아황제》로 되었다. 농업이 발달한 유운 16주를 얻은 거란은 경제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송조군이 료군을 물리친후 쌍방은 대치하고 있었는데 서로 력량이 비슷하였다. 료는 이길 가망이 보이지 않자 강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안일을 탐낸 송진종은 해마다 은 10만냥, 비단 20만필을 료에 주는데 동의하였다. 전연지맹이 있는 후 료와 송조간에 장구한 평화관계가 유지되었다. 쌍방은 변경지구에서 무역을 하였다. 북송은 건직물, 식량, 차잎 등으로 료의 양, 말, 락타 등 성축을 바꾸었다.

*의무교육초급중학교과서 『중국력사』 제2권, 인민교육출판사력사실 편저, 인민교육출판사 출판, 2001년 11월 제1판

2. 여진족의 발전과 금

1) 금 연구 현황

요금과 양송(북송, 남송) 민족은 사실상 과거 적대국으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것을 같은 민족의 내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학자들 간 논쟁도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馬大正은 남송이 금에 굴종한 사실까지 사실로 인정하나 이미 중국땅에 있었던 모든 역대 왕조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을 주장하고 서술하기 때문에 내적인 일로 보고 되려 발전에 중요 공헌으로 기술하고 있다. 요금 당시 중국은 외국인가? 요금과 양송 전쟁의 성질, 거란, 여진과 한족관계의 주류는 무엇? 등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하여 아직 심화된 연구는 적고 의견이 비교적 크게 나누져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2종이 있다. 첫째 의견은 대다수 사람들이 거란, 여진은 당시 국내 민족이며 요, 금은 중국이다. 둘째 의견은 개별 논자들은 앞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 이미 한족과 융합하거나 혹은 한족왕조의 판도에 歸入하였으면 국내성질에 속한다. 반대로 당시 아직 각 왕조의 강역 밖에서 독립국가로 있었다면 당시 중국의 범위 이내에 포괄할 수 없다. 당시 그들이 중원한족왕조에 대해서 말한다면 곧 외국인요 외족이다, 이 원칙에 근거한다면 당시의 거란·여진은 외족이며 요금은 중국이 아니고 외국이다. (김위현)

2) 여진의 발전과 금

금은 여진족의 완안아골타가 요를 멸망시키고 세운 것으로 중국에 침입하여 개봉을 탈취하고, 남송과 회수에서 大散關에 이르는 선을 경계로 대립하였다. 금은 왕조 성립과 더불어 여진족의 부족국가를 구성하고 발극렬(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관제를 정비하였다. 지방

관제로는 맹안(10모극부의 장), 모극(300호의 장), 발동(여러 부족의 장), 발근(부족장) 등의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개봉을 차지한 뒤 이후부터 여진적인 체제에 대신하여 중국적 체제가 우월해지기 시작하였다. 지방에는 맹안모극제와 중국식의 주현제를 병용하였다. 관리 채용에는 과거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여진족과 중국인을 따로 시험하였다. 종교정책으로는 중국의 유교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요가 불교로써 제민족의 융화를 도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요컨대 금은 요에 비하여 영토에 있어서나 통치이념에 있어서 훨씬 중국화의 정도가 높다. 금은 수도도 만주의 상경회녕부에서 북경으로 천도하였다. (佐伯富 외)

3) 금과 송의 관계

12세기초 요가 여진과 송의 협공으로 무너지자 1142년의 송-금 간의 조약으로 이어지는데 그 조건은 송이 금에 회하 이북 지역을 할양하고 매년 은 25만냥, 비단 25만필의 세폐를 바치는 것이었고, 다른 국경지역의 군사시설과 도망자에 관한 조항은 단연지맹과 유사하였다.

『金史』에 있는 1141년의 誓表에는 남송을 건국한 고종이 자신의 이름 ‘構’를 사용하면서 신하를 자칭하고, 보잘 것 없는 나라(弊邑) 송이 상국인 금나라에 회하 이북의 땅을 할양하고, 황제의 생일과 신년을 하례하는 사절을 보내며 ‘세폐’가 아닌 ‘歲貢’으로 매년 은 25만냥과 비단 25만필을 보낼 것을 약조하고 있다. 이러한 송의 태도나 조공품의 규모는 고려나 하가 요와 금에 보인 ‘조공국’의 면모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고려와 하를 항상 ‘중국’의 ‘조공국’이라 하면서, 금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금에 서표와 공물을 바친 남송에게는 조공국의 호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 한족 중심적 화이사상에 입각한 편견 때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13세기초 몽골이 등장하기 전까지 북중국과 만주를 지배한 요와 금은 송과 동등한 혹은 우월한 상대로 존재하였다. 북송은 아무리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처하여도 당시의 지정학적 현실에서는 ‘邊方’에 불과하였다.

다원적 국제관계는 그 형식과 의례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공체제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북방의 정복왕조와 남방의 한족왕조가 동등하게 인식되었고, 두 명, 때로는 세명의 ‘천자’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피터 윤)

<참고>

료와 북송의 멸망 :

금군이 철퇴한 후 주전파대신들은 배척당하였으며 군민들의 항금투쟁이 압제를 당하였다. 금군은 남하할 때 이르는 곳마다에서 방화, 살인, 약탈하였기 때문에 북방인민들은 막심한 재난을 당하였다. 얼마후 금군은 재차 남하하여 동경을 함락하였으며 1127년에 송휘종, 송흠종 그리고 후비, 대신 등 3, 000여명을 붙잡아갔다. 북송은 이렇게 멸망되었다.

악비의 항금투쟁 및 송과 금의 대치 :

송고종과 권신 진회는 항금력량이 장대해지게 되면 저들의 통치에 위협을 줄까봐 금에 화의를 제기하였다. 송고종은 악비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회군하라는 조서를 련속 내리었다. 1141년에 송고종은 악비, 한세충 등 사람들의 병권을 박탈하였다. 진회는 또 줄개를 시켜 악비를 모함하였고 반역죄라는 죄명을 씌워 살해하였다. 악비가 금을 반대하여 견지한 정의의 투쟁은 광범한 인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1141년 남송과 금은 화의를 달성하였다. 화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남송은 금의 신하로 되며 동쪽의 회수로부터 서쪽의 대산관까지를 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을 금조의 통치구역으로 하고 그 이남을 남송의 통치구역으로 하며 남송은 금에 세폐를 보내주어야 한다.

*인민교육출판사력사실 편저, 의무교육초급중학교과서 『중국력사』 제2권, 인민교육출판사 출판, 2001년 11월 제1판

3. 몽골제국의 발전과 원

1) 몽골(원) 연구 현황

쿠빌라이는 동생 아리크 부케와의 제위 계승에서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방 3칸국, 즉 킵차크 칸국, 차가타이 칸국, 일 칸국이 정치적으로 독립함에 따라 몽골 제국이 사실상 분열되고, 이렇게 하여 몽골 제국은 쿠빌라이의 집권과 더불어 元朝와 서방의 3개 칸국이 병립하는 4칸국 체제가 되었다는 것이 제국 분열에 관한 견해이다.

최근 몽골 제국 질서라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의 성격을 구명하려는 일련의 노력은 해당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학자들은 요·금의 흥기를 제2차 남북조시대로 이해할 뿐 아니라, 1271년 이후 원조, 즉 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몽골 고원으로의 이주 전 室韋의 역사에 이르는 몽골 민족사 전 과정을 중국사의 전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統一的多民族國家’의 논리에 따른 역사 서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자국사 중심의 역사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평래)

2) 몽골제국의 성립(건국)

몽골의 여러 종족들은 늘 서로간에 전쟁을 하였다. 오논강 류역에 있던 한 종족이 점차 강대하여졌다. 이 종족의 걸출한 수령인 테무진은 여러해동안의 전쟁을 거쳐 주변의 여러 종족들을 격파하고 몽골을 통일하였다. 1206년에 몽골귀족들은 대회를 열고 테무진을 대칸으로 추대하고 칭기스칸이라고 존칭하였으며 몽골정권을 수립하였다.

칭기스칸이 죽은 후 몽골군대는 륝숙 서하, 금을 멸망시키고 점차 남송에 대한 포위태세를 형성하였다. 후에 칭기스칸의 손자인 구비라이가 몽골의 칸위를 물려받았다. 1271년에 구비라이는 정식으로 국호를 원이라고 정하고 이듬해에 대도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구비라이가 바로 원세조이다. 1276년에 원조군은 남송의 도읍인 립안을 점령하고 남송황제를 포로하였다. 남송이 멸망되었다. 후에 원조군은 남송의 제일 마지막 저항력을 소멸하고 전국을 통일하였다. (『중국력사』 제2권)

3) 원의 중국 통치(발전)

원 지배하의 중국에서는 지배자인 몽고인과 색목인, 금의 영역하에 있던 한인, 남송의 고토에 있던 남인으로 사회계층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전국의 각 민족을 4등분하여 제1계급 민족인 몽골인, 제2계급 색목인, 제3계급 한인, 제4계급 남인, 즉 남송인이 있었다. 인구를 4계급별로 보면 1, 2계급은 4, 5만 호로 3%에 불과하였지만, 제3계급인 한인은 200만 호로 15%, 제4계급은 1, 000만 호로 82%였다. (신승하)

중앙의 중서성·추밀원·어사대 이하 지방의 최고통치기구인 행중서성까지 일부 한인을 제

외하고는 거의 모두 몽고인 세습귀족과 색목인이 장악하였다. 중국인에게 주어진 중하급의 관직도 몽고인에게 주어진 감찰관인 자루가치·다루가치의 감시하에 있었다. 더구나 수·당에서 시작하여 송대에 이르기까지 관리 등용의 기초로서 확립되어 있었던 과거제도는 폐지되었다가, 이후 부분적으로 부활했지만 몽고인·색목인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주어졌다. 지배층에는 색목인을 매개로 한 이슬람 계통의 문화가 침투하고 궁정·귀족 사이에는 티벳에서 발생한 라마교가 풍미했으며, 중국의 전통적 지배사상인 유학은 거의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西嶋定生 외)

<참고문헌>

- 이평래, 3-1 북방 민족의 등장, 『집필안내서』
인민교육출판사력사실 편지, 의무교육초급중학교과서 『중국력사』 제2권, 2001
피터 윤,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 『만주연구』 제3집, 2005
윤영인, 「거란·요 연구-21세기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김위현, 「금 연구」,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신승하, 『중국사』, 대한교과서, 2002
佐伯富 외, 『쎄미나 中國史』, 민족문화사, 1991
西嶋定生 외, 『중국사 입문』, 도서출판 한울, 2002
Karl Wittfogel and Feng Chia-sheng(1949),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pp. 1-32 참조)

서구와 동아시아의 만남

김 정 인

1. 자본주의적 만남의 매개, 차와 아편

14세기 이래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의 해금(解禁)정책하에서도 동아시아 역내의 제한무역은 농업과 수공업 발달을 배경으로 꾸준히 증대했다. 여기에 유럽세력이 아메리카산 은을 가지고 뛰어들었다. 그전부터도 유럽 각국은 향료를 비롯한 인도·중국산의 고부가 상품을 얻기 위해 서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달할 수 있는 인도 향로를 줄기차게 열망해왔다. 16세기 신항로 개척은 그런 열망의 소산인데, 바로 그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섰다가 처음 도달한 육지, 지금은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신대륙을 그들은 인도라고 여겼다. 그렇게 만들어진 북아메리카의 서인도에 대응하여 진짜 인도는 역설적이지만 ‘동인도’로 불리게 되었다. 유럽 각국의 상인들은 앞다투어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유라시아 무역에 직접 뛰어들었고 동남아 각지에 그 거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중앙집권국가들이 중상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유라시아 무역을 적극 보호 지원 하는 동시에 동인도회사가 자체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혜가 뒷받침되었다.

그런데 동인도회사들은 유라시아 무역에서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들의 수출품 중 금과 은이 2/3를 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것은 유럽의 공산품이 아시아에서 판로를 개척할 여지가 별로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고전하는 과정에서 영국 동인도회사는 유라시아 무역보다 아시아 역내 무역에 가담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다는 걸 알게 된다.

인도는 무굴에 정복되기 전(무굴제국:1526~1857)에 이미 세계 섬유산업의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인도산 면직물과 후추는 아프리카, 서아시아, 유럽에까지 팔려나갔고 거기서 다시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제도로 불리는 카리브해와 아메리카까지 흘러들었다. 그 댓가로 인도에는 막대한 양의 금은이 유입되었다. 인도는 또 동남아시아로 면직물을 수출했고 그곳으로부터 향신료를 수입했다. 이 무역로는 중국에 면직물을 수출하고 중국산 비단과 도자기를 수입하는 통로로도 이용되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무역을 주도한 세력은 인도의 무슬림이었고 상선들은 대부분 인도에서 건조된 배였다. 반면 유럽 국가의 무역선은 18세기에 도극소수에 불과했고 그 선장과 선원, 상인 등은 모두 아시아인이었다.

유라시아 무역로의 동쪽편인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조선 일본 등지와 연계되는 통로는 주로 중국 상선과 중국인 및 화교에 의해 주도되었다. 동남아 시장의 최대고객은 중국이었다. 동남아 각지에 번성한 항구도시들을 거점으로 동남아산 후추·주석·면화, 중국산 비단·도자기·차, 베트남의 도자기 등이 거래되어 그 역내에서 소비되거나 인도와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까지 중계되었다.

유라시아 무역루트를 동서로 연결하고 있던 동남아의 대유럽 수출은 대중국 수출의 1/8에 불과했다. 유럽인들은 18세기말까지도 아시아무역의 미미한 주변부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그중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가장 앞서 가던 영국도 인도 및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 인도를 정복하여 인도산 제품과의 경쟁관계를 무력으로 해소

함으로써 영국-인도-중국의 삼각 무역 구조를 형성한 다음에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해소할 길이 없었다.

18세기 이래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최대품목은 차였다. 차는 17세기 영국에 처음 수입된 이후 1세기 만에 영국인의 국민음료가 되었다. 그리하여 1718년부터 생사(生絲)를 능가하여 중국산 수입품의 최대 품목이 되더니 1785~1833년에는 총수입의 90% 내외를 차지했다. 그렇게 수입된 차는 북미대륙의 식민지에까지 공급되어 미국 독립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보스턴 차 사건’(1773)을 일으켰으니, 유라시아 무역은 이미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도 연계되어 있었다. 18세기 말 영국의 차 수입액은 중국에 수출한 3대 상품(모직물, 금속, 면화)의 수출액을 상쇄할 정도였다.

영국 동인도회사가 차 수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원인은 이미 국민음료가 되어 있었던 것 말고도 자신이 인도 정복과정에서 영국 왕실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삼각 무역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인도산 원면사를 중국에 팔고 그 대신 받은 현금을 중국산 차의 구입 대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인도산 면의 교역량은 차 교역량을 따라가지 못했고 영국의 중국 무역 적자는 지속되었다. 그 결과 다량의 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1775년의 독립전쟁과 그 여파, 1779년 에스파냐와의 전쟁으로 영국은 미국이나 멕시코로부터 은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동인도회사는 자국의 은을 빼내가는 것에 대해 영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 중국은 세계 유일의 차 생산국이었고 더구나 중국인은 영국의 공업제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영국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중국에 팔아 교역의 균형에 맞추어야 했다. 이에 동인도회사는 20년간이나 손실을 감수하면서 모직물을 덤핑했고, 또한 인도 면화를 중국에 수출하여 부족한 차 구입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동인도회사 무역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조하는 지방상인의 무역까지 포함해도 1800~6년을 제외하고 항상 영국의 적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국은 차를 손에 넣기 위해 대량의 은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인도회사는 비상수단으로 인도산 아편의 밀수출을 적극 추진했다. 다만 그들은 자기 선박으로 아편을 밀수하는 것을 금지하여 표면상으로 아편밀수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도 농민에게 반강제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게 했으며 이렇게 생산된 아편을 독점적으로 집하하고 정제하여 경매에 붙이고 지방 무역상인의 손을 거쳐 중국에 밀수출했다. 이런 지방무역에는 영국인과 스코틀랜드인의 사기업이 다수 가담했다. 동인도회사는 1773년 영국정부로부터 아편 전매권을 부여받고, 1797년에는 아편 제조특권까지 부여받았다. 따라서 그 밑에서 지방무역에 종사하는 사기업들은 동인도회사의 지배를 피하면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모한 경쟁과 모험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중국에서 외국 아편의 유입은 금지되어 있었고 아편 자체도 비합법적인 것이었지만, 완비된 밀수조직의 존재와 뇌물을 받은 청 정부 관리의 묵인과 비호 아래 아편 유입량은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아편이 중국으로 수출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중국에서 대량의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1826년을 고비로 영국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이제 중국의 은이 동인도회사를 통해 다량 유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편교역에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등도 참여했다. 그들은 광둥에 아편 제조공장까지 설립하여 운영했는데, 그 수익의 80% 이상을 영국인이 차지했다.

이처럼 영국정부가 동인도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아편의 생산과 교역을 지원하고 보호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호무역정책의 비상수단으로 등장한 아편무역이 마침내 자유무역정책을 내세운 영국에 의해 중국의 제한무역을 돌파하는 무기로

활용된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공통의 해금현상을 타파하고 전면개항을 강제할 아편 전쟁은 흔히 유럽의 자유무역과 중국의 제한무역 간의 대결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런데 이 자유무역이 중독성 마약인 아편의 밀거래와 분리될 수 없도록 연동해 있었으니, 말하자면 ‘자유로운 마약거래’가 동아시아에 근대 경제체제 수립을 강제하는 유력한 무기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영국의 무역적자는 무역확대 요구를 청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동인도회사가 중영무역을 주도할 때는 영국 상인들도 조공무역을 모범으로 하는 중국의 각종 의례와 제한조치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지내왔다. 그러나 영국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면서 국가 대 국가의 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조공체제와 그 의례는 그들에게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새롭게 간주되었다. 당시 청 정부가 영국 무역사절의 자유무역 요구를 거절한 것은 영국처럼 무역을 확대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 정부로서는 1820년대부터 아편수입으로 인해 대외무역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은이 대거 유출되었기 때문에 무역확대를 반길 이유가 없었다.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은값의 상승으로 납세부담이 가중되었으며 각계각층이 아편 중독에 노출되어 건강이 파괴되고 기형아 출산, 관리와 군대의 기강해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던 사정이 그러한 판단의 배경을 이루었다. 하지만, 영국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던 자유무역론을 중국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했다. 영국이 자국 상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한 상대는 오직 중국뿐이다.⁵⁰⁾

2. 정치적 조우 : 무력에 의한 문호 개방

1839년 도광제는 특정상품을 금지하고 고발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들어 린쩌쉬를 광둥에 특사로 파견하여 아편 판매조직망을 소탕하고 아편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350명의 외국인 을 감금했다. 하지만 린쩌쉬는 아편 몰수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이 문제가 외국과의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중국에 불법행위를 하는 영국상인과 영국정부를 구분해서 파악했던 것이다. 하지만 무역감독관 엘리엇트는 본국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고 영국상인들은 사유재산 몰수와 무역자유 침해를 이유로 의회에 압박을 가했다.

린쩌쉬의 의도와 반대로 영국정부는 개전을 결정하였고 11월에는 청 해군과 영국 함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듬해(1840) 4월 영국의회는 이 전쟁을 승인했고, 원정군이 6월 마카오 해역에 도착하면서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42년 8월 난징조약 체결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전투는 주로 광둥성에서 상하이, Ningbo에 이르는 중국 중남부 해안과 양쯔강 중하류 일대에서 벌어졌다. 결국 25만의 청군이 2만의 영국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아편전쟁(1842~1842)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질서의 운영 원리가 조공에서 조약으로 바뀌고 해금정책을 폐지하여 극도로 제한되었던 국교와 교역 및 인적 왕래를 개방하게 된 것이다. 조공체제는 상·하국 간의 의례를 기반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데 비해 조약체제는 국제법상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에 의거해 성립되고 유지된다.

청과 영국은 아편 전쟁의 결과 난징조약(1842)을 체결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등한 국가 간에 불평등한 조약 체제가 성립한다는 것이었다. 난징조약에는 자유무역에 관한 조항이 있다. 5개 항구를 개방하고 청조의 특허상인을 통해서만 대외무역을 허용했던 공행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서구열강에게 종속시키는 불평등조항으로 관세

50) 유용태·박진우·박태균, 2011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 의 2장 참조.

자주권을 침해한 협정관세, 법률주권을 침해한 영사재판권, 각종 특권을 조약 상대국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최혜국대우 등을 인정하고 홍콩을 떼어 준 것이다. 아편무역에 관한 조항은 없었으니 기존의 은밀한 거래는 그대로 묵인된 셈이다. 하지만 청 정부는 패전했다는 의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최혜국대우를 일시동인(一視同仁)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고 영사재판권과 외국인 전용구역인 조계 설치 등을 전통적인 기미정책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청 정부는 조약체제를 조공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질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의 상인과 군대는 광둥 각지에서 저항에 부딪혀 교역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은 공산품 수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를 북방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약 개정을 시도했고 이것이 거부되자 새로운 구실을 찾아 제2차 아편전쟁(1857~1860)을 일으켰다. 1860년 영프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한 상황에서 청 정부는 베이징조약을 체결하여 외국공사의 베이징 주재, 기독교 포교의 공인, 아편무역의 합법화, 선교사의 토지매매와 임차권 인정, 해관 세무에 대한 외국인 참여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들은 대부분 에로호사건(1856)으로 체결된 텐진조약(1858)에 명시된 내용이지만 청정부가 무시했기에 그를 빌미로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한 것이었다.

동아시아 각국은 아편전쟁에서 청이 패하자, 서양의 요구를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일본 막부의 양이론(攘夷論)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재의 군비로는 일본도 인도나 청국 신세가 될 것이니 영국의 포기술을 배워 크고 견고한 군함과 대포를 주조하고 군대를 정비하여 중국과 동아시아를 집어 삼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막부와 번들이 즉시 군비강화에 나섰다. 우호적인 무역은 허용하자는 견해가 있긴 했으나, 이후 10년이 넘도록 개항반대론이 여전한 우세를 보였다.

그런데 태평천국 농민봉기(1851)와 2차 아편전쟁은 일본의 지베엘리트에게 내우외환의 위기감을 증폭시켜 개항결정을 급속히 앞당겼다. 샌프란시스코-상하이 항로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페리는 1853년 홍콩으로부터 군함 4척을 이끌고 에도만에 나타나 조약체결을 요구했다. 그는 1년이란 세월을 기다렸고, 마침내 1854년 화친조약을 맺게 된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통상확대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 협상대표가 2차 아편전쟁을 거론하며 막부 관리들을 위협하면서 영국군함이 도래하기 전에 미국과 합의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협박했다. 일본은 1858년에 미국은 물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잇달아 조약을 맺으며 조약체제 속에 편입되었다. 이들 조약도 불평등조약이었지만 아편무역, 영토할양, 거류외국인의 자치권, 외국군의 내정간섭과 외국인에 의한 관세행정 개입 등은 빠져 있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2차 아편 전쟁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교(기독교)와 양약(아편)의 유입을 차단하고 지방관의 임명을 엄격하게 한다는 내부 단속에 열중하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조선에서도 개항 불가피론이 등장하였지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통한 프랑스와 미국의 통상요구와 무력시위를 일시적으로 물리친 대원군의 척화항전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책으로 수용되지는 못했다.⁵¹⁾

3. 문명 전환적 만남 : 문명개화와 자강독립

19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여러 민족과 국가에서 근대 서구 문명의 수용이 시작되었다. 이 문명 전환은 중세적 中세적 문명권에서 근대적 大세계 문명권으로의 발전과정으로서, 그것은 중국 중심의 중세적 천하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19세기 들어와 자유

51) 위의 책 ; 강진아, 2009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창비 1장 참조.

평등 박애의 정신을 표방하며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지향하는 서구 열강이 기계문명과 산업의 발달 그리고 근대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로 다가오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서구문명을 받아들여도록 요구하고 식민지로 시장으로 강점하기 시작했다. 서구 문명의 정신, 자유·평등·박애는 그들의 식민정책과 표리관계에 있었다. 동아시아문명의 주체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그 천하체계의 질서 속에 살아온 여러 민족 국가들이, 이제는 그들의 구래의 문명과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고 문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때에 문명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다. 선두에 선 것은 동아시아체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일본이었다.⁵²⁾

서구와 동아시아의 만남을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대표적인 사상가는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이다. 문명개화와 독립자존을 표방했던 지식인이자 사상가로서 후쿠자와의 문명론은 선진적인 서양 문명국을 모범으로 삼아 근대 일본에서의 문명적 인민의 창출을 추구한 논리라 할 수 있다. 발달한 정신을 가진 인민의 창출이, 일본이 근대 문명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후쿠자와에 의한 서양 근대사회의 발견이란 그같은 인민의 기풍을 가진 문명사회의 발전이었다.

서양을 접한 일본인들은 그 이질적인 모습에 놀랐다. 후쿠자와는 “우리나라의 인민이 처음으로 서양을 알게 되어, 그들과 우리 문명의 양상을 비교해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갑작스레 귀와 눈을 놀라게 해, 마치 인심의 소란을 낳은 것과도 같다”라고 쓰고 있다. 다른 문명을 접한 사람들의 놀라움은 마치 “인심의 소란”이 일어난 것과 같다고 한다.

“지리의 구역을 달리하며 문명의 원소를 달리하며 그 원소의 발육을 달리하며 그 발육의 정도를 달리하는 특수하고 전혀 다른 것을 만났으며, 게다가 아주 가깝게 서로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민에게 그것이 새롭고 신기한 것은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보아서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고, 들어서 괴이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아주 뜨거운 불로써 아주 차가운 물을 접하는 것과 같아서 인간의 정신에 파란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그 내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완전히 뒤집어놓는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문명론의 개략』의 서언).

그런데, 서양과의 접촉으로 인심의 소란이 생긴 것은 일본 사회의 문명화에 대한 충동 때문이라고 한다.

그 소란은 전국의 인민이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발하는 것이다. 우리 문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서양의 문명을 섭취하려는 뜨거운 마음이라고 하겠다. 고로 도모하는 바는, 우리 문명으로 하여금 서양의 문명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 나라히 서게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앞서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 서양문명도 지금 한창 운동 중이어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나아가는 것이므로, 우리 일본의 인심도 그와 더불어 같이 나아가 끝내 수그러들 수 없을 것이다(『문명론의 개략』의 서언).

후쿠자와는 이처럼 서양문명을 모범으로 삼는 일본의 문명화는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기존 문명 속에서 생활하고 지식을 형성해 온 사람이 새로운 문명에 직면해서 그 섭취에 노력하는 체험을 “한 몸으로 두 인생을 사는 체험”이라고 불렀다.

52) 김용섭, 2008 『동아시아 역사 속의 한국 문명의 전환』, 지식산업사 참조

그런데 서양 근대 문명에 본위를 정한 후쿠자와의 문명론의 목적은 ‘일국 독립’에 있었다.

목적은 정해서 문명으로 나아가는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 안과 밖의 구별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 본국의 독립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독립을 보전하는 길은 문명 이외에서 찾아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의 일본 사람들을 문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따라서 나라의 독립은 목적이며, 국민의 문명은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다(『문명론의 개략』의 10장).

여기서 한 나라의 운명은 “일국 인민의 지덕이 진보하는 양상”이다. 일국의 독립이 그런 지덕을 충실히 쌓은 인민들의 자력으로 달성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명화를 통해 달성한 진정한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국 독립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설정하면 그 목적의 수단이 되는 문명의 의미 역시 변질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 인민을 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문명의 일도 말할 수 있다. 나라가 없어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 일본의 문명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후쿠자와의 말처럼 ‘우리 일본’이 우선시되고 ‘문명’이 수단으로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까닭은 일본의 ‘지금’ 때문이며 그 ‘지금’에 대응해야 하는 긴급성 때문이다. ‘지금’은 ‘상업과 전쟁’이라는 두 조항으로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서양 열강들에 의해 조약체제에 편입당한 일본의 현재를 말한다. 분명한 것은 그런 일본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국 독립 역시 상업과 전쟁을 통해 근대 주권국가가 되는 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후쿠자와의 논의에서 문명이 일국 독립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서양의 근대 주권국가 형성 방식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곧 탈아이북의 길이었다. 후쿠자와는 그로부터 얼마 후 “일국의 인심을 흥기시켜 전체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편은 외국과의 전쟁만한 것이 없다”라고 쓰게 된다.⁵³⁾

이러한 일국독립론과 문명론의 결합을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사회진화론이다. 문물과 함께 들어온 서양 사상 가운데 사회진화론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사회이론이다. 인간 사회에서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약육강식과 자연도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서양 열강들은 사회진화론을 내세워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점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양 열강의 위협 앞에 놓인 동아시아에서는 사회진화론을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자강운동의 논리로 받아 들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진화론자인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우승열패인 세계에서 서구 열강에 비해 열등한 일본은 무엇보다 강력한 민족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회진화론은 일본의 정치적 상황의 보수화와 함께 보수적 정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즉, 국가유기체설과의 결합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인 국민의 통합을 강요하고 국가주의를 지지하며 대외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다.

중국의 생존과 부강을 위해 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회진화론에 주목했다. 양계초는 처음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면서도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을 동일시했으나, 1903년 무렵에는 양자를 구분하면서 적자생존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적자 생존이란 비록 열등하더라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는 우월할 수 있고 반대로 비록 우등한 자라고 하더라도 적자가 아니며 열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장 우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을

53) 고야스 노부쿠니, 2007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을 정밀하게 읽는다』, 역사비평사 참조.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문명화된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범을 강자의 권리로 정당화했다. 미개한 국가의 영토를 지배하는 것은 문명국가가 당연히 즐길 수 있는 진화적 권리요, 미개한 국가의 국민을 계몽하는 것은 문명국가가 윤리적으로 책임지고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중국인에게는 제국주의적 확장만이 국가의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계초의 주장은 카토 히로유키의 사회진화론적 제국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은 약하고 무능한 국가인 중국의 지식인에게 왜 그들이 외국과의 생존경쟁에서 약자가 되어버렸는지, 어떻게 강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개혁과 혁명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어 주었다. 즉,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된 중국에게 사회진화론은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한 자강론의 역할을 했다. 양계초의 사회진화론은 베트남의 개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의 지식인층은 세계가 위계적 질서에 의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의 싸움터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은 서구의 문명화를 소개하고 있는 서적들을 통해서 수용되었다. 서구의 놀라운 기술적 진보에 깊이 감명을 받은 진보적 인사들은 매우 쉽고 간단히 진보에 대한 믿음을 내면화했다. 유길준이 사회진화론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경쟁에 특히 주목했다. 그는 경쟁을 개인의 행복과 국가 부강을 실현하게 해주는 진보의 동력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적 경쟁이란 “각기 자신의 직분에 힘쓰며, 자기가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뜻한 바를 달성코자 앞을 다투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사회에 아름다운 이익을 기침이 바로 이 도를 따라 성취되고, 천하의 현실적 상황이 이 도를 따라 보존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변화, 또는 진보를 사회적 경쟁의 결과로 보고, 경쟁을 통해서 개화의 궁극적인 경지인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유길준은 서로 경쟁하는 모든 정당한 이익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고,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진보된다고 파악했다.

『독립신문』은 사회진화론적 생존경쟁의 기본단위를 국가나 인종에 두고 인종적 갈등이나 제국주의적 전쟁을 우승열패나 적자생존의 원칙을 기반으로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인식시키려고 했다. 독립신문의 주필로 활약한 윤치호는 문명화된 국가와 인종들은 대체로 도덕 종교 정치면에도 우월하고 지적으로도 유능한 반면, 미문명화된 국가와 인종들은 모든 면에서 문명국의 인종보다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문명화된 인종의 미문명국의 정복은 결과적으로 강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의와 성공을 가져오며, 약자들에게는 단지 잘못되고 부정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명화된 강대한 서구의 국가들이 비문명화된 미약한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행하는 착취와 억압 등의 모든 행위를 강자의 권리로 보았다.

이처럼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은 근대화와 독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 즉 근대적 국가사상과 민권사상의 보급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사상적 근거로 작동했다. 하지만, 강자로 이해되었던 일본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그리고 국가가 대외적 생존경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국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민권을 소홀히 인식했다. 이처럼 사회진화론은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자강의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처럼 문명화되지 못한 나라가 문명화된 나라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오직 선진 문명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생존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는 것이다.

4. 근대화의 주체, 시민 사회의 형성

동아시아에서 근대화의 주체인 시민과 시민사회 형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활발하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 문제제기를 촉발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규모와 활동 면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민간단체인 독립협회라는 존재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시민 사회가 형성된 시기를 대한제국기, 특히 독립협회의 활동기(1896~1899)로 보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다. 이 시기에는 지역주의보다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문명과 민주주의의 이항 담론의 지형이 형성되었다.

한국 지식인들은 정치적이고 시민적인 담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개개 한국인의 시민적 권리가 국가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들은 한국을 강하게 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개인의 시민적 권리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신문의 경우 정치적 시민적 용어인 백성 인민이 인종적이거나 종족적인 동포 형제를 압도했다. 이처럼 개인의 희생은 보편적인 인간적 가치의 성취를 위해 요구되었다. 한국은 지식계급은 중국 중심의 전근대적인 보편주의에서 근대적인 서양의 보편주의로 입장을 바꾸었다. 곧 것 같다.

문명담론의 경우, 보편주의를 지향하며 첫째, 행위자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덕목이 많고 둘째, 애국, 자주독립과 같은 민족 담론적 요소가 문명 담론의 일환으로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명	반문명
동기	
유식한 지혜로운 건강한 청결한 정직한 읽고 쓸 줄 아는 자율적인 부지런한 노동하는 실질적인 점잖은	무식한 고지식한 병약한 더러운 부정직한 문맹인 의뢰심 많은 계으른 유식하는(놀고먹는) 공상적인 부박한
관계	
인도적인 협력하는 신뢰하는	비인도적인 비협조적인 의심이 많은
제도	
편리한 진화 우등 부강 신문물 개화 법치 평등 자주독립 애국	불편한 퇴보 열등 가난 구습 미개화 인치 차별 종속 매국

민주주의 담론은 지역적이고 특수한 차원보다는 보편주의적 차원에서 이항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도적인 차원의 담론 형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자유권의 문제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론 형성은 대중 시위를 통한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민주	반민주
동기	
적극적인 공개적인 청렴한 엄격한 일관된	소극적인 음모론적인 부패한 애정에 따른 자의적인
관계	
포용적인 비판적인 관용적인 신뢰하는 의로운 의사소통	배타적인 순응하는 독선적인 이간하는 사사로운 의사불통
제도	
다양한 포괄적인 다수의 능력 중립 자유 평등 공론·여론 법치 적법 애국	획일적인 제한적인 소수의 문벌 편중 압제 차별 독단 무단 불법 매국

그런데, 독립협회는 국민 각 개인이 국가의 성쇠흥망의 책임을 가진다는 애국심을 고조하여 우리나라에서 애국이라는 말이 널리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민심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군주국가의 범주 안에서 충군을 강조하며 신구절충을 벌였다. 하지만, 정체를 뺀 나머지 분야에서는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며 정부와 충돌했다.

독립협회는 1898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나서 정부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먼저 9월에 정부가 외인부대를 편성하여 황실호위를 맡기려 하자, 독립협회는 곧바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반대의 요지는 정부가 본국의 군인을 신뢰하지 않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게 될 것이고 외국인에게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군인까지 고용하면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서로를 신뢰하고 법치로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민주적 코드에 반하는 조치이자, 자주독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결국 외인부대는 해체되었다.

이 무렵 러시아 공사관의 통역 경력이 있는 김홍륙이 황제의 찾잔에 아편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죄인을 심문하면서 경무사 민영기가 악형을 남용하여 다리가 부러진 자가 나오고 부녀자까지 고문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더불어 중추원은 갑오개혁 때 폐지된 연좌제의 부활을 시도했다. 독립협회는 즉각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죄인이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되어야 하며 고문

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유생들이 연좌제 부활을 주장하며 상소를 올렸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독립협회는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갔다. 정부의 재상과 대신들이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기강을 문란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서울 시민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감옥의 죄수들까지 독립협회에 편지로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의연금을 헌납했다. 하지만, 고종은 독립협회의 요구를 거부했고, 유생들은 ‘반역’이라는 유교 담론을 내세워 독립협회를 비난하는 글을 서울 시내에 붙였다. 독립협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대신들이 법률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인재를 쓰지 않으며 부패한 탐관오리에게 자리를 주고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립협회의 정권퇴진운동은 시민의 지지와 참여가 늘어나면서 확대되었다. 서울 시내 상인들도 이에 호응하여 철시했다. 경무청이 상점 문을 열도록 강권하자 상인들은 이제는 관인의 무례한 압제를 받지 않겠으며 문을 여닫는 것은 그들의 자유권이라며 거부했다. 학생층까지 동참하면서 서울 시내에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독립협회의 영향권하에 들어갔다. 결국 고종은 대신 전부를 면직하고 독립협회가 신임하는 박정양을 수반으로 하는 개혁 정부를 구성했다. 이를 두고 미국 공사는 평화적 혁명(a Peaceful Revolution)이라고 평가했다.

고종의 유화책은 며칠만에 강경책으로 돌변했다. 해임된 대신들을 다시 복직시켰고, 오히려 독립협회에 대해 ‘토론은 정치 문제 이외의 것만 한정하며 집회는 독립관에서만 허가하고 이곳을 떠나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칙을 내렸다. 고종은 이 조칙에서 국회는 국가의 공립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의결하는 곳이고, 협회는 국민의 사설기관으로 공동담당하는 것에 불과한 곳인데, 사설인 독립협회가 정치를 평론하고 대신의 교체를 논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는 점과 독립협회 같은 논리로 규칙을 근거로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국민의 정치 토론은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언론의 자유권은 양보할 수 없는 민권이고 관료가 황제와 국가를 위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은 공론의 자유로운 표현에 있음을 결의하고 만장일치로 언론 집회의 자유를 허락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독립협회는 규칙을 거론하며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고종에게 항의하기 위해 자신들이 고종의 조칙을 알고도 정치토론을 한 것은 위법이니 자진출두하여 처벌받기로 결의했다. 실제로 회원들이 경무청 앞에서 체포와 투옥을 자원하자, 고종은 독립협회가 법을 어긴 것은 관리들이 제대로 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서이므로, 해당 관리를 견책할 것이라며 해산을 명했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조칙을 위반한 죄가 분명히 있다며 물러나지 않았다.

독립협회는 계속 상소를 올려 대신들이 법률과 장정을 지키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외국에도 민회(시민단체)는 행정에 실정이 있으면 전국에 알려져 민중을 회집하여 질문하고 논핵해서 백성이 승복하는 바가 아니면 감히 물러가지 아니하니 강담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독립협회는 독립을 기초로 하고 충애를 목적으로 하여 공립한 회로서 정법을 문란하게 하는 신하를 탄핵하고 성토하는 것은 백성의 권리이고 민의가 없으면 정치와 법률이 무너져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논박했다. 결국 고종은 언론을 열고 자문기관인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할 뜻을 내보였다. 특정한 거짓과 악을 교정하려고 할 때 자기의 의견 표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하의 의무라는 유교적 신민론에 근거하여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다.

독립협회는 1898년 봄부터 의회설립운동을 시작했다. 독립협회는 민주 정체로의 길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시키면 입법과 행정이 모두 전문화되어 능률이 나고 정밀해진다. 2. 인재들이 의원으로 선출되어 매일 공평하게 토론하여 법률과 제도를 만들므로 폐정이 교정되고 나라가 융성해진다. 3. 모든 일은 의회에서 의논을 거친 후에 작정되니 황제가 수고로움을 덜 것이고 사담과 거짓이 들어갈 수 없으니 전제군주제의 폐해가 없어진다. 4. 행정부 대신들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절하게 집행하면 되니 실수가 적고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5. 찬반의 토론을 거치니 인민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절대다수 인민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므로 인민에게 유리하다. 5. 모든 일이 공개적으로 토론되므로 전국 인민이 이를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의견에 따라 발언하고 참정하게 되며 나라 일을 내일 같이 생각하게 되어 소통이 되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배가된다. 6. 국민과 정부가 화합하고 나라 일이 공평하게 결정되니 외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거나 침범하거나 능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권리에서 대의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은 대의기구의 설립의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독립협회 부회장 윤치호는 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의 하나로 1898년 3월부터 로버트(Henry M. Robert)의 의회통용규칙(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을 번역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책은 당시 영국의 상원과 하원 미국의 상원 하원의 회의 진행에서도 채택되었던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국회의 회의 진행법이었다.

독립협회는 양원제를 지향하되, 우선 중추원을 개편하여 상원을 설립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회설립운동이 프랑스혁명 같은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했다. 독립협회는 개혁 정부가 들어서자,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를 설립하고 50명 의원의 절반은 정부가 추천하는 관선의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독립협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민선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수용했다.

독립협회는 의회개설운동이 성공하자, 관민공동의 대집회를 열었는데,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다. 독립협회는 이 때 시민들에게 황제와 황실에 대한 불경한 언어 사용,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옹호, 동포형제인 양반과 상민 간의 모욕적 언행, 퇴임을 요구했던 전임 대신들에 대한 불손한 언행, 상투를 포함한 사회관습개혁에 대한 논의 등을 엄격히 금지했다. 다만 국가정책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문명담론, 민주주의 담론과 유교 담론 즉, 신구충돌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시민 화합을 과시하려는 매우 정치적인 조치였다. 여기서 의회의 조약비준권, 재정 일원화, 예결산제도 확립, 공개재판제도와 증거주의, 법률 준수 등 제반의 민주주의 정치로의 진전을 담은 헌의 6조가 발표되었다. 곧바로 중추원 신관제도 반포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추원은 법률과 칙령의 제정 폐지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의논하는 입법권을 갖는 상원으로서의 심의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의회개설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반격에 나서 소위 익명서를 서울 시내에 붙였다. 그 내용은 조선왕조는 이미 쇠퇴하였으니 만민공동하여 윤치호를 대통령을 선출하며 정부와 서민이 모두 승복하고 국민이 각성하여 개명진보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었다. 즉, 독립협회가 군주제를 전복하고 공화제를 내세울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종은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긴급 체포하고 독립협회를 불법화했다. 윤치호는 고종에게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배신적인 어떤 비겁자라도 이보다 더 천박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흥분한 서울 시민들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 상인들은 또다시 철시했다. 10여일이 넘는 철야시위를 하며 내세운 만민공동회의 담론은 유교적 코드로 충신과 역적을 구분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10여일이 넘는 철야시위 끝에 독립협회는 복설되었고 고종은 헌의 6조의 실시

를 약속하고 대신 중 5명을 유배시켰다. 만민공동회는 이 조치에 대해 유교적 대응인 유배 말고 민주주의적 절차인 법률과 장정에 근거하여 재판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의회인 중추원의 의관 50명이 선정되었다. 독립협회 17명, 보부상이 모인 어용단체인 황국협회 16명, 황제 추천 17명으로 구성되었다. 표면상으로는 민선이 33명, 관선이 17명이나, 어용적 단체인 황국협회를 포함하면 정부 측이 33명으로 독립협회가 계획한 바를 이루지는 못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시민 단결을 과시하고 시민에게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협회의 폭력적 공격으로 죽은 구두수선공 김덕구의 장례를 만민장으로 치렀다. 평민이지만 애국과 충의를 위해 순국했으니, 의사이므로 거국적으로 추모하자는 것이다. 충의라는 유교담론과 애국이라는 민주담론의 신구절충적인 표현이 바로 의사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처음 사회장으로 열리는 평민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대규모 시민이 모였다. 12월 들어 정부 개혁과 중추원 공천자의 실제적 임용을 요구하는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이에 대한 고종의 대응은 전에 없이 단호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군대가 동원되어 해체되었고, 바로 서울 시내를 계엄을 연상하는 공포 분위기가 넘쳐났다. 결국 1899년에 중추원은 다시 자문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명담론과 민주 담론을 생산하며 역동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을 확장하려던 독립협회의 '민주화'의 꿈은 신참新參보다는 구본舊本에 더욱 의지하려던 국가권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한일교류사의 시각

-조선통신사, 왜 일본에 갔나-

손 승 철(강원대학교)

1. 오늘, 조선통신사가 우리에게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그 시작은 일본 측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선언한 망언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2006년에는 동해의 해저 지명과 해양 조사 문제로 양국이 충돌 위기까지 직면했고,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이 뿌리 깊은 갈등의 진원지는 어디에 있을까. 또 그 갈등의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일 양국이 서로 우호교린을 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명제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두 나라의 갈등이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 2,000년간의 역사적 경험은 말해 준다.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 전·후기 500여년에 걸쳐 양국 사이를 오간 조선통신사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양국은 외교 문제를 해결했고, 물자와 문화를 교류했으며, 그 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중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라는 불행한 역사도 있었지만, 통신사를 통해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통신사'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연출한 성숙한 국제 의식의 표현이었다. 조선통신사가 원활하게 왕래할 때는 양국 사이에 우호·공존의 시대가 전개되었고, 조선통신사의 단절은 양국 사이의 불행한 역사의 시작을 뜻했다.

참고로 조선통신사의 명칭에 관한 문제인데, 『朝鮮王朝實錄』에는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라고 해서 『日本通信使』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朝鮮通信使』라고 하는 것은 일본쪽에서 볼 때, 조선에서 오는 통신사라는 의미로 부르던 것을 그대로 일반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朝鮮通信使』가 된 것이다.

2. 동아시아 해역의 약탈자, 왜구

한반도에 대한 왜구의 약탈은 1350년부터 시작되며, 이후 고려 말까지 해안 지방은 물론 내륙 깊숙이 약탈이 자행된다. 몽고가 약해지면서 중국대륙에서는 신홍제국 명이 건국되고, 한반도는 몽골로부터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혼란, 일본열도는 남북조시대로 모두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격게되며, 이때부터 양지역간에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倭寇의 활동이 극심해진다.

고려말기 왜구에 의한 피해는 엄청났다. 『高麗史』에는 1351년 왜구의 기록이 등장한 이래 1392년까지 총 495회의 침입기사가 나오며, 그 지역도 한반도 전역에 걸쳐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한때 도읍인 개경까지 위협을 받아 개경천도론이 주장되기도 했고, 낙동강을 따라 대구·상주까지 왜구가 출현하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더 깊은 예천 보문사로 옮기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왜구들은 조창을 습격하여 경제적으로 노략질을 하는 한편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거나 또는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예를 들면 현재 알려져 있는 고려 불화는 총 120여점인데, 한국에는 12점밖에 없고, 일본에 95점이 남아있다. 또 쓰시마와 이키에는 80여구의 신라·고려 불상과 동종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왜구의 침략에 대해 고려에서는 船軍을 확충하고, 崔茂宣으로 하여금 화약과 화포를 제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朴威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고, 鄭夢周 등을 5차례나 사절로 보내 왜구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시카가 장군에게는 왜구금압 능력이 없던 시기여서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이즈음 한반도에는 이성계에 의해 朝鮮이 건국되고, 일본에는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南北朝를 통일하여 무로마치(室町)막부를 열게 된다. 당시 朝鮮王朝와 무로마치막부에서는 倭寇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朝鮮通信使가 탄생되게 된다.

도쿄대학교에 소장된 『왜구도권』에는 왜구 약탈의 모습이 상세하다. 이들 왜구가 한반도에 출몰하여 무엇을 어떻게 약탈했는가. 『고려사』에는 왜구가 극심했던 1382년 기록에는 “서너살짜리의 여자아이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쌀을 넣고 고사를 지낸뒤 그 쌀로 밥을 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에서는 왜구들의 약탈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선 외교적인 방법을 써서 7차례나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남북조시대의 혼란기여서 그다지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결국 고려는 군사적 방법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의 무인세력이 성장하여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된다. 그런데, 현재 한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후소사관 『역사 교과서』에서는 “왜구란 이 당시 조선반도 및 중국대륙 연안에 출몰했던 해적집단을 뜻한다. 그들 중에는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술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3. 공존의 시대 : 조선통신사의 시작

1392년 조선이 건국한 후에도 왜구의 약탈은 계속되었다. 일본도 같은 시기에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되면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과 일본은 왜구 문제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고,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책봉 체제에 편입된다. 이어 조선통신사와 일본국왕사가 왕래하면서 왜구 문제를 해결하고 교린 관계를 성립시키면서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간다.

이 과정에서 조선통신사는 믿음으로 통하는 通信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교린 관계를 이중 구조로 만들어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간다. 하나는 조선국왕과 일본국왕(장군) 사이의 대등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장군 이외의 모든 세력을 각종 통교 규정에 의해 조정해 가는 기미 관계였다. 각종 통교 규정이 성립되면서, 왜인들이 약탈자에서 통교자로 바뀌고, 조선의 삼포에 와서 무역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조선과 일본의 교린 관계의 밑바탕에는 믿음[信]이 전제되어야 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交隣의 용례를 보면, 信·道·義·禮라는 유교적 실천규범을 전제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交隣之信’ ‘交隣之道’ ‘交隣之義’ ‘交隣之禮’의 개념을 체계화했다. 즉 교린이란 信義·道理·義理·禮義라는 유교적 가치기준을 전제로 하는 외교이며, 通信使는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信義를 하는 사절’이다.

이와같이 조선과 일본의 중앙정부가 서로 사신을 왕래시키면서 왜구금지를 위한 교섭을 했지만, 왜구의 활동은 여전하여 외교교섭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막부장군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 변방에 있는 왜구를 통제할 수 없었고, 조선연안 및 조선사절단이 통과해야 하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에서는 여전히 해적의 활동이 활발하여 통신사의 왕래도 장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다시 왜구의 실제적인 우두머리들과 교섭을 벌였고, 신숙주의 『海東諸國紀』에 의하면,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낸 일본 중소영주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총126명에 달하고 있다.

조선은 이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벌여, 이들을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갔다. 그리하여 對馬島主를 중간자로 하여 倭寇를 평화로운 通交者로 전환시키는 貿易體制를 새로이 구축했고, 그결과 三浦開港(1426)과 癸亥約條(1443)에 의해 일본으로부터의 통교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들면 조선의 통제에 협조적인 왜인들에게 조선의 관직을 주는 受職人制度, 수직왜인에게는 년 1회 조선에 도항하여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이들이 받았던 임명장인 告身이 지금도 13장이 남아있다.

삼포개항의 시작은 1407년 무질서하게 내왕하는 왜인들을 통제하기위해, 1407년부터 富(釜)山浦와 乃而浦(薺浦)를 항구로 지정하여 그 출입과 교역을 허가하면서부터이다.

4. 경상도의 재팬타운, 삼포

1426년 삼포제도가 정비되면서, 조선에 오는 모든 왜인들은 한반도 동남해안의 세 포구(염포, 부산포, 제포)에 입항했다. 각종 명목으로 조선에 왔던 일본인들은 삼포에서 무역을 하면서, 우두머리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조선국왕을 알현했고,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삼포에 살게 되었다. 1471년 신숙주가 편찬한 『해동제국기』에는 삼포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삼포 왜인들의 생활상을 기록했다. 가히 조선시대의 '저팬 타운'이라고 부를 만하다.

1419년 대마도 정벌에 의해 일시 폐쇄하였으나, 그들의 간청으로 1423년에 다시 두곳을 허락하고, 이어 鹽浦를 추가함으로써 삼포제도를 확립했다. 포소에는 왜관을 설치하여 각기 제포(진해)에 30호, 부산포(부산)에 20호, 염포(울산)에 10호의 항거왜인을 거주하게 하여, 도항왜인의 접대와 교역을 허가함으로써 통교질서를 세웠다. 이들 삼포 가운데 조선후기에는 부산포만이 남아 초량왜관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당시 삼포를 통해 어떠한 물자의 교류가 이루어졌을까.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물품은 쌀이나 콩등 식량류와 섬유품이었다. 섬유품은 처음에는 모시와 마포, 명주였으나 15세기 후반부터는 면포로 바뀐다. 일본에서 면포를 선호한 것은 당시 일본에서는 목화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선면포가 감축이 좋은 고급의류로서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주 상품은 구리인데, 예를들면 1428년에는 2만 8천근의 구리를 가져왔고, 1489년에는 2만근의 구리를 가져오고, 10만필의 면포를 가져갔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놋쇠로 만든 식기를 사용했고, 동전과 금속활자등 구리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남방산 蘇木과 물소뿔이, 후추등이 수입되었다.

『해동제국기』에는 왜인의 입항과 무역, 상경로와 방법, 절차와 접대, 서울에 묵었던 여관인 동평관, 서울고지도에 남아 있는 왜관동의 유래,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 국왕의 알현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온천을 즐기는 등 삼포 체류 왜인의 일상생활과 살았던 집, 이들과 거래한 무역품 등을 기록했다.

	세종초		1466년		1475년		1476년		1494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제 포	30		300	1,200여	308	1,722	308	1,731	347	2,500
부산포	20		110	300여	67	323	88	350	127	453
염 포	10		36	120여	36	131	34	128	51	152
계	60		446	1,650여	441	2,176	430	2,209	525	3,105

그러나 항거왜인이 늘고 무질서하게 도항하자, 왜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도항질차와 증명에 관한 여러질차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도항증명서인 文引을 대마도주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는 文引制度를 실시했다. 즉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권을 주어서 대마도주로 하여금 수수료를 받도록 재정적인 이득을 주고, 그 댓가로 조선에 통교를 원하는 일본인들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통교인들을 4등급(日本國王使, 巨諸使, 九州節度使·對馬島主, 小倭使·對馬島受職人)으로 나누고, 그 우두머리들을 상경시켜 조선국왕에게 알현시키는 上京制度를 의무화했다. 이것은 중국의 기미정책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정책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변의 여진·왜인·유구·안남등에 대해서는 조선중심의 국제질서를 세우려는 것으로 조선외교의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조선전기 사절 일람표

회수	서기	사행명	정사	파견대상	사행목적	출처
1	1392		覺鑰(僧)	征夷大將軍	왜구금지요청	善隣國寶記, 상
2	1399	통신관	朴惇之	日本大將軍	왜구금지요청	실록.정종원/5.을유
3	1399	보빙사	崔云嗣	日本大將軍	보빙	실록.정종원/8.계해
4	1402		朝官	日本大將軍	화호,금적,피로인쇄환	실록.태종2/7임진
5	1404	보빙사	呂義孫	일본국왕	보빙	실록.태종4/7기사
6	1406	보빙사	尹銘	일본국왕	보빙	실록.태종5/12무진
7	1410	회례사	梁需	일본국왕	보빙, 부의	실록.태종10/2신축
8	1413	통신관	朴賁	일본국왕	사행도중 발병중지	실록.태종14/2을사
9	1420	회례사	宋希璟	일본국왕	국왕사회례,대장경사급	노송당일본행록
10	1423	회례사	朴熙中	일본국왕	국왕사회례,대장경하사	실록.세종4/12계묘
11	1424	회례사	朴安臣	일본국왕	국왕사회례,금자경사급	실록.세종5/12신해
12	1428	통신사	朴瑞生	일본국왕	국왕사위,치제	실록.세종10/12갑신
13	1432	회례사	李藝	일본국왕	국왕사회례.대장경하사	실록.세종14/7임오
14	1439	통신사	高得宗	일본국왕	교빙,수호	실록.세종21/7정사
15	1443	통신사	卞孝文	일본국왕	일본국왕사위,치제	실록.세종25/2정미
16	1460	통신사	宋處儉	일본국왕	국왕사보빙,사행중조난	실록.세조5/8임신
17	1475	통신사	襄孟厚	일본국왕	수호,일본내란중지	실록.성종6/8정유
18	1479	통신사	李亨元	日本國王	수호, 대마도중지	실록.성종10/9을축
19	1590	통신사	黃允吉	豊臣秀吉	왜정탐문	김성일, 海槎錄
20	1598	통신사	황신	豊臣秀吉	강화교섭	실록, 선조29/8임자

그러나 조선전기의 우호교린의 교류관계도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으로 단절되고, 이후 7년간의 전쟁과 그로 인한 전쟁의 상처는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각인시켰다.

5. 임진왜란, 불구대천의 원수

1592년, 조선통신사와 삼포에 의한 200년간의 우호교린이 임진왜란에 의해 깨진다. 임진왜란의 원인을 토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에게 돌리지만, 사실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인 책봉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무로마치 막부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지 않고 배신한 것이다. 히데요시는 조선통

신사를 조공사로 취급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동래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과거의 상경로를 통해 20일 만인 5월 2일, 한양에 입성했고, 6월 16일에는 평양을 점령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프로이스의 일기』에는 그의 침략 의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의 승리도 개전 초기 2달간이었고, 이후 7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의병과 민중의 저항, 이순신 장군의 활약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한반도 남부에 29개나 되는 왜성을 쌓고 장기전에 들어갔지만, 히데요시는 죽고,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 그의 아들 히데요리는 전쟁 후, 히데요시가 쌓은 오사카 성 정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인에게 지울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다. 전쟁 중에 당한 여인들의 수난을 그린 『삼강행실도』와 양국의 각종 기록들은 지금도 그 참혹함에 치를 떨게 한다. 또 조선인의 코로 만든 코무덤 등, 이후 조선 사람은 일본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7년간의 전쟁을 통해, 조선 문화가 일본에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도공들이 빚은 도자기는 일본 국보가 되었고, 고려불화나 조선종, 많은 서적들이 지금도 일본 문화재로 전해진다.

특히 일본군은 조선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 굴욕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가하면, 노예로 팔아 넘겼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노예전쟁으로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7년간의 전쟁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납치되었는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학자에 따라서는 납치인원을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20만명까지 산출해 내고 있다. 피랍조선인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을 당시 일본에 와있던 신부 루이스 세쿠에이라(Luis Cerqueira)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가사키에 인접한 곳의 많은 일본인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상인들은 그들에게 조선사람을 팔기 위하여 일본의 여러지역을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잡혀 있는 지역에서 그들을 구매하는 한편, 조선인을 포획하기 위해 직접 조선으로 갔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중국배에서 이들을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았다.”(1598년 9월 4일자 기록)

또한 중군승으로 왜란에 참가한 케이넨(慶念)은, “ 일본에서 수많은 상인이 왔는데, 남녀 노소를 새끼줄로 묶어 뒤에서 재촉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매질했다.”(『조선일기』) 라고 기록했다. 마치 로마시대의 영화속에 나오는 노예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잡아온 사람들 중에는 건장한 남자나 노약자보다는 아무래도 젊은 여인이 많았다. 일본천주교에서 조선의 성녀로 칭송받고 있는 ‘오다 줄리아’도 조선소녀였다. 또 어린아이들도 많았는데, 얼마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베니스의 개성상인>도 7세때 일본군에게 끌려 간 조선소년이 노예로 팔려 이탈리아에 가서 상인으로 대성하는 이야기였다.

이상과 같은 임진·정유왜란의 7년간의 잔혹행위는 조선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일본인상을 남겼다. 말 그대로 하늘아래 같이 살 수가 없는 원수, 소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로 각인되었다.

6. 통신사의 부활, 평화의 시대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04년 조선에서는 도꾸가와 막부의 강화에 대한 진의를 살피기 위해, 승려 유정(사명대사)를 探賊使란 명칭으로 일본에 파견했다. 사명대사 일행은 교토에 가서 도꾸가와 장군의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피로인 3천여명을 데리고 돌아온다. 사명대사 일행의 귀국 후, 조선에서는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일본군왕 명의의 강화요청서, 임란당시 왕릉도굴범의 소환, 그리고 조선피로인의 송환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왕명의를 국서를 위조하고, 왕릉도굴범은 대마도의 잡범으로 대치했으며, 쇄환사편에 피로인들을 7천여명 이상 돌려 보냈다. 물론 조선에서는 국서가 위조된 것이고, 도굴범도 잡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조선의 요구가 형식적으로는 수용되었기 때문에 1607년 강화사를 파견하여 국교를 재개했다. 하지만 사절단의 명칭은 「回答兼刷還使」였다. 이로부터 조선후기에는 총 12회의 조선사절이 파견되는데, 「通信使」의 명칭이 다시 쓰여지는 것은 세 번째인 1636년부터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607년의 회답사를 정형화된 조선통신사의 시작으로 보고, 2007년을 <조선통신사 400주년>으로 기념하고 있다.

통신사의 파견목적은 막부장군의 습직이나 양국간의 긴급한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통신사의 편성과 인원은 각 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0명에서 500명이 넘는 대사절단이 1년에서 1년반이나 걸리는 대장정이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육로로, 그리고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 오사까 까지는 해로로, 오사까에서는 다시 육로로 에도(江戸:東京)까지 왕래하였다.

통신사 행렬의 장려함은 1636년 통신사를 직접 목격한 네덜란드 상관장 니콜라스의 기록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 먼저 무용과 피리 · 북의 주악이 행해지고, 그 후에 벼를 타작할 때 쓰는 것과 같은 큰 막대기를 가진 몇 사람이 두 명씩 지나가고, 그 양측에서 각각 금과 생사를 섞어 만든 망을 든 세 사람이 경호하고 있었다. 그 후에 약 30명의 젊은이가 말을 타고 뒤 따랐다. 그 뒤에는 5-60명이 붉은 우단을 친 가마를 메고 따라갔다. 그 안의 탁자 위에는 칠을 한 상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조선문자로 쓰여진 일본황제에게 보내는 서한이 들어 있었다. …… 재차 여러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가 뒤따라 왔다. ……가마가 몇 대 지나가고, 검은 비단 옷을 입은 사절의 부관이 가마를 타고 지나갔다. 잠시 후 400명의 기사 ……약 15분이 지나자 200명의 호위병이 따르고, 일본 귀족일행이 가고, ……마지막으로 조선인의 화물과 선물을 운반하는 약 천 마리의 말 …… 이들의 행렬이 전부 통과하는 데는 약 5시간이 걸렸다. ”(『히라도네델란드상관일기(平戶オランダ商館日記)』)

당시 규슈의 히라도(平戶)에는 네덜란드 상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관장이던 니콜라스가 에도에 가던 중 만난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조선통신사를 안내, 호위하거나 짐을 나르기 위해 평균 3,000여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을 합치면 통신사행렬은 총 3-4천여 명에 이르렀다. 한사람의 거리를 1미터만 잡더라도 4키로는 족히 될 것이고, 그 행렬이 통과하는데 5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사가 조선후기 한일관계에서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정치외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통과하는 객사에서의 한시문과 학술교류는 한일간의 문화상의 교류를 성대하게 했다. 1719년 통신사 수행원 신유한은,

“ 초사흘 임인, 식사 후, 유학자 10여명이 대청에 모였다. 나는 세 서기와 함께 나가 서로 인사하고 앉았다. 좌중의 사람들 중에는 각각 장단률(長短律) 및 절구(絶句)를 배껴와서 나에게 주며 창화(唱和)를 요청했다. 즉시 모든 요청에 응하여 회답했다. 그가 부르면 나는 곧 화답하고, 혹 바꾸어서 장편이 되기도 했으며, 책상위에는 시문 화답한 종이가 수북히 쌓였다. 김세만이 옆에 앉아서 쉴 겨를이 없이 부지런히 먹을 갈았다.

하루중 만나는 사람은 대체로 3,4편을 얻었지만 혼자서 상대했고, 왼쪽에 응하고, 오른쪽

쪽에 답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창성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윤색할 여유도 없었다. 다음날에도 십수명과 만나서 전날과 같이 창수했으며 한밤중이 되어
서야 그쳤다.”(신유한 『해유록』)

그렇다면 일반서민들은 어떠했을까. 통신사의 기행문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에는 통신
사에 관한 많은 회화자료가 남겨져 있다. 예를 들면 풍속도화가로서 유명한 하가와 도에이
(羽川藤永)의 <조선인래조도>가 코베의 시립박물관에 있다.

이 그림은 에도(동경)의 니혼바시(日本橋)를 지나고 있는 통신사일행을 그리고 있다. 화
면 중앙에서부터 좌측 뒤편에 후지산(富士山)과 에도성(江戸城)의 성곽이 보이고, 두부모를
잘라서 짜맞춘 듯이 이층집 지붕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그 사이를 통신사일행이 지나간다.
2층은 문을 닫아서 격자(格子)만이 눈에 띄지만, 1층에는 상가의 휘장 밑으로 에도의 시민들
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다. 양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 술이나 차를 마시는 사람, 이
런이에게 젓을 먹이는 아낙네의 모습도 보이지만, 사람들은 통신사 행렬에 넋을 잃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길 중앙에 무사 한사람과 개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경비를 맡은
무사인지 봉을 들고 서 있는 사람과 개, 방수용 물통이 눈에 띄고, 통신사를 맞이하는 에도
시민들의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2-30년만에 한번 오는 통신사의 장관
을 놓치지 않으려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마치 지난번 88올림픽 때나 월드컵 경기 때 서울시
민의 열광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겨울연가’를 보는 현
대 일본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사는 또 하나의 한류, 즉 <조선시대의 한류>가 아니었을까. 그래
서 조선통신사를 ‘조선시대의 韓流’로 표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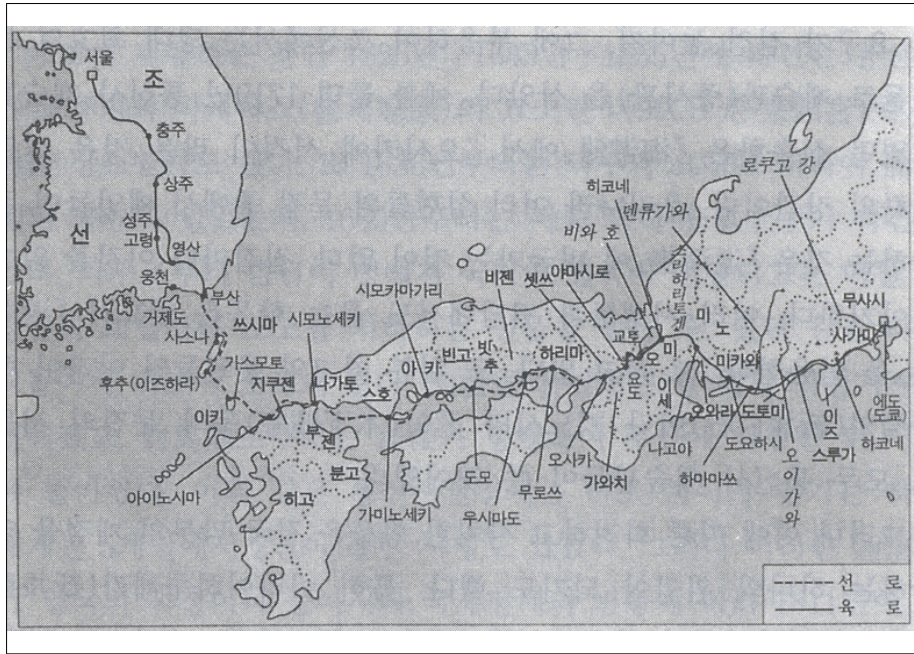
물론 통신사가 한일관계의 전부는 아니었다. 조선에서는 부산에 왜관을 설치하여 한일간
에 무역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를 교류했으며, 또 대마도주에게는 별도로 100명에서 150명
규모의 『譯官使』를 51회나 파견하여 한일관계에서 대마도의 입지를 세워주고, 한일간의 현
안을 풀어갔다.

* 조선후기 통신사 일람표

순번	서기	조선	일본	임 무	총인원(오사카잔류인원)	일본기행문	비 고
1	1607	선조40	慶長12	강화, 국정탐색, 피로인쇄환	467	경섭 『해사록』	회담검쇄환사
2	1617	광해군9	元和3	피로인쇄환, 오사카평정축하	428(78)	오윤겸 『동사상일록』 박재 『동사일기』 이경직 『부상록』	회담검쇄환사
3	1624	인조2	寬永원	피로인쇄환, 장군습직축하	460	강홍중 『동사록』	회담검쇄환사
4	1636	인조14	寬永13	태평축하	478	임광 『병자일본일기』 김세렴 『해사록』 황호 『동사록』	通信使 大君호청사용
5	1643	인조21	寬永20	장군탄생축하	477	조경 『동사록』 신유 『해사록』 작자미상 『계미동사록』	日光山參詣
6	1655	효종6	明曆원	장군습직축하	485(100)	조경 『부상일기』 남용익 『부상록』	
7	1682	숙종8	天和2	장군습직축하	473	김지남 『동사일록』 홍우재 『동사록』	
8	1711	숙종37	正德원	장군습직축하	500(129)	조태억 『동사록』 김현문 『동사록』 임수간 『동사록』	아라이하쿠세 키개정 (大君-將軍)
9	1719	숙종45	享保4	장군습직축하	475(109)	홍치중 『해사일록』 신유한 『해유록』 정후교 『부상기행』	개정환원 (國王-大君)
10	1748	영조24	延享5	장군습직축하	475(83)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홍경해 『수사일록』 작자미상 『일본일기』	
11	1764	영조40	宝曆14	장군습직축하	477(106)	조엄 『해사일기』 오대령 『계미사행일기』 성대중 『일본록』	崔天滄被殺
12	1811	순조11	文化8	장군습직축하	328	유상필 『동사록』 김청산 『도유록』	對馬易地通信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은 매우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한일관계를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혹자는 조선전기와는 달리, 조선후기에는 일본에서는 장군의 사신이 오지 않고, 조선에서만 사신이 파견되었다고 해서, 조선외교의 열세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임진왜란때, 과거 일본국왕사의 상경로가 일본군의 진격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일본인의 상경을 금지시키고, 부산 왜관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신사파견의 비용은 부산에서부터는 모든 왕복 비용을 일본에서 부담하였는데, 그 비용이 막부의 1년 예산이었다고 한다.

* 통신사 여정표



한편 일본과 조선무역에는 기본적으로 대마도주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封進과 求請에 대한 回賜, 조선왕조와 대마도간의 公貿易, 대마도관리·상인과 조선상인간의 私貿易 등이 있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주로 은·동 등의 광산물과 남방산 蘇木, 물소뿔과 백반, 후추 등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 수출한 품목은 쌀과 콩, 목면이 많았고, 인삼과 중국산 생사와 비단도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물자의 유통경로를 ‘실버로드와 실크로드’에 비유하기도 한다.

7, 통신에서 배신으로, 침략의 전주곡

그러나 이러한 通信使行도 1811년에 끝이 나며, 그것도 對馬島에서 약식으로 국서를 교환하는 易地通信이었다. 물론 그 이후 몇차례에 걸쳐 장군직을 습직하였고, 그때마다 통신사 파견이 요청되었으나, 일본 내의 사정에 의해 4차례나 연기를 하다가 결국 1868년 명치유신을 맞게 되고,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통신사로 상징되었던 조선시대의 우호교린의 교류도 끝이 났다.

통신사로 상징되는 조·일 교린관계의 종말은, 명치유신을 알리는 일본측의 서계로부터 비롯되었다. 명치유신 직후, 일본에서는 天皇의 집권사실과 명치 외무성에서 한일관계를 전담한다는 서계를 보내왔다. 그런데 서계의 양식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일본천황을 한 단계 위에 놓고, 天皇대 朝鮮國王의 외교를 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에서 외교관례상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에서는 장군이 집권하건, 천황이 집권하건, 그것은 일본 국내의 사정이므로, 조선은 단지 일본의 최고집권자와 대등한 관계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결국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1872년 부산왜관을 점령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침략외교에 의해 교린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조선전기 통신사에 의한 200년간의 교린관계가 임진왜란에 의해 깨진 것처럼, 조선후기 260여년간 교린관계도 일본의 일방적인 왜관점령에 의해 종말을 고했다. 교린관계의 붕괴과정은 다르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무력침공이라는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었던 것이다.

8.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

한일양국에서는 20세기의 불행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출발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정했다. 양국간의 외교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루 1만명의 왕래시대에 접어들었다.

김포 - 하네다 간에는 직항로가 개설되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 - 동경 간을 오가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들추겨서, 양국관계는 또 다시 불행해 질지도 모른다.

이 모두 지나간 한일관계의 역사적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바보같은 짓이다. 이 시점에서 한일간의 진정한 의미의 우호교린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일본에 간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메시지를 상기해보자.(끝)

<참고문헌>

손승철, 《조선통신사 - 일본과 통하다》, 동아시아사, 2006.

나카오히로시지음, 유종현 옮김, 《조선통신사이야기》. 한울, 2005.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유음,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3권, 한울, 2007-9.

베트남 근현대사와 동아시아

노영순(한국해양대)

1. 프랑스 통치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
2. 동남아시아 민족주의와 反식민주의에 미친 맑스-레닌주의의 이념적 영향
3. 인도차이나공산당과 베트남혁명
4.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과 베트남의 분할, 1945-54
5.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과 미국의 패배, 1954-75
6. 베트남의 통일, 중월전쟁 그리고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1975~

1. 프랑스 통치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

1850년 이후 베트남에 진격한 프랑스는 1802년 개창 이래 완고한 유가적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외부의 '위협' 특히 기독교를 발원 색출하기도 했던 상당히 보수적인 정권인 응우옌(Nguyen) 왕조와 맞서야 했다. 응우옌 왕조는 유연성 부족으로 프랑스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1858년에서 1885년 사이에 마지못해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고 무력하게 저항을 해보는 등 양극단 사이를 불안정하게 오갔다. 후에(Hue)에 있는 조정이 1885년에 어린 황제 함 응이(Ham Nghi)의 이름으로 프랑스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라는 조서를 내렸던 시점에는 프랑스가 이미 확실한 권력 기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

후에 탐 호 타일랜드(Hue Tam Ho Tai)의 책 『급진주의와 베트남 혁명의 기원』에서 요약할 수 있듯이 1885년 당시 엘리트 세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프랑스에 철저히 저항하든지 아니면 프랑스 보호체제에 협력하는 것이었다. 1885년 근왕운동이 발발한 이후에 왕조 자체는 더욱 빠른 속도로 프랑스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은 이미 왕조보다는 베트남 민족의 이름으로 저항을 했으며, 희망이 없는 투쟁에 몸을 맡기고 있었지만 애국이라는 고지를 점령할 수는 있었다.

좀 더 치밀하고 실용적인 정치적 안건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판 보이 쩌우 (Phan Boi Chau, 1867-1940)와 판 쩌 쩌(Phan Chu Trinh, 1871-1926)으로 대표되는 다음 엘리트 세대에 이르러서였다. 이 새로운 전망의 요점은 첫째로, 서구에서 배운다는 전략이었다. 이는 물론 협력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베트남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혁명 후에만 베트남이 효과적으로 서구의 식민 세력에 맞설 수 있다고 믿어졌다. 두 번째로, 독립을 유지한 두 주요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과 실용적인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략이었다. 판 쩌 쩌는 첫째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판 보이 쩌우는 두 번째 전략에 힘썼다.

이러한 '문화적 각성을 위한 혁명'의 전투지는 교육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에 관해 하나의 결정적인 사실을 반복해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1885년에서 1945년까지 프랑스의 지배는 응우옌 왕조와의 보호조약에 기반하고 있었다. 프랑스가 최종적으로 권위를 갖기는 했지만 응우옌 왕조는 북부 베트남(통킹)과 중부 베트남(안남)을 명목상으로는 계속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개혁가들은 왕조와 프랑스 식민정부라는 두 실체와

마주해야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인 응우옌 왕조(프랑스의 식민 지배로 그 권위가 유지되고 있었던)에 도전하기 위해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에 호소하기도 했다.

읽기: 급진주의와 베트남 혁명의 기원(Hue-Tam Ho Tai, *Radicalism and the Origins of the Vietnamese Revolution*, pp. 13-26) 효와 충/ 호앙 까오 카이(Hoang Cao Khai)와 판 딘 풍(Phan Dinh Phung)/ 사회적 다원주의자들의 문화 비판 / 개혁과 개혁가/ 판 보이 찌우(Phan Boi Chau)와 판 쭈 쩐(Phan Chu Trinh)

2. 동남아시아 민족주의와 반식민주의에 미친 맑스-레닌주의의 이념적 영향

19세기 유럽 제국주의가 지닌 커다란 모순 중의 하나는 주된 제국주의 강대국이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였다는 사실이었다. 이들 제국이 약화되는 과정은 아마도 유럽이 20세기 벽두부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시점에 시작된 것 같다.

그러나 맑스주의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의 외관은 본질적으로 이분화된 사회, 즉 경제의 축적된 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또는 '부르조아'와 자신의 노동력 밖에는 소유한 것이 없어 임금이라는 형태로 이를 파는 '재산 없는 대중'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내부 실체를 가리고 있다. 이 자본주의 경제를 뒤에서 미는 힘은 사적인 이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과학, 산업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가 가져온 급격한 진보는 이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그러므로 경제가 더욱 복잡하고 진전될수록 이들 두 계급 간의 차이도 심화된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증가시키려면 생산 단가를 낮추어야 하며, 이는 불가피하게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수준을 희생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급기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파산으로 이어진다고 맑스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칼 맑스는 불특정한 혁명의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경제를 통제하고 (이를 파괴시키지는 말고) 그 생산력을 모든 사회의 필요에 따라 동력화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V. L. Lenin, 1870-1924)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맑스의 기본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현상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해주고, 값싼 원자재와 노동력의 공급처를 제공하여 자본주의에 새로이 연장된 삶을 주는 방식이다. 제국주의는 또한 식민지로의 이민이나 고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유럽의 노동자 계급 사이에 인종의 우수성을 심어줌으로서, 그리고 제국 경쟁에서 민족주의적 정체감을 날카롭게 함으로서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트간의 계급적 반감을 무디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제국 경쟁에 내포되어 있는 인종 간의 대립과 국가 간의 반목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대립인 계급 대립을 드러낼 것이다.

레닌의 분석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주요 유럽 강대국의 이러한 제국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의 전쟁을 혁명적인 계급투쟁으로 바꾸어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전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로 하는 대신에 유럽의 사회당들과 소위 '제2 공산국체'는 각기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전쟁 논리를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오직 러시아 볼셰비키 정당(나중에 공산당)만이 레닌의 지도 하에서 혁명적인 투쟁 시기를 거쳐 1917년 정권을 잡았으며 사회주의 국가(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의 창설을 선포했다.

레닌과 러시아 공산주의 지도자들에게 1917년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초를 놓은 해이기도 했다. 본질적인 분할은 이제 더 이상 국가나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식민체제와 세계의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 구체적으로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식민 지역 내 부역자를 제외한 모든 인민으로 표상되는 - 간에 있었다. 1918년 독일이 패배한 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자결'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자신의 제국에서는 부인했다는 사실은 레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자유 민주주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보였다. 1919년 러시아 지도자들은 세계의 공산당과 혁명 조직체를 연결시키기 위해 '제3공산 국제' 즉 코민테른을 조직함으로써 자신들의 세계 이론에 조직적인 실체를 부여했다. 레닌의 '민족과 식민 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와 반-식민주의 투쟁을 연계하려고 고안한 코민테른의 주된 문건이다.

그러나 이 세계전략이 직면한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식민사회는 산업화의 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후진 사회였다. 주요한 계급 대립은 자본가와 무산자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주와 농민 간에 있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적 저항이 단순히 구체제를 복원시키게 될 위험이 있었다. 구체제는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끌어내기 시작한 식민정권보다 더 '반동적'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코민테른의 주된 목표는 식민세계에서 작지만 혁명적인 '핵' - 지식인과, 싱가포르와 같은 대도시에서 막 생성되고 있었던 노동자 계급, 그리고 빈한한 농민으로 구성되는 - 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연후 이 혁명적인 핵은 민족주의 엘리트의 '진보적인' 요인 - 레닌은 이들을 '부르조아-민주주의자'라고 표현했다 - 들과 연합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이 연합만이 세계적인 혁명세력과 반식민주의 세력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었다. '부르조아 민주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식민 제국의 통치를 일소한 후에야 진정한 투쟁인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었다. 식민지에서 '부르조아-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연합은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가질 뿐이었다.

레닌의 '민족과 식민 문제에 관한 테제'를 요약하고 베트남 공산주의의 아버지 호 찌 민(응우옌 아이 꾸옥이라는 다른 가명으로 알려진)의 정치 사고에 이 '테제'가 미친 결정적인 영향을 보겠다. 이는 1919년 이후 시기에 다른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

읽기1: 민족과 식민 문제에 관한 테제(Extract from V. L. Lenin, 'Preliminary Draft of Theses on the National and Colonial Questions', in V. L. Lenin, *Selected Works*, Vol. 2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47), Excerpts taken from pages 654-8))

읽기2: 나를 레닌주의자로 인도한 길(Ho Chi Minh, 'The Path which Led Me to Leninism', (April 1960), in Ho Chi Minh, *Selected Works*, Volume IV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2). Excerpts taken from pages 448-50.)

3. 인도차이나공산당과 베트남혁명

(1) 동남아시아 민족주의와 반식민주의에 미친 맑스-레닌주의의 영향

1920년대 초 소련에 총본부를 두고 있었던 코민테른(제3 공산국제)은 세계적인 혁명 운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와 식민화된 모든 세계에 관한 코민테른의 지도 전략은 혁명 세력과 엘리트 민족운동인 '부르조아-민주주의'를 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의 모델은 지방 군벌을 제거하고, 중국의 일부 영토와 중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배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1924년 광둥에서 결성된 중국공산당(1921년 조직)과 중국국민당간에 맺어진 전술적 연합 [국공합작] 이었다. 이 연합의 기초 위에서 코민테른은 남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걸친 광범위한 혁명 네트워크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 네트워크에 자리하고 있는 조직체 중에는 1920년에 결성된 인도네시아공산당, 1925년 호찌민이 광둥에서 결성한 베트남청년혁명연합(Revolutionary Youth League of Vietnam), 그리고 주로 중국인의 도시 조직체로 1930년에 출발한 말레이공산당(MCP)이 있었다.

코민테른은 원래 식민지의 혁명운동을 식민 '본국' 공산당의 후견 하에서 지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베트남의 혁명운동을 '지도'해야 했다. 그러나 논리상의 모순이 이러한 연계를 방해했다. 아마도 더욱 중요하게는 동남아시아 혁명가, 특히 호찌민은 혐오해 마지않는 식민 관계를 혁명적인 용어로 다시 재생산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 시기에는 유럽인이 지도하는 세계 전략에서 벗어나 아시아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코민테른 네트워크는 동남아시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신감과 운동에 통일성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 이념은 단순한 선전 문구로 번역되어 대중을 동원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동시에 농민과 전통적인 농촌 오지민들의 '세계관'을 그 어떤 운동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변화시켰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공산당은 1920년대 초기에 자바와 수마트라의 일정 지역에서 대중 동원을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서 역설적이게도 사실상 파괴되었다. 이들이 전달한 반식민주의라는 거의 구체주의적인 메시지는 너무나 많은 활동과 기대를 불러 일으켰으며 중국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다. 1926년과 1927년에 서부 수마트라와 서부와 동부 자바에서 그 지역 인도네시아공산당원들이 지도하는 결코 조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났다. 이 반란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일어났음은 네덜란드에 의해 쉽사리 진압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결과적으로 이들 반란 때문에 인도네시아공산당이 거의 10년이 넘게 약체로 남아 있어야 되었지만, 이 반란이 당시 세계적인 공산주의 음모의 증거라고 보았던 식민 당국은 크게 놀랐으며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에 일정한 양보를 하겠다던 의향을 거두게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아시아 공산주의에 가장 커다란 상처를 준 사건은 1927년 중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연합이 피비린내를 풍기며 깨어졌으며 이를 이어 중국 민족주의자들과 중국 공산주의자간에 일어났던 내전이였다. 코민테른은 공산당과 '부르조아-민주주의' 민족주의 정당 간에 연합을 격려하던 정책을 철회했다. 차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공산주의 정당은 민족주의 활동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도록 기대되었다. 청년혁명동지회가 1927년 붕괴된 이후 1930년 호찌민의 지도로 성립된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창당 프로그램에 있는 '계급투쟁'은 실제로 프랑스에 대한 '애국적인 투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 개월 안 있어 1930년 말에 가서 이 두 경향은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요소가 되어갔다.

인도차이나공산당은 1930년 창당되자마자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국적인 소요 사태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 소요는 세계 공황이 이 지역에 가져온 재난으로 격화되었다. 1929년과 1931년 사이 베트남 대부분은 파업, 시위 그리고 프랑스와 베트남인 정부 관리를 직접 겨냥한 폭력사건으로 대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인도차이나공산당이 그렇지 않았다면 무질서한 지역적인 반란들이 되어 버렸을 일련의 봉기에 통일성과 조직을 주었으며, 중부 베트남의 예안(Nghe An)과 하 띵(Ha Tinh)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로 마을 '소비에트'망이 건설될 수 있었다. 프랑스가 이들 반란을 분쇄함으로써 건설 초기에 있던 당은 거의 고사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살아남은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1930-31년 반란의 과정에서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얻었다. 이들 중 중요한 것으로는 민족 통일보다 계급투쟁을 강조하면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각성이었다. 베트남 사회 내에서 프랑스에 대항한 애국적인 통일과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과의 관계는 다음 십 년의 과정에서 호 쩌 민이 풀어야 할 전략적인 숙제였다.

새로이 창당된 인도차이나공산당이 내린 베트남과 인도차이나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거의 같은 시기 버마에서 있었던 사야산 반란을 둘러싼 레토릭과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읽기: 1930년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정치 테제('Political Theses of the Indochinese Communist Party, October 1930', in *An Outline History of the Viet Nam Workers' Party, 1930-1970*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0)) 인도차이나 상황의 특성/ 경제적인 모순들/ 계급 모순[베트남 농민과 노동자간의 이해 합치]/ 인도차이나 혁명의 특징과 파업

(2) 베트남혁명

프랑스 당국은 식민지 코친차이나를 '갈색의 프랑스인'이 사는 '해외' 프랑스의 일부로 편입시킨다는 목표 아래 소위 '동화'정책이라는 것을 추구했었다. 여타의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당국은 보호행정 내에서 대체로 토착의 정부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게 했었다. 이 두 정책 모두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정치 발전의 여지도 허락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들의 활동과 자치정부나 독립 요구는 프랑스 식민 행정부는 물론 응우옌 왕조에게도 모두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1920년대에 입헌당은 코친차이나의 정부 조직에 베트남인 대표를 늘리고 출판의 자유와 프랑스 시민권 획득의 폭을 넓혀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요구에서조차 입헌당이 프랑스로부터 개혁을 '끌어내지' 못하자 이 온건한 당은 지지의 기반을 상실했고 결국 정치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양 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 기간에 아주 한정된 프랑스의 자유화 조치가 잠시 취해지기도 했지만 늘 탄압의 시기를 동반했다. 프랑스가 잠시라도 탄압의 끈을 늦출라치면 축적되어온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열망이 분출되어 나왔으며 프랑스는 급히 다시 끈을 조여야 했다. 심지어는 젊은 황제 바오 다이가 베트남 왕조 정부를 이용하여 아주 온건한 개혁을 하려 했던 시도도 즉각 만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시점에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는 외견상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만약 지배력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확고해진 것이었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 베트남인의 에너지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방의 종교 집단으로 향했는지 모른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26년에 형성되고 사이공, 특히 사이공 북서부 근교에 상당한 신자를 가지고 있었던 까오 다이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남서부 국경지대를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급진적인 불교 종파인 호아 하오였다. 이 종교 집단들은 강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특히 1945년과 1946년 같은 무정부상태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5년 3월 일본은 연합국이 인도차이나를 공격하기라도 한다면(그럴 가능성은 농후해 보였다) 프랑스 식민정권은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쿠데타를 통해 프랑스 식민정권을 제거했다. 명목상으로 정치적 권위는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의 군주에게로 넘겨졌다. 그러나 특히 베트남은 전쟁으로 인한 혼란에다가 안 그래도 가난한 베트남 북부와 남부에는 기근까지 겹쳐 점점 더 무정부주의적인 상황으로 빠져 들어갔다. 바로 프랑스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공백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대중적인 민족주의 조직은 없었다. 후인 킴 카인의 권위 있는 논문 「베트남 8월 혁명에 대한 재해석」이 보여주고 있듯이 대중적인 민족주의 조직이 없음으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이 창설한 베트남 운동은 베트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치적인 공백을 채울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남부의 일부지역에서는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 같은 조직들이 지역 군벌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베트남의 지위와 베트남 운동의 신용은 1941년 이래로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반프랑스적(‘반식민주의’) 그리고 반일본적(‘반파시즘’) 입장을 고수했다는 데서 비롯되었음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읽기: 베트남 8월혁명에 대한 재해석(Huynh Kim Khanh, 'The Vietnamese August Revolution Re-interpreted',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0(1970-71). Excerpts taken from pages 761-82.)

베트남 공산주의 - 초기/ 베트남 전선/ 봉기준비/ 8월혁명/ 뒤돌아본 8월 혁명

4. 열전과 냉전 사이 인도차이나에서의 독립정착

(1) 인도차이나 독립정착과정

인도차이나에서 일본 군대와 프랑스 행정부의 불편한 공존은 1945년 3월 일본이 식민 정부를 제거하고 프랑스인들을 구속시킴으로서 종결되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독립된 국가를 다스리는 책임을 이전에도 프랑스 보호체제 내에서 군림했던 군주들, 캄보디아에서 시아누크, 라오스에서 시사봉 봉, 베트남에서 바오 다이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종의 권력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었으며 베트남에서 이 공백은 점차로 베트남애국전선(베트남)이 채우고 있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베트남은 즉시 권력을 장악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의 독립을 선언했다. 몇 주 있다 동남아시아사령부가 남부 인도차이나로 들어오고 중국국민당 군대가 일본의 항복을 감독하고자 북쪽을 점령했을 당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남부에서는 그 위치가 다소 약했지만 북부와 중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독일과 협력했던 비시정부로부터 1944년 권력을 이양 받은 드골 장군 하의 자유 프랑스 정부는 인도차이나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보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결의했다. 전반적인 식민 계획은 인도차이나 연방을 창설하고 이 연방 내에서 인도차이나의 개별 국가

들은 프랑스가 임명한 고등주차관(High Commissioner)의 전반적인 지휘 하에 자치정부를 운영하게 될 것이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관한 한 이 계획은 1946년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부드럽게 실현되었다. 캄보디아의 군주, 시아누크와 정치 엘리트들 그리고 라오스의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와 그들의 상징적인 수장인 시사봉 봉은 1946년과 1954년 사이에 자치정부의 권한을 늘려나가는 협상을 하는 동시에 이 두 나라는 국방, 경제, 외교정책,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정치엘리트 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분열과 갈등이 있긴 했어도 1950년 중반에는 안정된 독립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모두 베트남과 프랑스간의 전쟁에 말려드는 것이 불가피했고 이 둘은 냉전의 불모가 되어갔다.

프랑스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인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다. 남부에서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사령부를 이어 발판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 발판으로부터 1945년 후반 동안 남부 베트남의 나머지 도시에도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북부에서 민주공화국의 지도자 호찌민은 일본 항복 후 연합국 조치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북부를 점령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 군대와 쉽지만 않았던 공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46년 초 중국이 베트남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자 입지가 약했던 프랑스는 북부와 중부 베트남의 지위에 관해 베트민과 협상해야 했다. 이들이 이룬 합의는 아주 모호했다. 즉 여기서 민주공화국과 베트민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권위를 전반적으로 인정했으며 반대급부로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의 자율권을 인정했다. 이는 양측 다 자신의 일시적인 약점을 인정했다는 것의 다름 아닌 표현이었다. 1946년 3월에서 9월에 걸친 협상과정 동안 두 당사자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의 기반도 없음이 드러났다.

1946년 12월 프랑스와 베트민 간에 무력충돌이 시작되었다. 1946년 동안 프랑스는 베트민과 협상하려고 노력했던 반면 동시에 특히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중부 산악 고지대(Central Highlands)와 남부에서 강했던 분리주의 정서를 부추기면서 민주공화국의 입지를 고의로 사보타지시키려고 힘썼다. 1947년 이후 프랑스는 방침을 바꾸었다. 프랑스는 베트남 민족주의자 운동권내에 있는 이념적인 분열을 이용하여 베트민운동이 명백히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널리 선전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전략은 프랑스가 식민통치기간 중에 온건한 민족주의가 대중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장기간의 눈물겨운 협상 끝에야 프랑스는 점차로 베트남의 '적법한' 민족주의 정부인 '베트남국(State of Vietnam)'을 건설했다. 이 국가의 주역은 프랑스 보호령 하에서 베트남을 지배했으며 일본이 세운 베트남 정부의 명목상 대표로 행동했던 다른 아닌 바오 다이였다.

프랑스의 분명한 목적은 반-식민주의 갈등을 공산주의자 베트남과 반공산주의자 베트남의 내전으로 전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초 이 새로운 국가, 베트남국의 창설은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확고히 지켜주지 못할 것임이 점차로 분명해졌다. 바오 다이와 그의 정부는 프랑스를 위해 효율적인 군대도 믿을만한 정치적 지원도 해줄 수 없었다. 더욱이 1949년과 1950년 사이 프랑스-베트남전쟁의 성격이 소규모의 게릴라 투쟁에서 전면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급히 충원된 바오 다이의 베트남국가 군대, 지방 시민군과 특별 군부대의 도움이 있었지만 프랑스가 이러한 전쟁을 감수할 수 있는 인력이 되기는 못했다. 디엔 비엔 푸 전초기지지에서 프랑스가 맞이한 극적인 패배이전인 1954년 초에도 상황 진전은 프랑스의 철수, 민주공화국 하에서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로 향하고 있었다.

(2) 냉전과 1954년 제네바협정

그러나 1950년대 초 베트남의 상황은 이 지역에 냉전이 침투하면서 급격한 영향을 받았다. 1945년에서 194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소련과 서양의 '반-파시스트' 연합이 깨어졌으며, 유럽은 소위 냉전을 맞이했다. 1949년 공산주의 세계와 서구간의 대결구도는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을 패배시키고 북경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아시아로 퍼졌다.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비공산주의 정권인 남한을 침입한 1950년에 냉전의 긴장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서구에게, 그리고 특정하게는 미국에게 동아시아는 냉전의 전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1950년 베트남에서의 전쟁도 새로운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을 갖게 되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공산주의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며, 공산주의 진영에 충실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프랑스를 지지하여 바오 다이의 베트남국가를 프랑스 식민통치를 이은 적법한 정권으로 승인하고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조를 들어 분기 시작했다. 전쟁을 계속해야겠다는 프랑스의 의지가 1953년과 1954년 사이 끊임없이 박약해지고 있었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베트남의 승리를 막아보겠다고 버리고 있었다.

1954년 초에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교착상태는 국제적인 협상을 통해서만 타결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1954년 봄 제네바에서 소집된 국제회의는 이러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이 때까지 고조되어온 국제적인 긴장의 수위를 낮추려고 시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대국 대표자들이 1954년 5월 베트남의 상황을 토론하기 시작하자 베트남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당당한 입장은 베트남을 공산주의자가 장악하게 놓아두지 않으리라는 미국의 결심과 부딪혔다. 급기야 정전이 합의되었으며 베트남 북부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남부에는 비-공산주의자 정권이 지배하게 되어 베트남은 일시적으로 분할되었다. 이들 잠정 정치체들 중의 어느 하나도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을 것이며, 베트남은 궁극적으로는 2년 후에 취해질 모호하게 규정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통일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왕국정부의 독립과 영토보전은 1954년 7월 제네바회의의 최종 선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3)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과 베트남의 분단, 1945-54

1946년 12월에 발발해 1954년 7월까지 계속된 베트남민주공화국(베트남)과 프랑스간의 전쟁은 특히나 1940년대 말에 냉전이 동남아시아에 확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프랑스가 식민전쟁을 두 베트남 정부간의 싸움으로 전화시켜려고 한 시도 때문에도 상당히 복잡한 양태로 진행되었다. 1965년 영국의 중앙정보부가 퍼냈던 다음의 보고서는 반공산주의적인 편견이 보이기는 하지만 존경할 만한 정도로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

지나고 보니까 더욱 명백해진 이 갈등의 역사를 엮어 나간 하나의 요소는 제네바회의 이전에 베트남/베트남민주공화국이 펼쳤던 정치적인 전략이었다. 베트남은 정통 공산당인 인도차이나공산당(ICP)이 창설한 애국전선이였다. 1945년 9월 인도차이나공산당이 지도하는 베트남이 베트남민주공화국(DRV)이라는 독립 국가 안을 입안하고 현실화했다. 같은 달 중국 국민당 군대가 일본의 항복을 감시하게 위해 베트남 북부로 들어왔을 때 친-중국국민당 베트남 정치인들, 특히 1930년대 이래로 중국에 망명하고 있었던 베트남국민당(VNQDD)과 동맹회(Dong Minh Hoi)의 지도자들이 따라 들어왔다. 중국인들이 이들 정치인들을 권좌에 앉히고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호찌민은 유연하고 기민하게 행동했다. 그는 베트남국민당과 동맹회 정치인들을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와 국민의

회에 수용했으며 1945년 10월 인도차이나공산당의 해산을 선언했다. 이 조치는 순전히 명목적이었으며, 인도차이나공산당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을 비밀리에 계속 지도했다. 중국국민당군대가 1946년 봄 베트남 북부를 떠나자 친-중국 정치인들은 권력에서 배제되었으며 어떤 경우는 숙청되었다. 1949년 중국공산당이 승리한 이후 인도차이나공산당은 베트남노동당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재등장했으며,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정통 공산주의자 정권임을 선언했다. 이는 공산주의 정치의 복잡한 책략이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비교적 손쉽게 북부와 중부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반면 남부 코친차이나 지역에서는 1945년 이래로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 지방에 자리 잡았던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 종교 운동단체를 비롯한 지방의 정치 세력과 경쟁해야 했다. 1945년 8-9월 베트남은 이들 조직체들과 잠시 화해하기도 했으나 늦어도 1947년에 이르면 이들과의 결별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후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는 점차 프랑스와 협력했다. 그리하여 코친차이나의 대부분은 1946-54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베트남의 통제 밖에 있게 되었다.

되돌아 보건데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 끌어낸 합의에는 심각한 결점이 있었음을 언급해야 한다. '강대국'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합의는 베트남과 프랑스인 군사령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프랑스 군대가 1956년 4월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1956년 7월로 예정된 '베트남 전국' 총선거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제네바 회의의 '최종선언'은 강대국의 입으로만 보장되었다. 더욱이 미국과 베트남 국가(남베트남)는 이들 협약에 말로 동의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 결국 제네바회의가 이룬 결정은 즉각적인 정전이었고 이 휴전으로 인해 남과 북에서 각기 군대를 재조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 '일시적인' 베트남의 분단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두 개의 다른 '정치체'가 태어나도록 했다. 베트남의 미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화시킬 아무런 의지도 조치도 없었다.

1945년에서 1954년에 일어난 사건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1954년 베트남이 서로 겨루는 두 개의 다른 국가 정부로 분단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도차이나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동적인 과정을 파악하게 해 준다.

읽기: 베트남에 대한 영국중앙정보국의 보고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British Information Services), Vietnam (London: HMSO, 1965). Excerpts taken from pages 1-17.) 베트남민주공화국/ 프랑스는 코친차이나에서 식민통치를 재건/ 중국군의 베트남 북부 점령/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협상/ 1946년에서 54년에 걸친 전쟁/ 베트남민주공화국의 공산주의자/ 바오다이 정권의 수립/ 국제적인 측면/ 군사작전, 1951-54/ 제네바 협정/ 베트남 정전협정/ 베트남공화국 [베트남국가]의 건설/ 난민, 1954-55

5.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과 미국의 패배, 1954-75

(1)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 냉전 대결구조

제네바협정으로 서구, 특히 미국은 대륙부 동남아시아에 반공산주의 '차단막'에 해당하는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이 방어 전략의 초석은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를 마련한 집단안전보장조약이었다. 이는 1954년 말에 맺어진 상호방어조약으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파키스탄(당

시에는 동파키스탄이었고 지금은 방글라데시인 지역을 포함), 필리핀, 타일랜드, 그리고 영국을 한데 묶은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조약의 중요성은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면에 있었으며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전략은 주로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립된 긴밀한 미국-타일랜드 우호관계 둘째, 제네바협정이 라오스를 냉전의 중립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 반공산주의 '요새'를 건설하는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베트남에 생존 가능한 반-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하려는 노력에 두어졌다. 1950년의 시각에서 서양과 전세계 공산주의 간의 냉전에서 최전선이라고 간주되었던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행해진 군사적인 원조와 조언, 전략적인 경제 원조,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 이전은 모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최전선'지역의 후방에는 [미국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갖춘 필리핀과, 그리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긴밀한 후-식민 관계를 맺고 있던 말라야 지역이 중대한 '지원부대'의 역할을 했다.

미국이 이 안보망에 온갖 신경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이 이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에서 운곽을 드러낸 이 관계망은 애초부터 분명 미국과 이전의 식민 강대국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최근에 독립을 이룩한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당연하게도 '신-식민주의'의 전형적인 본보기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시도에도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미국과 서구의 편에 서지 않겠으며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 블록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결정한 '비동맹' 정책은 1950년대에 이들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대안으로 보였다. 이는 신생 독립 국가의 많은 '대중에게 카리스마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또한 '비동맹' 국가는 세계무대에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우누의 버마, 수카르노 하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시아누크 하의 캄보디아 모두 국제적인 사건에서 '비동맹' 입장을 취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비동맹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서구의 '신-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점차 기울었다. 그 결과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미국 그리고 캄보디아-미국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1950년대에 미국은 공산주의 세계 주변에 우방 국가의 안전 블록을 건설하는 단순한 정책으로는 공산주의의 전복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은 서양과 공산주의의 전세계적인 대치상황은 양자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핵시대에는 전쟁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장에서 보다 세련된 경쟁이 추구되어야 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소련과 미국 모두에게 대결의 공간은 공산 불력에 대한 철조망이 쳐진 주변을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탈식민지화되고 있는 세계라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소위 '제3세계'라고 알려진 이 지역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신생 독립 민족국가가 식민 강대국 정권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건설하고, 가난과 후진성에서 탈피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힘쓰고 있었다. 이러한 거대한 사명은 종종 전쟁의 와중에서,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했으며 야심차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제·정치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이 해방을 맞이한 국민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기대감을 충족시켜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는 취약점을 가득 안은 채 살얼음판과 같은 과도기를 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내부로부터 정치적인 격변의 손쉬운 표적이 되기도 했다.

(2) 라오스 위기와 지역 전복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안전망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이 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간주되었던 두 국가인 라오스와 남베트남에 본래부터 내재하고 있었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

제네바협정은 라오스왕국(Royal Lao government, RLG)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인정했지만, 직접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인 '파뎃 라오(Pathet Lao)' 운동을 국가 체제 내로 통합시키기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야 함을 규정했다. 라오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반체제론자들로 구성된 이 파뎃 라오 운동은 1950년 당시 라오스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베트남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통합력을 제공했던 군사적·정치적 세력이었다. 베트민의 도움으로 파뎃 라오는 베트남-라오스 북동부 국경지대와 라오스-베트남 동부 국경지대를 따라 캄보디아에 이르는 지역에 '혁명기지'를 건설했었다.

라오왕국 정부와 파뎃 라오 간의 협상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서 1957년 사이 진전을 보았으며 파뎃 라오가 군사적, 행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라오스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58년과 1961년 사이 라오스는 냉전이라는 대치상황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에 휩싸이게 되었다. 미국은 파뎃 라오가 '내부로부터' 라오왕국정부(RLG)를 전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 이들 간의 정치적인 제휴를 막고자 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들 간의 합의를 무효화시켰으며 강한 반-공산주의 정권 창출을 고무시켰다.

1958년과 1959년 정치적 합의가 무산된 이후 라오스에서는 내전이 발발했다. 파뎃 라오는 재빨리 동부 국경지대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립하고, 1961년에 이르러서는 왕국 정부의 핵심지역인 메콩 지역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되어 미국은 라오왕국정부가 미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반공산주의 '요새'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허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파뎃 라오-북베트남이 라오스를 접수하도록 놓아둘 수도 없었고 미국-동남아시아조약기구가 대규모로 군사적인 간섭을 단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급히 제네바에서 국제회의를 소집한 미국은 1962년 라오왕국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연합안(coalition agreement)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몇 달도 되지 않아 이 연합은 깨어졌으며, 1963년부터 1975년 사이 라오스는 공산주의자가 우세한 북부와 동부 지역(소위 '호찌민 루트'를 포함하여)과 라오왕국정부가 지배하는 메콩강 지역으로 분열되었다.

1958년에서 1962년 사이에 있었던 '라오스 위기'는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 서방의 지위가 극히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베트남이 친-서방의 남베트남을 해방시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동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라오스와 버마가 공산주의 중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했다. 라오스와 마찬가지로 버마도 1948년 독립 이래로 카렌, 카친, 친 민족 분리주의자 운동과 여러 공산주의자 파당들의 폭동과 반란사태에 직면해 있던 허약한 국가였다. 중국의 내전 말기에 북동부 버마로 중국국민당 군대가 도망쳐 들어와 버마-타일랜드 국경지대에 할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과 공산주의 중국이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이 지역에서 대치해야 함을 의미했다. 양측 모두 이 지역에 영향력을 동원하여 복잡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려고 했으며 이러한 경쟁은 메콩 국경 지대를 따라 북동부 타일랜드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말라야-타일랜드 국경지대로까지 확대되었다.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 가장 중요한 친-서방 국가인 타일랜드는 약소국가들과 위협적인 반란세력들에 포위되어 있었다.

1947년 유럽에서 봉쇄정책을 실시한 후 미국은 핵무기로 지원을 받는 집단안보조약으로 탄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지했다. 또한 1954년 동남아시아조약기구라는 집단안보조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미국은 태평양에서 필리핀, 일본, 대만, 한국 그리고 앤저스(ANZUS, 오스트레일리아·미국·뉴질랜드 3국의 공동방위체) 조약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수많은 안보 조약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국제 안보조약은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의 인적 우세라는 움직일 수 없는 이점 때문에 미군이 실패했던 경험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리라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의(1953-61) 의지를 반영했다. 앞으로 어떤 곳을 공산주의자들이 침입하더라도 공산주의 세계의 심장을 향해 '대규모의 보복'으로 맞설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이 거의 완성되고 있었던 1950년대 중반이 되자 어떤 의미에서 이는 이미 쓸모없는 구식의 장치가 되어버렸다. 1953년 스탈린의 사후 소련의 지도자들이 제안한 '평화 공존'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전쟁은 사회주의의 전세계적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에 의한 상호 파괴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두 '체제'간의 대결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는 세계적 패배를 피하기 위해 전쟁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의 군사방어 체제는 계속 증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를 통해 이 투쟁의 장은 제3세계로 옮겨갔다. 제3세계에서 이 냉전 대치 양상의 전형적인 예를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에 발생했던 '라오스 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라오스 왕국은 갑자기 두드러지더니 베트남 전쟁이라는 좀더 커다란 드라마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음 글은 이 책의 편집자가 쓴 것이다. '라오스 위기'시에 일어난 사건과 중요성을 요약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이들 사건의 복잡 다단한 배경을 설명하려고 했다.

읽기: 라오스 위기의 배경, 1958-62 (Clive J. Christie, 'The Background to the Laos Crisis, 1958-62') 독립의 역사적 배경/ 전쟁의 시대, 민족주의 그리고 독립, 1940-54/ 1954년 제네바협상에서 '라오스 위기' 까지/ 라오스 위기/ 라오스와 베트남 전쟁

(3) 베트남위기 - 남베트남에서의 반란과 미국의 개입, 1954-65

1955년 바오 다이의 국가 수장직을 대신한 응오 딘 지엠 수상(나중에 대통령이 됨)하에서 전도 유망해 보이는 초두를 장식했던 남베트남 정권이 1950년대 말에는 내부 약점이 심각하다는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위에서 언급한 상황 때문에 미국은 이 정권을 한층 더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남베트남 정권의 난관은 궁극적으로 프랑스가 공산주의 정권인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인위적으로' 창출해냈다는 바로 그 기원에서 비롯되었다. 이 국가가 본래부터 '국민의 신망(national credibility)' 위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지엠은 눈에 띠일 정도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럴수록 국민의 신임은 더욱 낮아졌다. 1954년 이래로 미국과 지엠 정권은 '국가-건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강제로 결행했다. 주안점은 1945년부터 1954년 사이 프랑스가 만들어 놓은 임시변통의 군사지도자 연합(war-lord alliances,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 지도자를 포함하여) 세력을 제거하는 데 두어졌다. 이 오합지졸의 연합세력은 취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오 다이 국가의 주된 버팀목이었다. 이 복잡한 구조는 응오 딘 지엠 하에서 마을수준까지 직접 뻗어 있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지방 정부 구조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지엠 정부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정 요원도, 이를 받쳐 줄 수 있는 지방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그리하여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남베트남(1955년 이후에는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 RVN)으로 알려진 정권)의 농촌 지역은 통치의 진공상태로 남겨졌다. 옹당 이러한 권력의 공백은 1945년부터 1954년 사이에는 남부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베트민의 저항망에 의해 급속히 채워졌으나, 제네바 회의가 남베트남을 비-공산주의 지역으로 지정하자 베트민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1956년 지엠이 농촌 지역에 숨어 있던 베트민 저항 요원들을 뿌리 뽑는 일에 집중하자 이 저항운동망은 오히려 더욱 더 확대되었다. 하노이에 있는 북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첫째 지엠과 미국은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 협상할 의사가 없음과, 둘째 미국은 지엠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과, 셋째 남베트남에서 현지 저항망이 지엠 정권에 대항한 세력들을 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자, 1960년 남베트남 국가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for South Vietnam, NLF SVN, 일반적으로 '베트 콩' 또는 '베트남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조직)의 지도 하에 남부정권에 대항하는 전면적인 '민족 해방' 투쟁을 공공연하게 촉구했다.

남베트남의 전복을 막겠다고 결심하고 있던 미국은 북부 정권이 남부 저항운동에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하자마자 원조를 더욱 늘여 나갔다. 그러나 미국은 북부로부터 유입되는 요원과 물자로 무장한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저항운동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남부 정권에 막대한 원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원조가 증가하고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특히 1963년 중반에서 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엠 정권의 내부 정치 문제에 점차로 더 연루되게 되었다.

미국은 남베트남이 지닌 문제는 프랑스에 의해 창출되었던 국가의 본질에 있다기보다 지엠과 그 가족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졌다. 그러나 지엠 정권이 1963년 11월 미국의 묵인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축출당한 후 정치 상황이 개선되고 안정을 되찾기는커녕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남베트남이 위기에서 위기로 전전할 때마다 군사 원조와 개발 원조가 쏟아져 들어갔으나, 이 원조는 북베트남에서 호찌민 루트를 따라 남부로 내려오는 군인과 무기 때문에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1964년 중반에 이르러 미국 행정부는 먼저 호찌민 루트를 그리고 나서는 북베트남에 있는 주요 표적을 직접 겨냥한 폭격을 계속 단행해 이들이 남부의 반도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갔다. 그러나 1965년 초가 되면 미국이 전투 부대를 직접 투입하지 않는 한 남베트남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1965년을 통해 미군의 파병이 증강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의] 단계적 확대'의 과정은 미군의 전략이 주요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전략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토벌작전'으로 옮겨감에 따라 절정에 달했다.

1954년 6월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이 베트남국가(이제는 남베트남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수상이 되었다. 1954년과 1956년 사이 지엠은 미국의 상당한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했다. 그러나 1956년에서 1960년까지 남부에 남아 있던 구 베트민 세력은 다른 반체제론자들과 함께 지엠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미국은 1960년과 1963년 사이 이 정권에 대한 원조를 십분 증가시켰으나, 1963년에 이르러 남부에서 상황의 호전을 막는 최대 방해물은 지엠정권 자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3년 11월 지엠의 암살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악화되었다. 지방에서 반란은 확산되었으며 사이공에서는 단명한 민간 정부와 함께 군사 위원회도 자주 바뀌면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었다. 1964년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라오스에 있는 ‘호찌민 루트’와 북부 자체를 겨냥한 폭탄 공격을 확대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북부로 하여금 남부 반도에 대한 지원을 중단케 하고 그럼으로써 남베트남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점차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5년 초가 되어 직접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남베트남을 구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고 1965년 말에 이르러서는 약 150,000 미군이 남베트남에 파병되었다.

버나드 폴은 학자이자 기자로 이들 사건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다. 역사가들의 행운은 사건이후에 현명해 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참으로 사건 이후에 이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작업은 역사가의 몫이다. 버나드 폴처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의 논문에서 그는 미국과 남베트남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 마을과 촌락을 지배하기 위한 투쟁을 잘 파악하고 있다. 1965년 2월에 발표된 국무성의 ‘백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공식문서)는 1954년 이후 남베트남의 역사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물론 이 백서는 북부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정당화하고 남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사건을 보는 두 가지의 해석을 비교해 보면 흥미롭다.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공산주의 중국이 미국의 대베트남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1950년 한국전쟁 중 미군이 중국 국경 근처에 다다르자 중국 군대는 대규모로 개입했다. 만약 미국이 직접 북베트남을 침입하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1958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전 기간을 통해 중국은 극단주의적 반-서구 이념을 가진 예견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간주되었다. 이 기간 중 미국이 세계적인 ‘악마’로 지목한 나라는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읽기1: 베트남 갈등의 근원(Bernard B. Fall, 'The Roots of Conflict' (January 1965), in B. B. Fall, *Vietnam Witness 1953-1966* (London: Pall Mall Press, 1966). Excerpts taken from pages 275-92.)

읽기2: US Department of State, 'White Paper'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7839, February 1965). 남베트남에 대한 하노이의 침략 약사/ 북베트남: 남베트남 정복을 위한 기지/ 잠입경로/ 결론

(4) 역설: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패배

전쟁이 베트남에서 기승을 부리고 라오스로 그리고 나서 1970년에는 캄보디아로 확대되었던 1965년-1975년 기간에 동남아시아의 ‘안정’이라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까? 1960년대 말 미국은 이 전쟁이 당장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지역에서 공산주의와 혁명적인 전복활동을 견제하는 ‘피뢰침’의 역할을 하리라고 단언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남베트남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베트남에 직접 개입하게 된 1965년의 시각은 아니었다. 미국의 군관료들은 일단 자신들이 전적으로 개입하기만 하면 자신의 군사적인 의지를 강제하고 남베트남에서의 소요사태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미국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베트남 정책을 입안할 때 ‘낙관적인’ 혹은 ‘비관적인’ 전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남베트남에 개입하고, 급기

야 전쟁을 접수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정치적 목표가 분명히 성취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남베트남 정권의 붕괴와 미국의 수치를 피하기 위해 취해진 임시방편의 미봉책들이 쌓인 결과인지?

이 기간 전체를 통해 대베트남 정책은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선택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제한했던 두 가지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편 어느 당이 집권하던 미국 행정부는 1949년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완패(debacle)를 기록할 수는 없었다. 다른 한편, 1950-53년 사이 한국전쟁에서 피비린내 나고 값비싼 군사적 공지를 경험한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의 지상전에서, 특히 이길 수 없는 중공과의 군사적인 대치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정책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 결과 린든 존슨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언제나 베트남 분쟁의 전략적인 차원에 엄격한 제한, 예를 들어 북베트남, 또는 전략적으로 심장 지역인 동부 캄보디아와 남동부 라오스에 대한 공격이나, 소련 군사 원조의 주요 통로인 하이 폰에 대한 직접 폭격과 같이 특히 중국의 개입이나 소련의 보복을 초래하여 확전의 양상을 띠게 할 수도 있는 작전을 자제하는 제한을 두었다. 어찌 보면 북베트남에 대한 맹렬한 폭격 통상은 제한적인 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전략적 자기-제한을 벌충하기 위한 방도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논리상으로는 '승리'를 향해 가지 않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목적을 향해 가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1967년에 이르러 이 전쟁이 본질상 '이길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한층 더 명확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의 범주를 확대해야 할 달갑지 않은 위험도 증가하자 비관주의가 슬며시 끼어들기 시작했으며 행정부의 사고를 전염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으로 1967년까지는 응우옌 반 티에우(Nguyen Van Thieu) 대통령이 지도하는 남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화되었음도 사실이다.

1967년 말에 가서는 이 전쟁에 대해 심각한 장기 의혹이 수물거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점으로 인해 기존의 정치노선은 계속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1968년 1월말 베트남 신년 휴일(Tet) 동안 북베트남과 남부의 반정부활동가들은 중요한 공세를 취했다. 이 뗏공세는 기본적으로 남베트남 정부의 사기를 꺾고 그 기초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졌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며, 특히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은 대규모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군사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공세는 바로 대통령선거기의 시작에 미국 여론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했다. 이는 또한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비관론을 공론화시켰으며 굳어지게 만들었다.

1968년에는 베트남에 파견되는 미군의 숫자에 상한선을 그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이와 함께 그 해를 걸쳐 북베트남 전체에 점진적으로 확대된 폭격이 중지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탈-가속화'를 가져올 요량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전과 남부에서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고자, 파리에서 회담이 시작되었다.

미군은 이 전쟁에 전념해야 할 최고치를 남베트남 군대가 점차로 더 많은 군사적인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정해진 새로운 정책, 사실 1965년 전 상황으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황을 만드는 데까지를 미국이 해야 할 상한선으로 잡았다. 이 정책은 1969년 미국은 실상 분쟁 지역에서 우방국을 '대신한다'기 보다는 '뒤에서 민다'는 세계 정책을 의미하는 '닉슨 독트린'과 전쟁의 베트남화 즉 미군이 하던 최전선의 역할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 군대를 훈련하고 무장하는 데서 구체적인 모

습을 드러냈다.

닉슨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인 1969년에서 1973년 사이 그와 외무정책보좌관 헨리 키신저의 목적은 이 전쟁을 협상으로 타결짓는 한편 동시에 미국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다고 보여 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여론의 따지고 물음이나 압력을 따돌리고 북베트남의 지도자들과 비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이들 정책의 초점이었다. 그리고 '베트남화' 계획과 지방에서 '평정작업을 강화'함으로써 남베트남 정권을 더욱 강하고 더욱 자주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남베트남을 강화시키려는 이 정책에는 미군의 군사적인 후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1969년과 1972년 사이 군사력은 더욱 결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제까지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이전에 민주당 정부를 제약했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속박까지도 벗어버렸다. 1969년 캄보디아와의 국경선을 따라 있던 북베트남인과 민족해방전선의 은신처는 체계적으로 폭격을 당했다. 1970년 봄 미국-남베트남 합동 '침입'은 캄보디아 내지에 있는 이들 피난처에도 미치게 되었다. 1971년 남베트남 지상군이 호찌민 루트를 봉쇄하기 위해 남부 라오스로 진입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1972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는 여러 목표지점 중에서도 특히 하노이와 하이퐁에 대량의 폭탄이 투하되었다.

남베트남에 대해 미국이 이토록 군사적인 헌신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여 주었음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가 군사적인 선택권을 다한 1973년 초에는 하나의 전기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달가워하지 않는 남베트남 정부의 동의를 받아 정전 협상이 이루어졌다. 남베트남 내부에서는 '배치가 끝난' 휴전상태가 될 것이며 사실상 공산주의자 지역과 정부 관할지역이 어우러진 국가 수립에 동의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남베트남 정부간에 정치적인 협상 타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장치들이 동원되었지만 미국이 얻어낸 본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남베트남 정권은 여전히 온전시켰다는 점이었다. 북베트남이 협상을 통해 얻은 주요한,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요소는 미국은 군사적인 철수를 마무리할 것임에 반해 북베트남의 군대는 여전히 남베트남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동의에 기초하여 미국은 1970년대 초에 진전된 복잡한 세계정세라는 맥락에서 특히 중소의 대치로 인하여 더 이상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된 분쟁 지역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이 때에 이미 전쟁은 북과 남의 베트남을 황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호찌민 루트와 자르 평원(Plain of Jars)같은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가차 없이 폭격을 가함에 따라 라오스를 영구적인 내전의 상태로 운명지우고 있었다.

(5) 캄보디아 비극의 기원

1970년까지 시아누크 왕은 수도 없이 많은 안정화 정책을 동원하여 캄보디아에 일정 정도 안정을 유지했다. 그는 서구와 공산 블록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려 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는 북베트남과 중국에 '기대고' 있었으며, 캄보디아 내부에서 남베트남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은신처'를 모르는 척 눈감아 주었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결국 공산주의자 진영이 베트남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국내적으로 그는 친-서방 우익과 크메르 공산주의자 또는 '크메르 루즈'를 포함하는 좌익 집단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그의 정권을 불안하게 하려던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시도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수카르노처럼 상당히 개인화된 정부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1960년대 초에 그의 상투적인 수사어구는 민중적이고 반-서구적인 색채를 점점

더 락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이 정권을 함께 묶어 놓고 있었던 실이 풀리기 시작했다. 행정부에 있던 우익 엘리트와 군대는 1970년에 시아누크를 추방했으며 '크메르 공화국'을 건설했다. 이 새로운 정권이 중립을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친-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북베트남과 중국은 크메르 루즈를 무한정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했다. 캄보디아는 이후로 1970년에서 1975년까지 계속된 내전에 휘말려 황폐되었으며, 이 폐허로부터 이 나라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6) 베트남 전쟁의 전환점: 1968

1968년 1월 31일 베트남 신년(땃, Tet) 휴일 동안 민족해방전선(NLF)과 북베트남은 합동으로 사이공과 남베트남의 지방 수도에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다. 이들 공격은 격퇴당했고 남베트남군(ARVN)은 강경했으며 민족해방전선(NLF)은 197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전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공세는 1967년을 통해 미국에서 축적되어 왔던 그리고 사적이기는 하지만 국방장관 로버트 맥라마라에 의해 표명되기까지 했던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의혹을 결정화시켰다. 미군의 참여가 1973년 초까지도 계속되기는 했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땃 공세는 이 전쟁의 전환점이였다.

아래의 두 요약문 가운데 첫 번째는 헨리 키신저가 쓴 1968년의 논문에서 발제한 것이다. 이는 땃 공세까지의 미국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대가답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버나드 폴이 초창기 논문에서 (8장 참조) 밝힌 논점을 다른 시각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땃공세 직후인 1968년 3월 1일 맥라마라를 이어 국방장관이 된 클라크 클리포드(Clark Clifford)의 글이다. 기본적으로 이는 예전에는 '매파'였다가 땃 공세 이후 베트남 정책의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다보니 베트남에서의 기존 정책 방향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으며, 그리고 더욱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왜곡하고, 경제를 약화시키며, 미국 사회를 파편화시키고 있다는 견해로 돌아선 사람의 이야기이다.

땃 공세가 의심할 여지없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지만 전쟁의 방향성에 관한 의혹은 1966년과 1967년 두 해 동안 의회, 방송매체, 학계 그리고 심지어는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불거져 나오고 있었다. 땃 공세의 중요성은 '논쟁의 균형을 비둘기파'에게 유리하도록 옮겨놓았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1968년 3월과 1969년 1월 사이 존슨 재직 시절의 정책과 이를 이은 닉슨의 재임 시절의 정책 사이에는 계속성이 있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전쟁을 '베트남화'시킨다든지, 협상으로 강조점을 옮긴다든지, 미국의 군사전략을 특히 공군력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시 초점을 맞춘 닉슨의 정책은 클라크 클리포드의 논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읽기1: 베트남 협상(Henry A Kissinger, 'The Vietnam Negotiations',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ree Essays*(New York: Norton, 1969). Excerpts taken from pages 101-8.)

읽기2: 베트남 문제에 대한 재검토(Clark Clifford, 'A Vietnam Reappraisal', *Foreign Affairs*, Vol. 47, no. 4 (July 1960). Excerpts taken from pages 609-22.)

6. 베트남의 통일, 중월전쟁 그리고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1) 인도차이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승리와 그 영향

역설적이게도 이 새로운 동남아시아 시대는 맑스-레닌주의가 마침내 인도차이나에서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시점에 굳건해지고 있었다.

1973년에 체결된 인도차이나 정전협정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첫째 라오스와 남베트남에 있던 비-공산주의 정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나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주둔을 철폐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앞으로 인도차이나에 있는 비-공산주의 정권들을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재도입하여 도와주지 않는 한 군사적 균형은 공산주의자 쪽으로 기울 것이 자명했다.

캄보디아에 관한 한 크메르 루즈가 1973년 정전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크메르 루즈와 크메르 공화국 간의 내전이 약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었고, 1973년 여름 이후에는 비-공산주의자 측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이는 미국 의회가 폭격 지원을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했다. 또한 정전 협정의 거부는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라오스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강경하고 교조주의적인 크메르 루즈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와 정책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초기 징후였다.

1974년에 이르러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 정치적 상황을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했다. 더욱이 정전은 남베트남 정권이 공고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하여 1975년 초에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이 개재되었다. 이때쯤 미국은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이를 이어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야기된 국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전쟁 경험으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남베트남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1975년 3월 북베트남이 중부 고원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남베트남 정권은 처음에는 중부 고원지대에서 그리고 나서는 북부와 중부의 해안 지방에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이공과 메콩 델타에서 무너졌다. 4월말 남베트남 국가는 사라졌다. 라오왕국정부도 베트남에서의 이러한 사건을 이어 급속히 붕괴되었다. 1975년 봄에 캄보디아의 내란 또한 4월 17일 크메르 루즈가 프롬펜을 점령함으로써 피할 수 없고 무시무시한 종결에 이르렀다.

남베트남의 극적인 붕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 왔지만 가장 단순한 설명은 반-공산주의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 의해 창설된 이후로 '민족주의적인 정통성' 이라든가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립적인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4년 이후 이 정권의 생존은 미국의 지원이라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생명유지 장치의 플러그가 빠지는 순간 이 정권의 붕괴는 단지 시간의 문제였다.

그리하여 3년 동안이나 동남아시아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분쟁이 끝나게 되었다.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는 수년 간의 투쟁과 인내를 보상받은 멋진 승리였다.(『비전과 승리: 1975년의 베트남 참조) 그러나 인도차이나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는 나머지 동남아시아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크메르 루즈의 지나침, 특히 프롬펜을 강제로 소개한 사건은 이들 새로운 공산주의자 국가들의 성격에 관해 안도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베트남과 라오스의 공산당들이 초기에 보여준 성명과 행동은 회유적이고 유화적이기는 했어도 1975년 이후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는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강제 프로그램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해서 인도차이나는 여타의 동남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노선을 취하고 있음이 명확했다. 분명 이들 정권들은 예견이 가능한 장래 동안에는 국내 재건 사업에 몰두할 것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에 내재되어 있는 팽창주의적인 동력에 더하여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분쟁을 무장력('투쟁')으로 해결하려는 지도자들의 성향은 인접 국가들에게는 최소한 불편함으로 그리고 최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아래는 베트남공산당(이전 역사에서는 인도차이나공산당으로, 이후에는 베트남노동당으로 알려진)의 당시 총서기 레 두안(Le Duan)이 1975년 봄 남베트남이 무너진 후에 한 연설이다. 원칙적으로(technically) 승리는 1969년 인민혁명정부(People's Revolutionary Government, PRG)를 구성했던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for South Vietnam, NLFVN)의 것이었다. 그러나 북부의 공산주의자들이 남부의 반란자들에게 단지 '형제의 우애에서 비롯된 지원'을 해주었을 뿐이라는 공들인 외관과, 베트남의 통일은 북과 남의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허울은 상당히 빨리 제거되었으며, 베트남은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1945년 8월혁명에서 호찌민이 처음으로 잠시 성취했었던 독립과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이제 마침내 확보된 것이었다.

1975년 베트남, 정확히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의 승리는 싱가포르의 외무장관 라자라트남이 몇 년 전에 예견했던 모습과는 아주 다른 아시아의 미래를 제시했다. 아래의 연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베트남 지도자들은 이 승리를 세계 공산주의 운동 전체를 향한 그리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원칙을 위한 진일보라고 보았다. 미국 제국주의는 베트남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후퇴한 것으로 보였다.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소련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고도로 모험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게 되었음은 현대 국제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중의 하나이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돈을 낭비했으며 이념적인 충성밖에는 소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제3세계 정권을 지지하며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를 흘렸다. 1975년 인도차이나에서 있었던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오만과 폭력을 고무시켰으며, 이는 다시 1980년대와 1990년의 인과응보(nemesis)에 적지 않게 공헌했다.

연설에서 레 두안은 남베트남인에게 미국 제국주의의 부패한 잔재를 말끔히 청산한 새롭고 빛나는 사회주의의 미래를 약속했다. 사실 미국은 남베트남 국가를 유지시킬 수 없었지만 남베트남 정부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지역에 전쟁으로 생성된 근대적인 도시 경제(modern urban-enclave economy)를 창출해냈다. 남베트남의 도시 인구는 자본주의를 아는 지식의 나무(Tree of Knowledge of capitalism)에서 열린 열매를 맛보았으며, 계속되는 십년 동안 사회주의적인 계획 경제에 통합될 수가 없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이와 같은 경제적인 만큼이나 문화적인 차이는 통일된 베트남이 이후로 계속 지고 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연설에서 레 두안은 인도차이나에 있는 세 개의 사회주의 정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정권 간에 우애관계가 강고히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3년 반 이후에 이들 정권들은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

레토릭 저변에는 1975년 스파르타식으로 완전 무장된 베트남과 '해방된' 시민들은 국내 외의 전선 모두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다.

읽기: 미래를 위한 전진(Le Duan, 'Forward to the Future'. Extract from victory speech given on 15 May 1975, in Le Duan, *Selected Writing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7). Excerpts taken from pages 527-40.)

(2) 공산주의자들의 내파

사실 인도차이나의 공산주의자 정권은 1975년 이후 군사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이들의 폭력은 외부에 있는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하기보다 내부에서 서로를 향해 겨누어졌다. 1975년과 1978년 사이에 있었던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권간의 대립은 역사적, 이념적 그리고 전략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베트남의 팽창주의를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강대국 '후원자들'에게 기대려는 성향을 가졌다. 식민시대에 프랑스는 어느 정도 이러한 역할을 충족시켜 주었다. 1954년 이후 시아누크는 점차 공산주의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펼쳤다. 1970년에서 1975년까지 지속되었던 운이 나빴던 크메르 공화국은 미국에 의존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는 시아누크처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연계를 크메르 루즈, 또는 그 내부에 있는 가장 유력한 과당이 국내와 국제 문제 모두에서 '모택동'(마오 쩌 퉁) 노선을 상당부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 마오이스트 노선은 구 사회, 문화, 종교 그리고 사회 구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베트남에 대한 캄보디아의 역사적인 두려움은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역사적인 두려움과 쌍을 이룬다. 1949년 이후 두 나라의 정권이 모두 공산주의적이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의혹은 1945년 이후의 시기에도 언제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베트남과 중국의 공산당간에 있었던 균열은 북베트남이 중국의 마오이스트 노선을 따르지 않고 소련의 이념적이고 국제적인 '노선'을 따른 1960년대에는 이념적인 차원을 하나 더하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탈식민화되어가고 있던 세계에서 소련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이 베트남-소련 축과 중국-캄보디아 축으로 해서 생성되었음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1977년과 1978년 국경시대 사건이 확대되던 중에 크메르 루즈 정권 내에서도 내부 불화는 점증하고 있었으며, 결국 1978년 12월 베트남과 캄보디아간의 분쟁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전환시켰으며 베트남과 중국간의 짧은 국경 전쟁이 뒤를 이었다. 1978년과 197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발 빠르게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설치한 사실은 이 지역에서 베트남의 타고난 팽창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최악의 우려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975년 4월 크메르 루즈 혹은 캄푸치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Kampuchea, CPK)은 미국이 지원하는 크메르 공화국에 대항한 5년간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서 정치의 적이나 계급의 적 혹은 민족의 적이라고 간주된 모든 이들을 아예 제거해 버리고 3년 반 간을 집권한 소름끼치는 정부가 들어섰다. 폴팟 정권은 극단적으로 외부의 것을 싫어하는 고립주의와 단순화된 형태의 마오이즘을 결합한 이데올로기를 발판으로 했다. 이 이데올로기는 모든 '봉건적'이거나 '부르조아적'인 흔적을 말 그대로 말소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가를 창조할 것을 요구하는 도그마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함께 크메르 루즈 정권에 내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캄보디아는 인접국가들과도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1978년 말 이러한 대결국면은 민주 캄푸치아(크메르 루즈가 자신들의 정권을 불렀던 이름)와 새로이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전면전으로 발전했다. 베트남이 곧바로 승리했으며 헝 삼린(Heng Samrin)과 다른 반체제 캄보디아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새로운 정권,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PRK)이 들어섰다. 중국은 1979년 2월 자신의 동맹자인 크메르 루즈와 함께 베트남에 보복하기 위해 북베트남 국경 지

대에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공격은 반격을 받았으며 제대로 무장을 갖추지 못한 중국의 적군은 약체를 드러냈다.

이 지역과 너머의 많은 이들은 이러한 사태 진전을 베트남이 우세를 점하는 공산주의 인도차이나를 만들어내려는 베트남의 오랜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로 간주했다. 이러한 우려에 더하여 베트남이 소련과 전략적이자 이념적인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베트남의 팽창은 바로 소련의 힘을 이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킴을 의미하리라는 걱정과 연결되었다. 1978년 이후 미국, 중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막강한 비공식적인 동맹관계가 성립되어 베트남과 그 대리인인 소련의 야심을 제어하려고 했다. 베트남이 지원한 캄보디아 정권이 1980년대를 통해 계속 정권을 유지했다. 베트남으로서는 군사 점령을 계속하는 데에 드는 커다란 부담에 더하여 1980년대 말이 되면서 소련이 그 세계적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감에 더하여 1989년 캄보디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의 상황은 이 날 이후 국제연합이 주요 정치 야당세력들 간의 타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제화'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의 기원에 대한 간명하고도 설득력 있는 분석인 그란트 이반스와 켈빈 로우리의 『전쟁와중에서의 붉은 형제애』(*Red Brotherhood at War: Indochina since the Fall of Saigon*)의 결론 부분을 아래에 발췌했다. 이 책은 1984년 캄보디아 위기가 여전히 고조에 달해 있었던 때에 출판되었다.

읽기: 전쟁와중에서의 붉은 형제애: 사이공 함락 이후 인도차이나 (Grant Evans and Kelvin Rowley, *Red Brotherhood at War: Indochina since the Fall of Saigon* (London: Verso, 1984). Excerpts taken from pages 281-95.)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민경영

안병우(한신대학교)

1. 농업생산력의 발전

(1) 논 농사의 발달과 농경지의 확대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농업상의 가장 큰 변화는 밭농사 중심의 농업구조가 논농사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강남의 논 개발이 대표하는 논농사의 발전으로 농업에서 논농사의 비중이 밭농사의 그것을 상회하게 되었고, 동아시아가 쌀 농사지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논농사의 발전은 평연지의 개간, 수리관개시설의 발전, 품종 개량, 시비법의 발달 등 여러 현상을 수반하였다.

논농사의 발전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송에서 명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발된 강남의 수전이다. 당말에서 송대에 걸친 농업생산력의 눈부신 발전은 ‘농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그 핵심은 바로 강남의 水利田 개간과 그와 관련된 농업기술의 발달이었다.

강남에서는 용수지 관개에 의한 선진 농업이 선상지와 하곡의 평야지대에서 전개되고 양자강 중하류 델타지역의 저습지가 개발되어 새로운 농경지가 대규모로 출현하였다. 이러한 농경지 개발 양상은 산언덕에 사다리밭(梯田)을 개간하던 북송이나 고려전기의 개간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圩田(圍田, 湖田), 櫃田, 塗田, 架田(葑田), 沙田 등은 강남에서 개발된 다양한 수리전이다. 대표적인 수리전인 우전은 湖沼를 둘러 제방을 쌓고 그 가운데를 농지로 만든 것으로, 官이 만든 것과 民이 만든 두 종류가 있었으며, 萬春圩는 官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우전은 전호가 주로 경작하였다. 그러므로 수리전의 개발은 지주전호제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수리전 개발로 경지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송사』 식화지의 農田條에 회녕 연간(1068-77년)의 墾田이 455만 여 경인데 “隱田이 10분의 7인 점을 고려하면 간전수는 무려 3천여 만 頃이나 된다.” 고 하였다. 지역별로 간전의 분포를 보면 民田은 회남로(96만여 경), 강남서로(45만여 경), 강남동로(42만여 경) 등 양자강 중하류지역, 즉 강남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견해, 즉 송대에 蘇州와 湖州 부근의 델타지역에서는 제방으로

둘러싼 圩田 또는 圍田으로 불린 수리전이 대규모로 개발되었고, 그곳에서는 集約 多肥의 米麥 이모작을 하였으므로 그곳이 당시 최선진농업지대였다는 강남도작에 대한 통설적 이해에 관하여는 이문이 제기되어 있다. 우전이나 위전은 수리조건이 갖추어진 집약적 도작을 한 장소로 보기 어렵고, 도작의 선진지대는 델타지역이 아니라 많은 지류가 산간부에서 흘러내리는 곳에 형성되는 支谷평야지대였으며, 태호 주변의 델타지대가 도작 선진지대가 되는 것은 명대에 이르러서였다는 주장이다. 강남도작은 송대 지곡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에서 명대 이후 델타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로 변화했으며, 그 결과 15세기 중엽부터 “湖廣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호북과 호남을 비롯한 양자강 중류 유역이 농농사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양자강 중류지역은 14세기만 해도 강소와 절강에 비해 농업생산력이 크게 뒤진 지역이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이후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왔고, 이들 客民이 토착인과 경쟁하며 山野를 개간하고 강변과 호수 주변 저습지에 圩堤나 垸堤를 축조함으로써 농경지가 확대되고 농업이 안정되어 곡창으로 변하였다. 도작의 중심지가 지곡평야에서 대하천 하류로 옮겨가고 저습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된 것은 이 시기에 발생한 큰 변화이다.

고려에서는 12세기 무렵부터 수리관개 시설을 통한 개간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 수리관개시설의 특징은 군현 단위의 소규모 체언을 많이 만들고 저습지와 간척지 개발을 위한 河渠와 방조제를 건설한 점이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섬으로 들어가면서 해안의 농경지 개발은 오히려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는 “비옥한 땅이 연해지에 조금 있다”고 표현될 정도로 연해지 개간이 성과를 거두었다.

왜구로 인해 주춤하였던 연해지 개발은 조선 초기에 다시 활기를 띠었는데, 15세기의 저평지 개간에서 16세기에는 저습지 개간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간척사업인데, 대규모 간척사업은 국가가 주도하였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피난하였을 때 만든 좌우둔전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에 들어와 권세 있는 양반층은 노비나 일반농민을 역사시켜 서해안과 남해안에 堰田이라 불린 간척지를 만들었다. 한편 재지양반은 산간의 평평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속적으로 신전을 개발하였다. 16세기에는 대규모 하천을 막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새로운 수리시설(淤, 川防)도 축조하였다.

이렇게 개간된 농경지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었다. 그 결과 『세종실록』 지리지의 전결수를 보면 전국 336개 군현 전체의 수전 비율이 27%인

데 비해 경상, 전라, 충청, 경기 4개 도 연해지역 68개 군현의 경우는 평균 50%에 도달할 정도로 논의 비중이 높았다.

일본에서도 중세에서 근세초기에 걸친 시기는 최대의 개간시대였다. 개간의 주 대상은 대하천 중하류의 충적평야지대와 해안부의 간척지였고, 그에 따라 벼농사의 중심지가 산간지역의 평지에서 平野로 이동하였다. 전국기와 근세초기에 걸친 대규모 치수 관개 사업으로 평야부의 경지 안정도가 높아졌고, 집약적인 벼농사가 차츰 가능하게 되었다.

농경지 특히 논의 대개간 현상은 베트남에서도 나타났다.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간하고 지형의 특성에 따라 紅河를 비롯한 대하천 변에 제방을 축조하였고, 논에 관개하기 위한 수로도 새롭게 굴착하였다. 특히 찢(陳)조에서는 해안 구릉지대 개간을 중시하였으며, 개간을 감독하고 개간된 둔전을 관리하는 관직을 설치하였다. 제방은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洪德堤처럼 홍하 다이하의 하구지대에서 해수의 역류를 막는 역할도 하였다. 물을 신속하게 빼기 위해 준설도 시행했다. 거의 5백년 가까이 되었지만 이들 수리시설의 자취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2) 농업기술의 발달과 집약농법의 실현

농지 개간과 함께 농업기술도 발전하여 조방적 농업에서 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농지 이용기술의 발달, 시비법과 품종의 개량 같은 중요한 성취가 이 시기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집약농법의 실현 여부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농작물의 품종이 개량되고 새로운 품종이 보급되었다. 특히 벼 품종이 다양해졌는데, 占城稻의 전래와 재배는 동아시아 벼농사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었다. 점성도는 단위수확량에서는 재래종보다 떨어졌으나, 가뭄이나 냉수, 열악한 토양에 잘 견뎌내고 시비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생종인 까닭에 윤작과 二期作이 가능하였다. 이런 이유로 12세기 말에 이르면 강남지역 수전의 8,90%가 점성도를 재배하였다.

고려에서는 매미가 올 때 수확한다는 선명도가 조생종으로 재배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수리조건의 열악함을 견딜 수 있는 인디카계통의 赤米 품종이 13세기에 중국에서 도입되었다. 적미 도입으로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야지대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15세기에는 전국에 보급되어 미곡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렸다.

이 시기 새롭게 보급된 품종으로 주목할 것은 면화이다. 면화는 복건 광

동에서 양자강유역까지 재배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점점 더 널리 보급되어 고려말에는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일본은 무로마치시대에 조선에서 목화씨를 도입하여 목면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면화의 보급과 생산은 면직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의류생활에 혁명을 초래하였으며, 조선에서는 면포가 화폐로도 사용되었다.

북중국의 인구가 강남으로 이동함으로써 맥작이 강남에 보급되었고, 왕조 교체와 주민 이동에 의해 화북지역에도 벼농사가 널리 보급되는 등 농업의 교류현상이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보리와 콩이 널리 재배되고, 채소의 종류가 증가하였으며, 가마쿠라시대에 도입된 차 재배가 시작되어 급속히 퍼져나갔다.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작법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에서는 조생종의 보급에 의한 이기작과 함께 벼와 맥의 이모작이 송대에 성립하였다. 논농사에서는 직파법 대신 이식법이 일반화되었고, 논갈이에 犂, 耜와 함께 새로 발명된 耨를 사용하였으며, 모내기과 김매기용 농기구가 보급되었다. 관개를 위해 용골차, 筒車 같은 양수기구를 사용하였으며, 이기작 이모작과 관련하여 시비법이 발달하였다. 발농사지역인 화북지역에서는 조 보리 콩류를 조합한 2년3모작이 보급되었다. 노동생산성은 물론 토지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 집약농법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고려시기의 경지 이용에 관하여는 휴한법의 극복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 때 편찬한 『농사직설』에 수록된 수전의 경지이용도를 볼 때, 당시에 매년 경작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였고, 한전의 경우는 하삼도에서 2年3毛의 輪作法과 간중에 의한 연 2모 윤작법이 확립되었다. 그런데 『농사직설』과 통일신라기에 건립된 개선사 석등기의 ‘畦田’ 기록 등을 근거로 고려말 조선 초기에 연작상경이 달성되었다는 견해와 고려전기 ‘平田’에 대한 해석과 신라 말의 수리시설 축조 등을 근거로 이미 고려시기에는 연작상경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나아가 『농사직설』에 수록된 조선전기의 농업수준과 성격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있다. 즉 중국 화북지방의 농업권에 속하였다는 견해(김용섭), 강남에서 유래된 습윤지 농법의 시비법을 중심으로 한 집약농법이었다는 견해(이태진), 소가족을 농업경영의 기본단위로 하는 선진적인 집약적 소농경영이었다는 견해(宮嶋博史), 다수의 축력에 기반을 둔 노동생산성 중심의 노동절약적 토지집약적 기술에 근거한 조방농법이며 대농경영이 위주였다는 견해(이호철) 등이다.

조선전기의 농법을 둘러싸고는 이렇게 논란이 분분하지만, 고려후기에

이양법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牛馬廐肥糞 등을 비료로 활용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品官屬 같은 지방 유력자들이 이러한 선진농법의 도입에 앞장서서 토지소유규모를 확대한 모습도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벼농사에 이어 보리를 경작하는 이모작이 선진지대를 중심으로 보급되었고, 소나 말을 사육하는 농민이 늘었으며, 초목의 재와 우마의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무로마치시대에 이르러는 논농사에서 滲種法, 못자리 이용, 이모작이 전국에 보급되고, 수차 보급과 용수로 확대 같은 관개시설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신전 개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현상은 도작에서 집약농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가마쿠라시대 이후 수확량이 점차 증가하였다.

(3) 농업정책과 농서 간행

국가는 토지개간을 주도하거나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발달을 유도하였다. 송은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간에 적극적이었으며, 인종 경력 4(1044)년에는 수리에 관한 최초의 조서를 지방관에게 내려보냈다.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하면서 三司條例司를 설치하여 농전과 수리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증원을 차지한 요와 금도 농업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금은 한인을 동북 각지로 이주시켜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여 동북지방의 농업 발전을 촉진하였다. 유목민족인 원도 농업을 중시하여 중앙에 大司農司를 설치하여 농업과 수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고려와 조선도 군대나 백성을 동원하여 둔전 등의 형태로 직접 토지를 개간하거나 개간지에 대한 면세조치를 통해 개간을 유도하였다. 이미 고려초기에 주인이 있는 토지를 개간하는 경우에도 개간자의 경작권을 인정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몽골과의 장기전으로 황폐해진 농지를 복구하기 위해 사패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가마쿠라막부는 낭인을 모아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 개간정책을 추진하였고, 무로마치시대에는 다이묘(大名)들이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농지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였다. 개간지에는 일정 기간 세와 역을 면제하는 제도도 만들었다(鋤下年季). 베트남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축조하였다.

선진적인 농법을 정리하고 보급하기 위해 농서도 편찬하였다. 송의 진부는 『농서』를 썼고, 원에서는 大司農司가 『農桑輯要』를(1273), 王禎이 『농서』를 편찬하였다(1313). 중국의 농서는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되었으니, 宋本 『제민요술』이 고려와 일본에 전래되어 널리 활용되었고, 『농상집요』는

공민왕 때 고려에서 간행하였으며, 조선에서는 이를 이두로 번역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종 때 정초가 조선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고, 이후 강희맹의 『금양잡록』 등의 농서가 잇달아 편찬되었다. 이들 농서는 각기 다른 농업현실을 반영하였다. 일본에서는 17세기 전반기에 최초의 농서라고 할 수 있는 『淸良記』가 쓰여졌다.¹⁾

2. 농업경영형태 : 대농경영과 소농민경영

동아시아에서 농업경영 형태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경영 규모로 볼 때 흔히 대경영(대농경영, 지주경영)과 소경영(소농민경영)으로 구분한다.

대농경영은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는 경작할 수 없는 규모의 토지를 타인의 노동력을 부려 경작하는 농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농경영지와 그 주체는 대개 고려와 조선전기에는 농장과 지주 혹은 농장주로, 일본 중세에는 장원과 영주로 불렸다. 송대 이후의 대농지와 그 주체는 장원과 지주로 불려 지주의 영주적 성격은 부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농민경영은 自家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경영 규모와 형태를 말하며, 경작하는 농지가 소유지이든 차경지이든 문제로 삼지 않는다. 물론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노동력을 빌리지만, 이것은 서로 협조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경영 형태는 병존하면서 대항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소농민경영이 대농경영의 기반으로 대경영에 포섭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두 경영형태의 비중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랐으며, 각각의 경영 모습도 매우 다양하였다.

(1) 대농경영의 여러 모습

① 송 이후 지주제의 전개

송대 농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농업생산관계와 농촌사회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토지 소유자가 출현하고 지주제가 발달하였으

1) 『淸良記』는 南伊予의 三間盆地를 다스리던 무장 土居淸良의 일대기로 당시 南伊予지방의 사회상태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1629-54년 사이에 서술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30권 가운데 제7권이 농업에 대한 서술이다. 7권만을 독립시켜 『親民鑑月集』이라고도 한다. 土居淸良의 자문 요구에 老農 松浦宗案가 농업에 대하여 상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뒤이어 『百姓傳記』(1682), 『會津農書』(1684) 등이 각지에서 저술되었다(飯沼二郎, 『農具』 74-5쪽).

로, 남송대의 토지소유관계의 중심을 지주전호제로 규정하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지주제 내부에서도 부재지주가 등장하였으며, 지주와 직접생산자(전호) 사이의 관계도 선진지역인 강남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경영관계로 변화하고, 전호의 지위가 상승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관계는 이후 명청대의 기본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었다.

전호의 성격에 대하여는 농노로 보는 견해와 자유로운 농민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호를 어떻게 보는가는 송을 중세사회로 보는지, 근세사회로 보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前田直典과 周藤吉之, 仁井田陞 등 일본의 송대 중세봉건제사회론자들은 토지제도와 법제, 신분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송대 생산관계의 기초는 지주전호제이며, 지주의 대토지소유는 장원으로서 幹人(幹僕)을 두어 관리하였고, 경작은 노비와 전호가 담당하였다고 설명하고, 전호를 농노로 규정하였다. 그에 비해 송을 근세사회로 보는 宮崎市定 등의 교토학파는 송의 기본적 사회경제관계를 지주전호제로 파악하지만, 대토지소유는 장원이 아니라 영세한 토지의 집합에 불과하며, 전호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지주와 토지대차계약을 맺고 소작인이 되었고, 전호 가운데는 지위를 상승시켜 지주와 소작인의 중간경영자인 業主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그 경영은 오히려 근세적 자본주의적 경영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지주제의 성격과 전호의 신분적 연속성이 논쟁의 핵심이다. 전호의 연속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나타난 지주가 전호를 교체하는 剗田, 전호의 頑佃抗租, 그리고 명청대 보급된 一田兩主 관행의 맹아로서의 소작권의 존재 등은 전호를 속박된 농노로 볼 수 없게 한다.

실제 송대의 佃作형태는 官莊法, 合種法, 租佃法 등이 있었지만, 관전의 경우 官司는 토지만 제공하고 정액의租를 징수할 뿐 경종의 비용은 일체 전호가 부담하는 조건법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그 다음이 관사와 농민이 토지와 소, 농기구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제공한 바에 따라 수확을 나누는 합종법이었다. 관청이 재산이 없는 유망민을 모집하여 집단적으로 경작하는 관장법은 가장 비중이 낮았다. 민전의 경우에도 비슷하였으며, 합종법은 주로 화북의 발농사지대에서 유행했다. 부재지주는 주로 조건법을 택하였고, 향촌에 거주하는 지주는 합종법(分種制)을 선택하여 전호가 主家 주변에 모여서 거주하였다.

② 고려와 조선전기의 대농경영

한국사에서 대농의 대표적인 현상은 고려후기에 발달한 농장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배층은 대토지를 소유하였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규모나 경영형태 등에 관하여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인 둔전 경영에서 둔전민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일정액의 수확물을 거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유지 경영에서 일종의 전호제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전이 된 사유지를 개간할 경우 개간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수확을 分半하는 관계가 법적으로 공인되었으므로, 일종의 지주전호제가 민전에서 존재하였다.

고려후기의 농장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수조지 탈점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권력형 농장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요인으로 형성된 사적소유지형 농장이다. 후자는 대체로 권력형 농장에 비해 규모가 작았을 것이다. 농장은 여러 곳에 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따라서 부재지주가 많았다.

농장은 대개 노비를 시켜 경작하였다. 농장주가 본래 소유하던 노비도 있었지만, 토지를 겸병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만들어진 노비들도 많았다(歷良爲賤). 이들은 본래 양인이었지만, 농장주의 강압에 의해 혹은 조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토지를 기탁하고 노비로 전락한 농민이었다. 농장주는 莊頭를 두어 농장을 관리하고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경작민으로부터 조용조삼세를 수취하였으며,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농장 안에서 노비농민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권리나 경작 형태는 분명하지 않다.

권력형 농장이 1391년의 사전개혁으로 혁파되었지만 사적 소유지형 농장은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16세기까지 노비를 이용해 농장을 경영하였다. 사유지형 농장의 경영형태를 보여주는 파주의 安牧 농장과 태조가 방우에게 사급한 문서에는 作介制가 존재하였다.

농장 경영에 노비를 이용하였으므로 노비 인구는 고려후기 이래 16세기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전국적인 노비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15세기 말경 ‘노비가 거의 반’이라는(『용재총화』 권9 ;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기해) 서술이나 광해군 6(1614)년의 울산부 호적대장을 분석한 결과 양인이상이 51.4%, 천인이 48.6%(이 중 공천 12.9%, 사천 35.7%)를 차지했다는 연구²⁾를 통해 노비의 비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노비가 많고 대토지경영에 동원된 점은 송, 명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노비 대부분은 호를 구성하고 스스로 재생산활동을 하는 처지였으므로, 노비는 소농민경영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양인농민이 지주의 토지를 차경하는 병작반수제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2) 이수건,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사회의 일연구」 『한국사학』 9, 정문연, 1987, 72쪽

대토지소유자는 자경을 우선하였으며, 자경의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병작제로 경영하였으므로, 조선전기에도 병작제는 보편적인 관행으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병작제가 보편적인 생산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소농민경영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자립재생산이 가능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농의 경우 차경하더라도 농업경영은 主家에 의존하였으므로 주가의 간섭이 심하였다. 병작제는 조선후기에 일반화된다.

③ 장원공령제와 領國經濟 하의 대농경영

일본의 토지소유관계는 독특한 길을 걸었다. 이 시기에 莊園 公領制가 형성되고 율령국가체제가 마비되었으며, 다시 다이묘(大名)의 領國經濟체제로 이행하였다. 그리고 16세기 말은 근세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 그러므로 토지소유관계와 소농의 지위에도 변화가 적지 않았다.

10-12세기 平安시대 중후기에 백성 부호층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간하면서 장원이 급속히 늘어났고, 이때부터 16세기까지 장원과 율령국가시대의 국유지를 계승한 國衙領(公領)이 병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제도를 장원공령제라고 한다.

장원의 영주는 귀족, 사원, 神社, 지방 호족 등이었고, 한 영주의 장원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그 규모는 다양하였다. 개간에 의해 단순한 사유지로 출발한 장원 가운데 불수불입권을 인정받는 것이 생기면서 토지소유권과 다르지 않았던 장원주의 권한은 영주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연공징수권은 징세권으로 변하였다. 한편 지방호족이 장원을 권세가나 寺社에 기진하여 장원이 권문세가에 집중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주에도 本家職과 領家職, 실질상의 영주와 명의상의 영주 같은 복잡한 계층이 생겼다.

장원의 지배조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개 영주와 莊官, 莊民으로 구성되었다. 장원에서는 중앙의 장원영주가 임명한 莊官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고, 國衙領은 國司의 지휘를 받는 郡司나 郷司 등의 公領 영주층이 지배했다. 庄司, 下司, 地頭 등으로 불린 장관은 영주가 파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지 토호가 임명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본래의 개간자로서 토지를 기진하고 장관으로 임명된 자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실력을 인정받고 장관직을 세습하였다. 장관은 소정의 분배를 받거나 일정한 토지(給田)를 용익하였으며, 연공과 公事(곡물 이외의 雜稅)를 면제받았다.

장원의 토지를 경작하고 年貢과 公事, 課役을 납부하는 장민은 백성이었다. 平百姓, 脇百姓, 小百姓, 間人 등으로 불린 백성층은 가옥과 토지를 보유

한 자유민, 소농민이었으며, 그들의 권리는 作手職 百姓職으로 불렸다. 이들 작인층 가운데서는 지주화하여 연공부담자로 상승하는 자도 나타났다.

묘슈(名主)는 영주에게서 장원 구성의 기초단위인 묘덴(名田)의 소유를 인정받은 상층 장민으로, 장관도 대개 유력한 묘슈가 임명되었다. 묘슈는 묘덴의 年貢(1反 당 3-5두) 등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납부하는 책임을 졌고, 자신의 몫으로 가지시(加地子)를 취득하였다. 가지시는 연공에 필적하거나 그것을 상회하였으므로 묘슈는 지주로서의 성격을 가졌고, 그 권리는 상속과 매매가 가능한 사적 권리로 인정받았다.

일반적으로 묘덴은 장원 안에 산재하는 영세농경지의 집합체였다. 묘슈는 下人 從者 등 예속민을 이용하여 묘덴을 직접 경영하거나 다른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였으므로, 묘슈의 경영에는 가부장적 관계가 내포된 동시에 소작관계도 존재하였다(請作). 그런데 점점 후자의 형태가 증대하여 묘슈는 지주적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으며, 무사가 되어 농경에서 벗어나는 신흥 묘슈층도 나타났다.

장원공령제는 무사의 성장과 지배관계의 변화로 인해 쇠퇴하였다. 장원 발달로 율령국가체제가 와해되면서 불안을 느낀 영주들이 군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지방토호 출신의 무사들이 율령귀족인 源씨와 平씨에게 의탁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주종관계가 형성되었다. 가마쿠라막부에서 각국에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슈고(守護)와 장원 및 공령의 토지관리, 조세징수를 담당하는 지토우(地頭)를 배치하자 명령 계통을 달리하는 두 개의 지배권이 하나의 토지와 인민에 미치게 되었다. 지토우가 일종의 조세청부제도(請所制度)를 운영하면서 영주는 장원지배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정액 연공만 받는 존재가 되었다. 반면 지토우와 슈고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었고, 토지관리권과 조세징수권, 토지처분권까지 갖게 된 슈고는 마침내 무로마치시대에 다이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중층적인 토지지배관계는 戰國大名에게 일원화되었고, 장원공령제와 묘덴, 묘슈의 가지시 수취권은 약화 내지 소멸하였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자치촌인 惣村은 행정촌으로 개편되고 자치권은 약화되었다.

최고권력자 쇼군(將軍)은 토지를 직접 지배하지 않고 주로 조세에 의존하였으며, 다이묘 역시 그렇게 되었다. 일반무사는 지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그 토지는 公的인 所領으로 되었고, 마침내는 兵農이 분리되어 主君에게서 녹미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서민은 凡下(하), 지계닌(地下人), 土民으로 불렸으며, 대부분 농민이었다. 田地를 所持한 백성은 請作人이라기보다 지주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轉作(又作)도 단순히 소작으로 불리게 되었다. 大名의 재정이 궁핍하게 되면서 田租率은 전반적으로 높아져, 전국시대에는 70%

이상의 중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戰國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2년부터 1598년까지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가신을 파견하여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太閤檢地), 촌락단위로 모든 토지를 통일적인 도량형과 등급에 따라 조사하고, 직접 경작자를 檢地帳에 등록하였다. 이 조치를 통해 石高制가 성립되고 근세 촌락이 형성되었으며, 소농이 제도적으로 성립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병농이 분리되었으며, 장원공령제가 최종적으로 붕괴되고 惣村제도 빠른 속도로 해체되었다. 근세로의 이행이 시작된 것이다.

(2) 소농민경영의 형성과 성장

소농민경영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으며, 그 존재형태는 역시 다양하였다. 송이나 고려, 조선전기의 농업경영을 대농 위주로 설명하고 그 성격을 지주(전호)제로 규정하는 견해와 달리 당시의 소농민경영을 강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농민 경영이 농업경영에서 중심이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① 송 이후 소농민경영의 추세

송 이래의 토지소유관계의 특징을 지주(전호)제로 규정하면, 소농민경영은 부차적으로 취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가족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민은 송 이래 계속 존속하였다. 더욱이 소농민경영의 범주에 자경지를 소유한 자작소농민 이외에 차경민도 포함시키면, 그 범주와 비중은 훨씬 커진다. 소농민은 낮은 토지생산성, 지주의 검병 위협, 정부의 과도한 수탈로 인해 몰락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상승 자립해 간 사례들도 있다. 소농민층은 몰락과 상승을 계속 반복하였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수의 자작농민층은 항상 유지되었다.

소농민경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작민이었다. 지주제의 내부에 소농민경영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송대의 전호를 농노로 규정하는 연구도 있지만, 자유민으로 규정하는 연구가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송대의 전호는 대부분 독립하여 농지를 경영하는 소농민이었다. 그러한 점은 원, 명대에도 기본적으로 같았다. 물론 지주가 官人이거나 사대부(혹은 紳士)로서 신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전호는 신분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둘 사이에 경제외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면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계약관계였다. 그러므로 지주제의 바탕에는 소농민경영이 자리잡고 있었고, 소농민경영이 지

주체에 포섭된 형태로 존재하였다. 송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농업생산력은 이들 소농민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바탕하여 자작 소농민이나 차경소농민은 자기의 책임 아래 농지를 경영하고, 조세나 지대를 납부하였다.

소농민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화북과 장강삼각주 지역을 연구한 黃宗智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소농경제가 중심이 된 사회였다고 주장한다. 장강삼각주 지역은 관개농업이 지배적이었고, 1인당 곡물생산량도 더 많았으며, 고도로 상업화한 농업경제가 발달하였고, 토지소유의 집중도도 높았는데, 여성과 아동의 보조적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다층적인 노동력 구조를 가진 가정식 농장의 순수익이 경영식 농장보다 높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대와 소작료가 높은 곳에서는 경영식농장이 발달할 수 없었으며, 상품화와 도시화의 진척도 소농가정의 생산을 촉진시킨 반면 경영식농장의 쇠퇴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중요 요인은 중국 소농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 많은 인구였다.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단위로서 가정식농장은 최대이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산을 하였기 때문에 생산성과 관계없이 총생산량을 중시하여 일정한 단위면적에 지속적으로 잉여 노동력을 투입하였고, 그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 소농에서는 'Involution(內卷化, 過密化)'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³⁾

일본의 중국사 연구자들 가운데도 중국 농민농업문제 이해의 중심 기준을 자영농에 의한 소농경영, 정확히는 소경영생산양식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⁴⁾

인구문제를 생각할 때, 중국에서 가족문제와 농업경영의 家庭化는 소농의 생존노력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⁵⁾ 그러나 송대 이후 자영농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경제 선진지대인 강남지역에서 현저하게 발달한 지주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자영농에 의한 소농경영을 기본적 생산관계로 설정한다면 당송변혁 이후의 비약적인 생산력 발달의 계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② 고려와 조선전기의 소농민경영

3) 본래 이 개념은 Clifford가 인도네시아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혁명 전 러시아 소농 경제를 분석한 Chayanov도 가족이 생산단위이나 소비단위이므로 농민들은 노동의 한계생산보다는 평균 순생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의 노동대가가 시장임금의 평균수준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노동집약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는데, 황종지는 이 주장을 수용하여 중국 소농을 설명하였다.

4) 中國史研究會 編, 『中國史像의再構成 : 國家と農民』 文理閣, 1983

5) 인구압력과 경지이용, 경작형태와 생산성을 등을 분석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Kang Chao, *Man and Land in Chinese History : An Economic Analysi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고려와 조선시기 대농경영의 한쪽에는 역시 소농민경영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소농민경영이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에서 기본적인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전시과체제나 과전법체제에서 조세와 力役 부과와 기본 대상은 소경영 농민이었고, 국가의 물질적 기반은 그들에게서 수취하는 조세와 공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농민경영은 시기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소농민경영의 대체적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⁶⁾

고려전기 전시과가 제정되고 제대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소농민의 토지소유와 경영이 그런대로 잘 유지되었으나, 토지소유 규모가 영세한데다가 국가의 수취와 지배층의 수탈로 인하여 소농민경영은 불안정하였다. 후기 농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는 권세자에게 침탈되고 농민이 농장 노비로 전락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권세가의 토지점병은 양반전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였으나, 농민의 토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분급받은 토지라 하더라도 경작자이자 실제 주인은 농민이었으므로, 권세가들이 수조권을 집적하는 와중에 농민은 여러 수조권자(田主)에게 전조를 납부해야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농민 경작자는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권세가의 농장에 투탁하기도 하였다. 국가로부터 사패를 받은 경우에도 그 속에 농민의 토지를 포함시키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이 시기 소농민 경영은 자연히 크게 위축되었다.

조선은 다시 소농민을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삼는 정책을 폈다. 소농민은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고 군역을 부담하여 재정과 국방을 떠받치는 지반이었으며, 국가에 예속된 존재였다. 과전법체제 초기 자영농의 비중은 농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고, 그 기준적인 토지규모는 1-2결 정도였다. 세조 4(1458)년 당시 토지가 없는 농민이 10분의 3이라고 하였으므로,⁷⁾ 대략 70%가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대토지 소유자(지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농민이었을 것이다. 세종 18(1436)년 강원도의 토지소유 규모를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0결 이상 소유자는 15%, 6결 이상은 32.5%이고, 나머지 67.5%는 5결 이하의 소유자였던 데서 농지소유자의 대부분이 자영 소농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自家경영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가족노동에 의하여 그것을 경영하는 자영농이 소규모 개별 경영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당시 소농민의 자립도는 낮았다. 생산력이 낮고 소유 규모가 영세한데다가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확대재생산 기반을 축적하기는 어려웠고, 생계조차 불안정

6) 김태영, 「조선전기 소농민경영의 추이」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8

7)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정월 병자

하였다. 그런 까닭에 소농민경영으로서 자립할 수 없었던 2호 정도의 小戶(狹戶)들이 보다 충실한 생산수단과 생산의 안정성을 가진 主戶에 예속되는 編戶의 경영형태를 취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소농민은 소를 거의 갖지 못하였고, 부족한 농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종법도 시행하였으나, 군역 부담, 조세 수탈, 지배층의 토지집적, 고리대, 흉년 등으로 인해 몰락 위험에 노출된 존재였다. 더욱이 세종 6년 토지매매가 허용되고 15세기 말-16세기로 접어들면서 권세가의 침탈이 가혹해지자 자영농은 토지를 상실하고 流散하거나 권세가에게 예속되는 佃戶로, 신분상으로는 노비로 전락하는 형세가 나타났다. 그 결과 1533년에는 “백성 가운데 전지를 가진 자가 없고, 전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상대고와 사족 가문일 뿐”이라고⁸⁾ 할 정도로 소농민은 몰락하였다. 토지를 집적하면서 지주로 성장한 전형적인 존재는 관인지주였다.

③ 장원공령제와 領國경제체제에서 소농의 성장

일본사에서 소농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는 봉건제 성립과 관련하여, 헤이안시대 말기(12세기)라는 견해, 중세초기(13세기)라는 견해, 그리고 근세초기인 17세기 초기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헤이안시대 말기 견해에서는(戶田芳實 등) 묘슈(名主)는 소농을 예속시킨 가부장제적 농노주이며, 묘슈에 예속되지 않은 소농은 봉건적 예속농민으로 본다. 이들이 묘슈에게 가지시를 납부함으로써 묘슈의 지주화가 진행되었다.

17세기 초 견해는 묘슈에게 종속되었던 비자유민이 성장하여 농노화함으로써 太閤檢地 이후에 봉건제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본격적인 소농의 성장은 이 시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원공령제와 영국경제체제에서 활동한 묘슈를 가부장적 노예소유자로, 그에게 예속된 농민을 노예로 파악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소농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묘슈에게 가지시를 납부한 농민은 독립 가옥을 갖고 독립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묘슈에게 인신적 지배를 받지 않았으며,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가졌다. 묘슈는 下人 등의 비자유민을 별도로 거느렸으며, 백성들에게서는 묘토텐에 부과된 연공과 役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책임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자기몫으로 가지시를 수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묘슈의 가지시 수취는 지대 수취로 간주되었으며, 묘슈의 지주권은 상속되고 매매 양도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묘슈에게

8) 『중종실록』 권75, 중종 28년 7월 을묘

가지시를 납부한 백성은 일종의 佃作 예속농민으로 볼 수 있다.

소농민의 지위는 촌락의 형성과 領國경제체제를 거치면서 점차 상승하였고, 소농민경영은 안정되어 갔다. 가마쿠라막부 말기 이후로 장원공령제와 묘덴이 쇠퇴하고 地頭와 守護가 장원공령의 지배에 개입하면서 토지에 대한 중층적 지배가 확산되자 백성들이 권력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지연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촌락이 형성되었다(惣村). 惣村의 주민은 지배계급인 宮座의 대표들과 일반백성(地下人)으로 나뉘어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묘덴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가 쇠퇴하고 다수의 일반백성이 자립하였다. 그리하여 15세기 이후에는 소농이 주민자치체인 宮座에 참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소농들이 별도의 宮座를 구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소농은 총촌의 구성원으로서 총촌 단위로 영주가 부과하는 연공(地下請)을 납부하였는데, 15세기 중기 이후로 영주 혹은 守護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여 惣村이나 惣村들이 연합하여 봉기하기도 하였다(一揆). 거의 매년 발생한 一揆은 막부 권력을 약화시켰다.

분산되어 있던 토지소유권이 戰國 다이묘에게 귀속되면서 大名領國이 성립하고, 領國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 다이묘의 所領은 점차 백성(농민)의 소유가 되었으며, 백성은 대영주에게 직속되었다. 장원영주의 토지와 인민 지배관계는 소멸하였고, 惣村의 자치권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촌락에서 소농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새로운 묘슈로 등장하는 자도 나타났으며, 농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장원영주제하의 作職에서 소유권에 가까운 것으로 발전하였다. 大正文祿 연간에 시행된 太閤檢地는 중층적인 토지 지배관계를 부정하고 토지 지배관계를 영주의 권리(領知)와 名請農民의 권리(所持)라는 양자관계로 정리함으로써 중세와 근세를 가르는 분수령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 顧菊英·周良霄, 『元史』 上海人民出版社, 2003
- 宮嶋博史, 「東アジア小農社會の形成」 『長期社會變動』 東京大學出版會, 1994
-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08
- 김태영, 「조선전기 소농민경영의 추이」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8
- 潼澤武雄, 『日本の貨幣の歴史』 吉川弘文館, 平成 8년
- 大山喬平, 「莊園制」 『岩波講座 日本通史 7권 中世I』 岩波書店, 1993
- 리보중 지음, 이화승 옮김, 『중국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책세상, 2002
- 服部英雄, 『武士と莊園支配』 山川出版社, 2004
- 三浦圭一, 『日本中世の地域と社會』 思文閣出版, 1993
- 안병우, 「고려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장」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 梁庚堯, 『南宋의 農村經濟』 聯經出版事業公司, 1984
- 오금성, 「明代 양자강 중류 三省地域의 사회변화와 紳士」 『대구사학』 30, 1986
- 오금성, 「중국 근세의 농업과 사회 변화」 『동양사학연구』 41, 1992
-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 위은숙, 『고려후기의 농업경영』 혜안, 1998
-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 1987
- 이경식, 『한국중세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이법학, 「송대의 사회와 경제」 『강좌중국사 III』 지식산업사, 1989
- 이영훈, 「조선 전기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 『한국사 7 : 중세사회의 발전』 한길사, 1994
-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94
-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태학사, 2002
- 이호철, 『조선전기농업경제사』 한길사, 1986
-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편 송완범등 옮김,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 도서출판동아시아, 2005. 全漢昇, 「略論宋代經濟的進步」 『中國經濟史研究(下)』 稻鄉出版社, 1991
- 佐佐木銀弥, 『莊園の商業』 吉川弘文館, 1964
- 中國史研究會 編, 『中國史像の再構成』 文理閣, 1983
- 황명수, 『일본경제사』 교학연구사, 1981
- 張家駒, 『兩宋經濟中心的南移』 湖北人民出版社, 1957
- 荻生茂博, 「日本에 있어서의 新儒敎의 수용과 小農社會의 성립」 『韓國實學研究』 5, 2003
-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동아시아 근세사회의 비교』 혜안, 2006
- 宮嶋博史, 「朝鮮農業史上における十五世紀」 『朝鮮史叢』 3, 1980
- 김용섭, 「前期 農書의 증보와 그 농업사상」 『조선후기농업사연구II』 일조각, 1974
- Huang, The Peasant Family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Yanzi delta: 1350-1988,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長江三角洲的小農家庭與農村發展 1350-1988), 中華書局, 2002)